

계 간 KIPF 재정동향

제2권 제1호(통권 제5호)

2011년 2월

 한국조세연구원

[목차]

제1부 재정정책 동향과 이슈	5
I. 재정정책 동향	7
1. 2010회계연도 총세입부 · 총세출부 마감	7
2. 2011회계연도 계획	10
3. 2012회계연도 예산 편성	14
4. 최근 재정상황	15
II. 이슈 및 분석	18
1. OECD 국가의 재정건전화 정책 / Colin Forthun	18
2. 예산법에 대한 최근 이슈 / Ian Lienert	23
3. OECD 국가들의 발생주의 회계 / Jon Ragnar Blondal	25
4. 유럽의 재정위기 / 이경우 · 이은경	27
III. 국내외 보고서	46
1. 주요 보고서 요약	46
2. 보고서 목록	62

제2부 주요국의 재정동향	77
Ⅰ. 주요국 동향	79
Ⅱ. 미국 (FY2011: 2010.10~2011.9)	81
Ⅲ. 일본 (FY2011: 2011.4~2012.3)	89
Ⅳ. 영국 (FY2010-11: 2010.4~2011.3)	98
Ⅴ. 프랑스 (FY2011: 2011.1~2011.12)	106
Ⅵ. 독일 (FY2011: 2011.1~2011.12)	115
Ⅶ. 캐나다 (FY2010-11: 2010.4~2011.3)	124
Ⅷ. 호주 (FY2010-11: 2010.7~2011.6)	133

제3부 주요국의 재정통계	141
Ⅰ. 미국 (2011년 1월 기준)	143
Ⅱ. 일본 (2010년 12월 기준)	147
Ⅲ. 영국 (2010년 12월 기준)	153
Ⅳ. 프랑스 (2010년 12월 기준)	158
Ⅴ. 독일 (2010년 12월 기준)	162
Ⅵ. 캐나다 (2010년 11월 기준)	166
Ⅶ. 호주 (2010년 12월 기준)	171

제 1 부 재정정책 동향과 이슈

Ⅰ. 재정정책 동향

Ⅱ. 이슈 및 분석

Ⅲ. 국내외 보고서

I

재정정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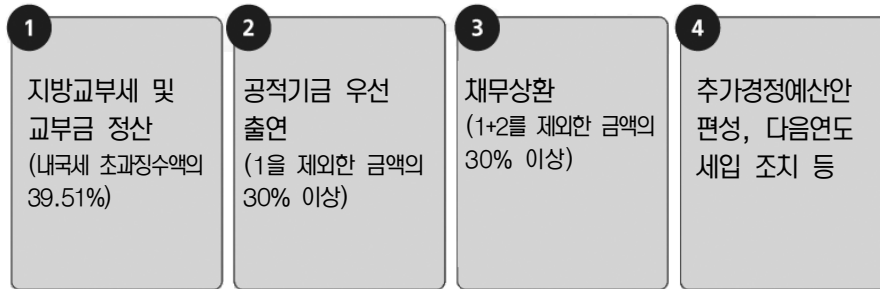
1. 2010회계연도 총세입부 · 총세출부 마감

- 2월 10일, 기획재정부는 2010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여, 지난해 정부 전체의 재정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하였음
- 총세입이 261.2조원, 총세출이 248.7조원으로 결산상잉여금 12.5조원 중 4.7조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총 7.8조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
 - 일반회계의 세입은 205.2조원으로 국세수입 증가 등으로 예산액 201.3조원 대비 3.9조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02.8조원 대비 97.2%인 197.1조원
 - － 예산현액(202.8조원) = 예산액(201.3조원) + 전년도 이월액(1.5조원) 등
 - 특별회계의 세입은 56조원으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 증가 등으로 예산액 54.1조원 대비 1.9조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56.2조원 대비 91.7%인 51.5조원
 - － 예산현액(56.2조원) = 예산액(54.1조원) + 전년도 이월액(1.2조원) + 초과지출승인액(0.3조원) + 예비비 지출결정액(0.6조원)
 - 세계잉여금 7.8조원은 일반회계에서 6조원, 특별회계에서 1.8조원이 발생
 - －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은 추후 정부결산이 완료된 후, 다음과 같이 사용

*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hspark@kipf.re.kr)

SECTION 1 >>

세계잉여금의 처리(국가재정법 제9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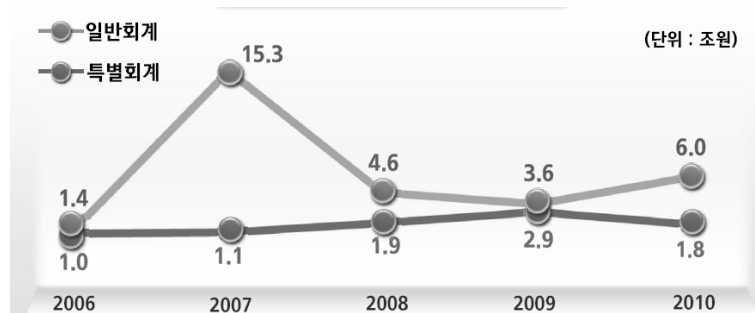
○ 정부는 총세입·세출부가 마감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재정운영 결과를 종합하여 201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할 예정

〈표 1-I-1〉 회계별 세입·세출 집행실적

(단위: 조원)

구분	세입(A)	세출(B)	결산잉여금 (C=A-B)	이월액 (D)	세계잉여금 (C-D)
합 계	261.2	248.7	12.5	4.7	7.8
일반회계	205.2	197.1	8.1	2.1	6.0
특별회계	56.2	51.6	4.4	2.6	1.8

[그림 1-I-1] 연도별 세계잉여금 추이



□ 2010년 국세징수 실적은 177조 7,184억원으로 2009년 실적(164조 5,407억원) 대비 13.2조원(8.0%) 증가, 2010년 예산(170조 4,575억원) 대비로는 7.2조원(4.3%) 초과

- 성장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숨은세원 양성화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에 기인

〈표 1-I-2〉 주요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단위: 조원, %)

구 분	'09실적	'10년		'09 실적대비		'10 예산대비	
		예산	실적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 국 세	164.5	170.5	177.7	13.2	(8.0)	7.2	(4.3)
○ 소 득 세	34.4	37.2	37.5	3.1	(8.8)	0.3	(0.6)
○ 법 인 세	35.3	36.9	37.3	2.0	(5.7)	0.4	(1.1)
○ 상속증여세	2.4	2.7	3.1	0.7	(26.6)	0.4	(13.9)
○ 부가가치세	47.0	47.0	49.1	2.1	(4.5)	2.1	(4.6)
○ 관 세	9.2	9.3	10.7	1.5	(16.3)	1.4	(15.0)

2. 2011회계연도 계획

가. 2011년 예산 국회확정

-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면서 국방 및 민생현안 등에 적극 대처
- 정부안 대비 총수입은 △0.2조원, 총지출은 △0.5조원 감액
- 총수입 : (정부안)314.6 → (최종)314.4조원 (△0.2조원)
 - － 세법개정에 따른 국세수입 △2,108억원 등
 - 총지출 : (정부안)309.6 → (최종)309.1조원 (△0.5조원)
 - － 주요 증감내역 : 국방비(0.1조원), 4대강(△0.2조원), 예비비(△0.1조원) 등
- 국가채무는 △1.3조원(0.1%p), 재정수지는 △0.3조원 개선
- 국가채무(GDP대비) : (정부안)35.2% → (최종)35.1% (△0.1%p)
 - － 일반회계 국채 : (정부안)22.0조원 → (최종)21.0조원 (△1.0조원)
 - 재정수지(GDP대비) : (정부안) △2.0% → (최종) △2.0% (0.0%p)
 - (△25.3조원) (△25.0조원)

〈표 1-I-3〉 2011회계연도 예산 국회 확정

(단위: 조원, %)

	2010년 (A)	2011년		증 감		
		정부안(B)	최종(C)	(C-B)	(C-A)	%
■ 총 수 입	290.8	314.6	314.4	△0.2	23.6	8.1
■ 총 지 출	292.8	309.6	309.1	△0.5	16.2	5.5
■ 재정수지 (관리대상수지)	△30.1	△25.3	△25.0	0.3	5.1	
(GDP대비, %)	(△2.7)	(△2.0)	(△2.0)	(-)	(0.7%p)	
■ 국가채무	407.2	436.8	435.5	△1.3	28.3	6.9
(GDP대비, %)	(36.1)	(35.2)	(35.1)	(△0.1%p)	(△1.0%p)	
■ 일반회계 국채 (순증)	29.3	22.0	21.0	△1.0	△8.3	

〈표 1-I-4〉 분야별 자원배분 변동내역

(조원, %)

구 분	2010년	2011정부안(A)		2011최종(B)		증감 (B-A)
			증가율		증가율	
1. R&D	13.7	14.9	(8.6)	14.9	(8.7)	-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유가완충준비금 제외시)	15.1 (14.4)	15.2 (15.2)	(0.4) (5.2)	15.2 (15.2)	(0.3) (4.8)	-
3. SOC (4대강)	25.1 (3.2)	24.3 (3.3)	(△3.2) (1.9)	24.4 (3.1)	(△2.7) (△4.3)	0.1
4. 농림·수산·식품	17.3	17.7	(2.3)	17.6	(2.2)	-
5. 보건·복지·노동	81.2	86.3	(6.2)	86.4	(6.3)	0.1
6. 교 육 (지방교육교부금)	38.3 (32.3)	41.3 (35.3)	(8.0) (9.3)	41.2 (35.3)	(7.8) (9.2)	△0.1
7. 문화·체육·관광	3.9	4.1	(5.0)	4.2	(7.8)	0.1
8. 환 경	5.4	5.7	(5.0)	5.8	(6.2)	0.1
9. 국 방(일반회계)	29.6	31.3	(5.8)	31.4	(6.2)	0.1
10. 외교·통일	3.3	3.7	(9.0)	3.7	(9.0)	-
11. 공공질서·안전	12.9	13.6	(5.3)	13.7	(5.6)	-
12. 일반공공행정 (지방교부세)	48.7 (27.4)	53.2 (30.2)	(9.3) (10.3)	52.4 (30.2)	(7.5) (10.2)	△0.9
◆ 총 지 출	292.8	309.6	(5.7)	309.1	(5.5)	△0.5

나. 2011회계연도 예산집행계획

□ 정부는 2011년 上底下高의 경기흐름 보완 및 성장회복세 유지를 위해 「상반기 57%의 재정 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체 세출예산의 67%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

○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지원, SOC 계속사업 등 민간체감도가 높고 실집행이 용이한 사업 중심으로 상반기 우선 배정

－ 특히 서해5도 주민지원, 서북도서 전력보강, 구제역 대응 및 가축방역, 일부 서민 생활 지원(경로당 난방비, 취업장려수당·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등), 일부 SOC사업(30대선도 조기집행, 여수세계박람회 연계교통망, 완료사업 조기집행, 기타 계속사업 등) 등 166개 사업(총 1.7조원 규모)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을 통해 조기 착수가 가능토록 함

*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 제도 : 연초 조기집행을 위해 경제정책상 필요한 경우 계약을

위한 공고 등 지출원인행위를 회계연도 개시전에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

- 1.7조원의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은 금융위기시인 2009예산(11.7조원)을 제외하면 역대 가장 큰 규모

○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 직후 매우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던 재정조기집행 정책을 점진적으로 연착륙시키고 있는 상황

- 상반기 예산 배정비율 추이

(‘08예산) 62.4% → (‘09예산) 70.0% → (‘10예산) 69.8% → (‘11예산) 67.0%

〈표 1-I-5〉 정부회계에 대한 2011회계연도 예산배정

구 분	연간	1/4	2/4	3/4	4/4
금 액(억원)	2,640,929	1,053,743	722,203	497,450	367,534
비 율 (%)	100.0	39.9	27.4	18.8	13.9

다. 201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 기획재정부는 1월 말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조기에 마련하여 각 부처에 통보

○ 재정 조기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재정낭비를 방지

- 경기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서민생활안정, 대규모 SOC 사업을 별도로 중점 관리하고, 지자체보조·출연사업 등은 최종수요자 기준으로 실집행실적에 대한 관리를 강화

- 외화예산, 복지급여 등은 조기집행을 지양하고, 각 부처별로 예산낭비 개선실적을 분기별로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에 보고토록 함

* 2011년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 : 57%

○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세외수입 등에 대한 수입관리 지침을 신설

- 유가증권 매각, 미수납채권, 국유재산관리수입, 정부배당 수입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
- 자금운용기관 분산, 금융상품 다원화, 연기금 투자폴 활용 등을 통해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

- 예산절감 및 집행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 － 각 부처의 자율적인 집행 효율화를 위해 ‘예산집행심의회’를 구성·운영
 - － 보조사업 공모시 민간위원이 2인 이상 포함된 ‘보조사업자 선정 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보조금 정산기한 설정, 관련 자료의 5년간 보관의무 부과 등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
 - － 국내항공 이용시 저가 항공사(Low-Cost Carrier) 이용 권장
 - － R&D 및 정보화 예산의 장비구입 집행 효율화
 - － 정보화 예산의 낙찰차액 사용범위 확대 등 집행탄력성 부여
- 에너지 절약 적극 추진
 - － 에너지 절약 투자계획 수립·시행
 - － 에너지 고효율 사무 환경 구축 및 청사 관리
 - －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에너지 절약형 제품 우선 구매

3. 2012회계연도 예산 편성

□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착수

○ 각 부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난 1월 31일까지 향후 5개년(2011~2015) 동안의 중기 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 전 부처 중기 요구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7.4%로,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연평균 4.8%)의 1.5배 수준

－ 부처 요구 반영시, 2013~2014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 곤란

* 재정수지: (당초) 2013~2014년 균형 달성 → (요구 반영) 2014년 적자 지속

* 국가채무: (당초) 2014년 30%대 초반 → (요구 반영) 2014년 30%대 중반

〈표 1-I-6〉 2011~2015 중기 요구현황

(단위: 조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 2011~2015 요구 (A)	—	309.1	351.3	370.7	391.8	411.7	7.4%
■ 2010~2014 계획 (B)	292.8	309.1	324.8	337.7	353.0	—	4.8%
계획대비 추가요구(A-B)	—	0.0	+26.5	+33.0	+38.8	—	2.6%p

□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재정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종의 원칙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나갈 계획

○ 이를 위한 첫 단계로 각 부처의 중기 투자방향 및 적정 투자규모, 핵심 정책이슈 등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9일간(2. 14~24일) 개최

○ 특히, 이번 토론회는 기획재정부가 주요 부처를 “직접 찾아가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

□ 기획재정부는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각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도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 및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착수하게 됨

4. 최근 재정상황

〈표 1-I-7〉 통합재정 추이(월별 누계 기준)

(단위: 십억원)

		수입			지출 및 순융자				통합 재정 수지	관리 대상 수지
		소계	경상 수입	자본 수입	소계	경상 지출	자본 지출	순융자		
2004년		178,760	177,432	1,329	173,538	145,148	26,992	1,398	5,222	-3,959
2005년		191,488	190,206	1,281	186,398	158,721	24,649	3,028	5,090	-6,521
2006년		209,573	208,091	1,482	205,928	173,688	26,493	5,746	3,646	-10,784
2007년		243,633	241,693	1,940	209,810	169,658	33,045	7,107	33,823	3,577
2008년		250,713	248,809	1,904	238,834	196,879	36,475	5,480	11,880	-15,631
2009년	본예산	263,984	262,171	1,813	257,536	206,582	42,096	8,858	6,449	-24,765
	추경	253,911	251,822	2,088	275,898	211,488	45,011	19,398	-21,987	-51,044
	1월	23,367	23,314	52	31,908	22,721	5,958	3,228	-8,541	-9,457
	2월	35,563	35,271	291	55,202	41,270	9,465	4,466	-19,638	-21,190
	3월	68,582	68,156	427	81,007	62,363	13,832	4,812	-12,425	-21,940
	4월	96,967	96,284	682	107,021	83,069	18,156	5,797	-10,055	-21,209
	5월	108,420	107,161	1,259	128,690	99,470	21,303	7,917	-20,271	-33,436
	6월	133,237	131,538	1,700	161,193	123,570	28,048	9,575	-27,955	-42,659
	7월	159,728	157,923	1,805	177,385	136,729	30,647	10,008	-17,657	-34,544
	8월	175,113	173,233	1,880	191,454	149,225	32,114	10,114	-16,341	-35,304
	9월	196,185	194,135	2,050	221,876	174,632	36,273	10,971	-25,690	-47,906
	10월	217,503	215,352	2,151	234,112	184,569	37,765	11,778	-16,609	-40,544
	11월	235,887	233,549	2,338	245,971	193,911	39,655	12,406	-10,083	-36,208
	12월	255,252	252,720	2,532	272,873	209,689	45,134	18,049	-17,620	-43,250
2010년	본예산	262,263	258,714	3,548	264,278	212,396	45,933	5,948	-2,015	-30,100
	1월	25,002	24,946	56	22,694	18,952	2,452	1,290	2,308	466
	2월	39,849	39,651	199	49,312	38,478	8,063	2,771	-9,462	-12,470
	3월	77,599	77,258	340	84,619	68,298	13,728	2,593	-7,020	-19,513
	4월	109,371	108,211	1,160	108,643	87,453	17,387	3,803	728	-13,635
	5월	128,157	126,755	1,402	128,493	103,611	20,575	4,307	-337	-16,804
	6월	143,273	141,671	1,602	154,675	122,232	27,485	4,958	-11,402	-29,449
	7월	166,720	165,053	1,668	168,866	140,848	23,259	4,759	-2,146	-20,927
	8월	188,066	186,265	1,802	181,825	153,054	24,497	4,274	6,241	-14,507
	9월	209,255	207,322	1,933	202,241	172,532	26,274	3,435	7,014	-16,502
	10월	232,121	230,145	1,976	216,598	185,145	27,912	3,541	15,523	-9,879
	11월	252,599	250,445	2,155	230,798	197,826	29,432	3,539	21,802	-6,169
11월진도비		96.3%	96.8%	60.7%	87.3%	93.1%	64.1%	59.5%	-	-
(전년도)		(92.9%)	(92.7%)	(112.0%)	(89.2%)	(91.7%)	(88.1%)	(64.0%)	-	-
(5년 평균)		(93.6%)	(93.6%)	(95.4%)	(88.6%)	(90.7%)	(81.5%)	(76.1%)	-	-

- **(국가채무 통계)** 지난해 10월 정부발표에 따르면 2010년말 국가채무는 400.4조원(GDP 대비 34.7%)으로 2009년 말 대비 40.8조원(GDP 대비 0.9%p) 증가할 전망
- 이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채 발행 증대에 주로 기인
 - 2010년 예산(407.2조원) 대비로는 6.8조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환율안정으로 인한 외평채 감소 및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차입한 국가장학기금의 차입금이 국가채무에서 제외됨에 따른 국내차입금 감소 등이 주된 요인
 - 한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년에 최고수준 도달 후 2012년부터 하락하여, 2014년에는 492.2조원(GDP 대비 31.8%)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될 전망

〈표 1-I-8〉 국가채무 현황 및 전망

(단위: 연말기준, 조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결산	추경	결산	예산	전망	예산 안	중기 계획	중기 계획	중기 계획
국가채무 총계 (GDP 대비, %)	309.0 (30.1)	366.0 (35.6)	359.6 (33.8)	407.2 (36.1)	400.4 (34.7)	436.8 (35.2)	468.1 (35.1)	485.7 (33.8)	492.2 (31.8)
중앙정부	297.9	355.3	346.1	394.6	381.4	418.7	450.1	468.2	475.7
○ 국채	289.4	345.4	337.5	382.3	374.5	412.6	444.9	463.8	471.7
- 국고채	239.3	282.9	280.9	318.0	315.1	352.6	382.9	400.6	409.0
- 국민주택채권	44.9	48.9	48.3	50.1	48.7	48.2	49.1	50.3	51.5
- 외국환평형채권	5.2	13.6	8.3	14.2	10.6	11.8	13.0	13.0	11.2
○ 차입금	5.3	6.5	5.4	8.5	3.6	3.0	2.3	1.6	1.4
○ 국고채무부담행위	3.2	3.4	3.2	3.8	3.3	3.1	2.9	2.7	2.6
지방정부순채무	11.1	10.7	13.5	12.6	19.0	18.2	18.0	17.5	16.5

출처: 2009는 국가결산(2010년 4월), 2011은 정부예산안, 2010년 전망 및 2012~2014년은 국가채무관리계획(2010년 10월)

- **(국가보증채무 통계)** 지난해 10월 정부발표에 따르면 2010년 8월말 현재 보증채무 규모는 32.4조원(GDP대비 2.8%)
- 외환위기 당시 발행한 예금보험기금채권(이하 '예보채')의 원활한 상환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이하 '예보채상환기금채권') 보증잔액은 24.8조원으로 보증채무의 대부분을 차지
 - 2009년 신규로 보증을 개시한 구조조정기금채권의 보증잔액은 3.5조원이며, 장학재

단채권의 보증잔액은 2.5조원

- 이미 보증사업이 완료된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2009년 완료)의 보증잔액은 1.5조 원이며, 수리자금(1988년 완료)의 보증잔액은 0.1조원
- 한편, GDP 대비 보증채무 비율은 2011년말 3.3%까지 높아졌다가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말에 GDP대비 2.3% 수준이 될 전망

〈표 1-I-9〉 국가보증채무 현황 및 전망

(단위: 연말기준, 조원)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8 월	'10년 전망	'11년 계획	'12년 계획	'13년 계획	'14년 계획
■ 보증채무	55.0	36.5	33.1	28.1	29.8	32.4	34.9	41.3	42.5	38.6	35.4
(GDP 대비 %)	(6.4)	(4.0)	(3.4)	(2.7)	(2.8)	(2.8)	(3.0)	(3.3)	(3.2)	(2.7)	(2.3)
－ 예보채상환기금채권	50.5	34.0	30.6	28.0	27.3	24.8 ¹⁾	26.1	23.9	22.1	17.2	14.3
－ 구조조정기금채권	－	－	－	－	0.8	3.5 ²⁾	4.3	9.3	8.8	5.3	－
－ 한국장학재단채권	－	－	－	－	－	2.5 ³⁾	2.9	6.8	11.5	16.0	21.0
－ 국내은행 외화표시채무	－	－	－	－	1.5 ⁴⁾	1.5 ⁵⁾	1.5 ³⁾	1.2 ²⁾	－	－	－
－ 수리자금	0.2	0.2	0.2	0.15	0.1	0.1	0.1	0.1	0.1	0.1	0.1
－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4.0	2.3	2.3	－	－	－	－	－	－	－	－
－ 일본수출입은행 차관	0.3	0.1	0.03	－	－	－	－	－	－	－	－
※ 산업은행 외화표시채무 ⁶⁾	－	－	－	－	－	－	－	－	(21.8)	(21.8)	(21.8)

주: 1) 예보채상환기금채권 : '10년 보증한도 8.4조원, '10년 발행실적(8월말 현재) 3.7조원

2) 구조조정기금채권 : '10년 발행한도('10년도 기금운용계획) 10조원, '10년 발행실적(8월말 현재) 2.7조원

3) 한국장학재단채권 : '10년 보증한도 9.0조원, '10년 발행실적(8월말 현재) 2.5조원

4) 12.8억달러, '09년말 매매기준율 1,167.6원 적용

5) 12.8억달러, '10년 예산편성 기준 환율 1,150원 적용

6) '11년에 산업은행 민영화계획을 마련하여 '12~'13년중 산업은행 민영화에 따른 산은금융지주의 주식매각이 예상됨에 따라, 산업은행 중장기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신규보증 발생 전망(【참고 4】 참조) (잠정 보증대상규모 : '09년말 잔액규모(186.5억달러) 및 '09년말 매매기준율(1,167.6원) 적용)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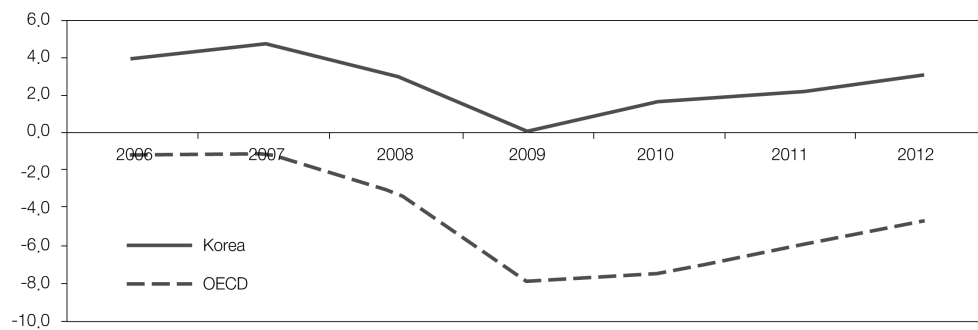
이슈 및 분석

1. OECD 국가의 재정건전화 정책¹⁾

가. OECD 국가들의 재정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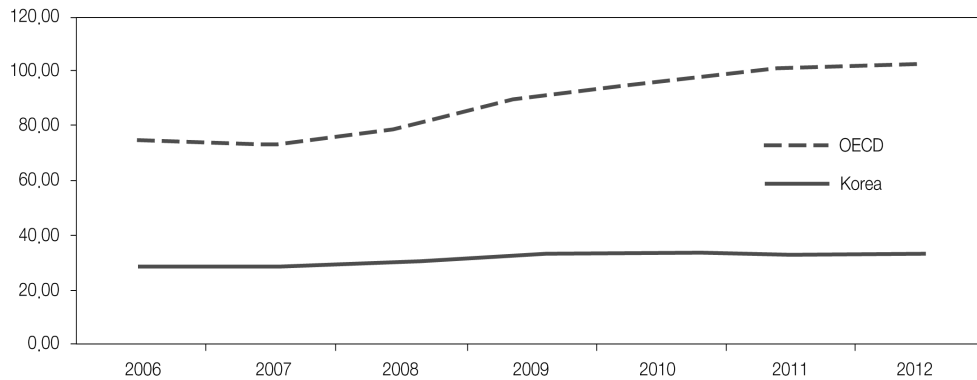
- OECD 국가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재정적자 및 국가 부채가 크게 증가하였음
- 그러나 한국의 경우, 2009년 일시적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으나 바로 회복되어 비교적 양호한 재정 상황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1-Ⅱ-1] 일반정부 재정수지 2006-2012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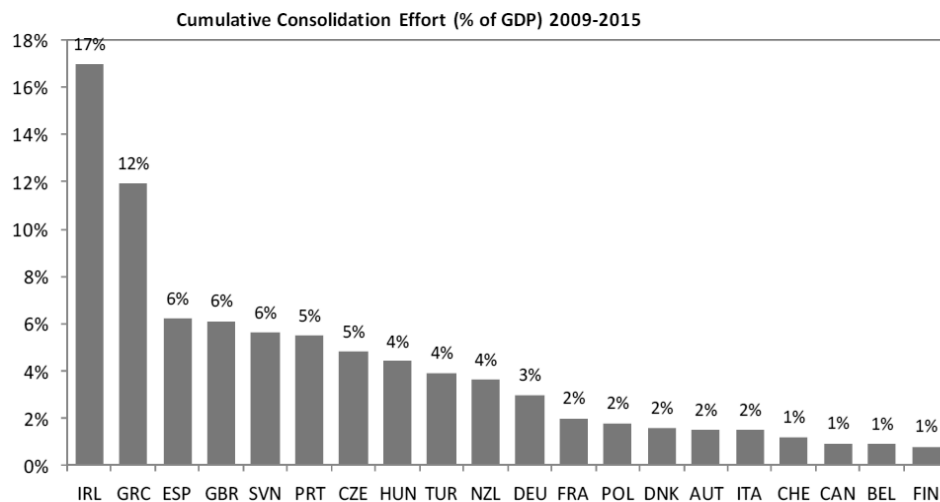
1) Colin Forthun, OECD Budgeting and Public Expenditure Division
 본고는 2010년 12월 9일 서울에서 개최된 Fiscal Expert Forum의 발표자료를 한글로 번역한 것임.

[그림 1-Ⅱ-2] 일반정부 부채 비율 (GDP 대비 %)



- 재정적자가 큰 국가일수록, 재정적자 규모 감축을 위해 대대적인 재정건전화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소국들은 GDP 대비 10% 이상이나 되는 재정적자를 감축해야 함
 -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은 2009년 재정적자가 8~16%였는데 2012-2014년 사이에 안정과 성장을 위한 협약(SPG)의 규정대로 3%대로 감축하려고 노력

[그림 1-Ⅱ-3] 재정적자 감축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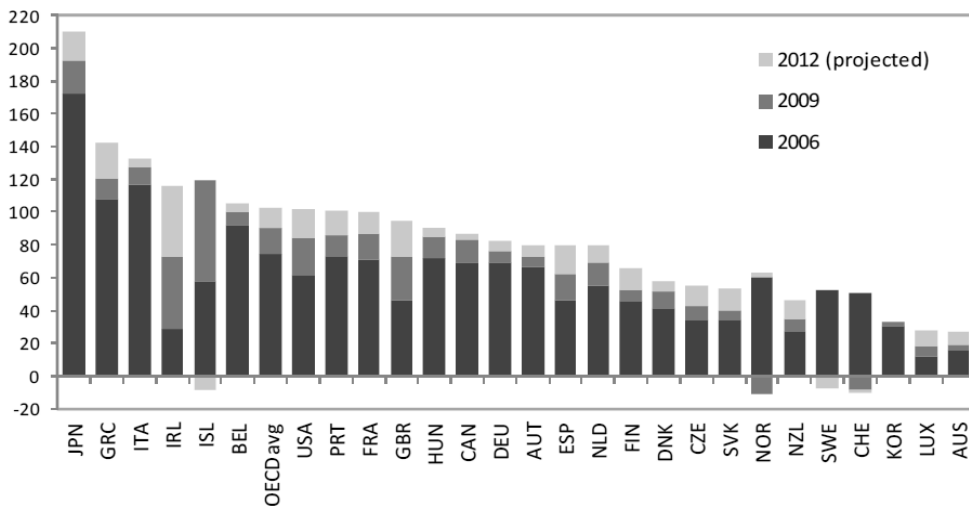


Source: OECD Fiscal Consolidation Survey 2010

SECTION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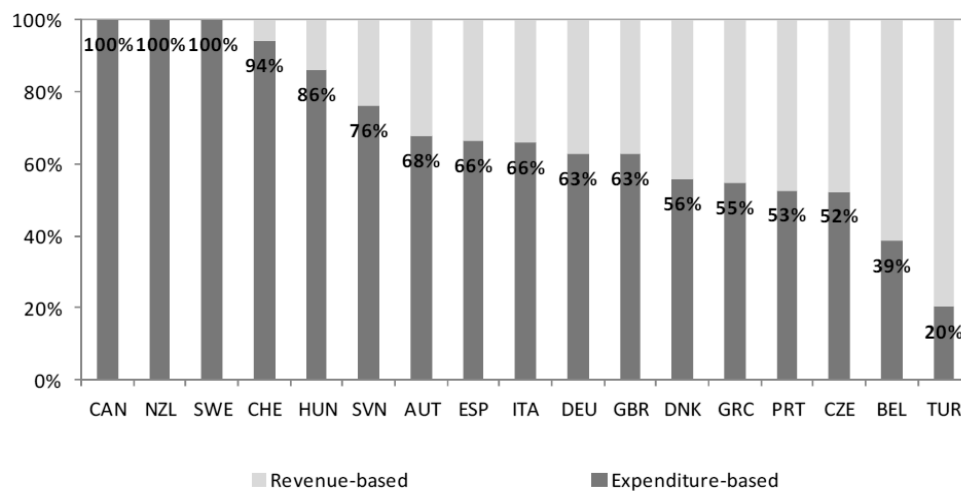
□ 그러나 국가부채는 여전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

[그림 1-Ⅱ-4] OECD 국가들의 총부채 (GDP 대비 %)



□ 재정건전화 방식에 있어서 2009-2011년에 이어 2012-2015년에도 정책을 조기에 시행 (frontloading)하고 지출감축 정책이 대부분을 차지

[그림 1-Ⅱ-5] 세입증대 대비 지출감축 건전화 방식



Source: OECD Fiscal Consolidation Survey 2010

나. 재정건전화 정책

□ 지출감축정책

① 행정비용 감축

- 운영비 감소, 인건비 삭감, 인력 감축, 정부 운영 효율화 등

〈표 1-Ⅱ-1〉 OECD 국가들의 인력감축 정책

국가	인력 감축
오스트리아	- 2014년까지 3000명의 연방정부 공무원 감원
체코	- 교사를 제외한 공공부문 인력 10% 감원
프랑스	- 퇴직 공무원 2명당 신입채용 1명으로 97,000명 감원
독일	- 2014년까지 연방정부 공공부문 10,000명 감원
그리스	- 퇴직자의 20%만 신규채용
아일랜드	- 2014년까지 공공부문 24,750명 감원
포르투갈	- 공무원 신규채용 동결
슬로베니아	- 2010~2011년까지 공공부문 근로자의 1% 감원
스페인	- 의료/교육 부문을 제외하고는 공석의 10%만 대체인력 배치
영국	- 2014년까지 공공부문 490,000명 감원

출처: OECD Fiscal Consolidation Survey 2010

〈표 1-Ⅱ-2〉 OECD 국가들의 인건비 삭감 정책

국가	인건비 삭감
벨기에	- 인건비 0.7% 절약
체코	- 교사를 제외한 공공부문 10% 인건비 삭감
프랑스	- 2011년 공공부문 임금 동결
그리스	- 2014년까지 공공부문 임금동결 - 2010년 보조급여 20% 삭감 - 월급 3000유로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보너스 폐지(14%)
아일랜드	- 2009~2010년 공공부문 임금 15% 삭감 - 2011~2014년 더 큰 임금삭감이 있을 예정
포르투갈	- 임금삭감 GDP 대비 0.11%(2010년)에서 0.84%로 증가(2013년)
슬로베니아	- 임금 및 공공부문 중간재 소비 14% 삭감
슬로바키아	- 평균 14% 임금 삭감, 고위층 공무원 임금 26%까지 삭감
스페인	- 2010년 5% 임금 삭감 - 2011년 임금 동결
영국	- 2년간 임금 동결

출처: OECD Fiscal Consolidation Survey 2010

② 프로그램별 지출 감축 정책

- 복지, 의료, 연금, 인프라, 국방, 지방정부, 교육 등에서 프로그램 지출 축소 정책을 취함
- 복지에서는 실업급여, 아동급여, 구직활동 보조 등을 줄이고, 연금에서는 연금수령연령 상향조정, 연금혜택 축소, 조기 퇴직 방지 노력 등을 들 수 있음

③ 그러나 복지, 교육, R&D, 인프라,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 의료 등에 있어서는 지출 삭감에 신중을 기하였음

□ 세입증대정책

- 소비세 인상, 소득세 인상, 세출 감소, 조세순응도 증가, 비과세 수입 증대, 재산세 증대 등의 방안을 시행
 - 소비세로는 담배 및 주세 인상, VAT 인상, 환경세 부과, 기타 소비세 부과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소득세로는 은행세, 개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법인세 인상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 재정제도 개혁으로 ① 재정준칙 도입 (부채, 지출, 재정적자, 지방정부에 대한 준칙 도입), ② 지출 검토, ③ 중기 지출계획 수립, ④ 기타 예산 제도 개혁, ⑤ 재정위원회 설립, ⑥ 중기 재정목표 설정, ⑦ PAYGO 원칙 도입 등을 시행하고 있음

2. 예산법에 대한 최근 이슈²⁾

□ 예산법의 목표

- ① 명확성: 법적 · 행정적 측면으로 구분
- ② 예산수립 및 재원운영에 있어 주요 결정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함
- ③ 예산과정에 있어 예산규율과 절차를 명시하고, 그 규율들에 대해 강제성이 있음을 확신해야 함
- ④ 예산의 원칙들을 법으로 재정립
- ⑤ 예산제도에 대한 헌법적 필수조건을 명시
- ⑥ 예산제도 개혁
- ⑦ 거시-재정 안정성에 기여
- ⑧ 예산의 투명성, 책임성 및 성과 향상

□ 예산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재정원칙

- 법적, 행정적 권위
- 전통적인 원칙: 단년 기준, 포괄성,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고려, 지출의 구체성, 균형 재정
- 현대적 원칙: 책임성, 투명성, 안정성, 성과

□ 예산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모델

- 영국은 유일하게 불문법에 기반한 국가로 여러개의 예산법이 존재함
- 성문법에 기반한 국가 중 미국은 여러개의 예산 관련 법이 존재하는 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한 개 혹은 소수의 예산법을 운용하고 있음

□ 의회는 예산법을 채택하고, 행정부는 예산규칙을 채택함

- 의회는 단년도 예산안을 승인하고, 집행과정을 모니터하며, 추후 독립된 감사기관으

2) Ian Lienert, Specialist in Public Financial Management

본고는 2010년 12월 9일 서울에서 개최된 Fiscal Expert Forum의 발표자료를 한글로 번역한 것임

로부터 결산보고서를 받음

○ 행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

□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명확하고, 현대적이며, 포괄적인 예산법(Budget System Law, BSL)을 운용하고 있음

○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예산법을 수립하지 않은 두 국가임

○ 많은 OECD 국가들은 예산개혁을 위해 법을 개정하지는 않음

○ 따라서 재정건전화도 예산법의 개정 없이 수행할 수 있으나, 중기전략을 담은 법 혹은 재정책임법을 수립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구체적인 수치 제시는 오히려 해가 됨)

○ 몇몇 국가들은 법을 도입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성과를 개선하려고 하고, 또 다른 국가들은 성과평가 시스템이 도입된 후에 법을 채택함

3. OECD 국가들의 발생주의 회계³⁾

-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회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현금주의 회계는 자금이 이동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발생주의 회계는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함
 - 연금, 퇴직자 의료혜택, 채무 이자, 자본지출 및 감가상각 등 계산시 차이 발생
 - 발생주의 회계는 주로 결산에 적용되고 예산에는 적용되지 않는 편, 민간부문의 회계 방식에 기초
 - 발생주의 예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따라야 함
- 발생주의 예산은 1989년 뉴질랜드가 최초로 시행하였고 1990년대에는 극렬한 찬반토론이 진행되다가 2000년대 초반에 와서 많은 국가들의 동의를 얻음
 - 현재는 뉴질랜드, 호주, 영국만이 완전한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고려중
 - 호주는 현금주의 예산제도로 복귀하려 하고 있음
-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는 이유
 - 정책결정자에게 개선된 비용 정보 제공: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현금비용 뿐만아니라 총비용 정보 제공
 - 예산집행에서 개선된 규율 및 책임성 부여: 총비용이 발생시 이미 반영됨
 - 총체적인 대차대조표를 볼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음: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 등은 제외
-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
 - 정치인 및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움: 발생주의 예산을 채택하고 있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3국은 의회내각제로 예산에 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
 - 조작이 쉬움: 감가상각과 같이 금전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작의 여

3) Jon Ragnar Blondal, Head of OECD Budget and Public Expenditure

본고는 2010년 12월 9일 서울에서 개최된 Fiscal Expert Forum의 발표자료를 한글로 번역한 것임.

지가 있고, 이는 재정규율을 해칠 수 있음

□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

- 거래 인식 시점: 유산, 국방제도, 인프라, 사회보험 프로그램 등
- 평가 문제: 역사적 비용 vs. 현재 시장 비용
- 회계 기준 설정: 두가지 모델(민간과 공공부문에 대해 단일 기준 적용, 재정부에 대한 별도의 자문그룹 이용), 국제 공공부문 회계기준 위원회(IPSASB) 고려
- 자산의 등록: 국가들은 최신 자산 목록(토지, 공장, 기구 등)이 없으므로 이를 작성하려면 많은 시간 소모
- 개시대차대조표 상의 가치 설정: 한번 설정되면 바꾸기 어려우므로 최적값으로 설정, 자산이 많은 부처는 감가상각을 통해 초과지출 승인액을 확보할 수 있고, 자산이 적은 부처는 지속적인 자원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비현금 항목에 대한 전용 문제: 현금충당 모델(총비용에 대한 현금 충당, 정부기관의 권한 증가), 현금 비충당 모델(현금비용에 대해서만 현금 충당, 비현금 비용에 대해서는 명목적인 미수금 처리, 통제위험 감소)
- 현금 관리: 현금충당모델과 같이 비현금 항목에 대해 현금 전용이 발생하면 두 가지 옵션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옵션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부처에 현금을 배분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옵션은 부처가 비현금 항목에 대해서도 계정에 현금을 받는 방식임
- 자본자산 획득의 통제: 감가상각 축적시 해당 부처는 그 만큼에 해당하는 미래 자본 비용 지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결정, 부처, 재무부, 의회의 역할분담 이슈
- 회계기술의 업그레이드: 발생주의 예산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회계기술이 요구됨. 내부 교육과 외부 인재채용이 필요, 회계기술에 과잉투자 문제

4. 유럽의 재정위기*

가. 위기의 전개

-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PIIGS 5개국(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을 중심으로 유럽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2010년 5월 및 11월에 그리스와 아일랜드가 IMF/EU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였음

〈표 1-Ⅱ-3〉 PIIGS 국가들의 2009년 재정수지 및 국가부채 (GDP 대비 %)

2009년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재정수지	△9.3	△5.3	△14.4	△15.4	△11.1
국가부채	76.1	116.0	65.5	126.8	53.2

출처: Eurostat (2010년 12월 2일 업데이트)

- 이 중 그리스가 가장 먼저 구제금융을 신청, IMF와 EU로부터 3년에 걸쳐 1,100억유로를 제공받으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 시작 (2010년 5월 2일)
 - － 재정적자 2009년 13.6% → 2014년 3% 수준으로 감소 목표
 - － 정부지출 감소: 연금과 임금 3년간 동결, 성탄 및 부활절, 여름휴가 보너스 폐지 등을 통해 2013년까지 GDP 대비 5.25% 감소
 - － 정부수입 증대: 부가가치세 인상, 사치재 및 담배, 술 등에 세금 인상을 통해 2013년까지 GDP 대비 4% 인상
 - － 세금 탈루 및 회피 감소(특히 고소득층), 예산 통제 강화 등 구조 개혁으로부터 GDP 대비 1.8% 수입 개선
 - － 금융권 안정: 금융안정펀드를 설립해서 은행 자산의 안정화
 - － 의무지출 감축: 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사회보장 혜택 축소
 - － 연금개혁: 조기 퇴직시 제공하는 혜택 감소
 - － 구조 개혁(행정 현대화, 기업환경개선 등) 및 국방비용 감축
- 구제금융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던 아일랜드도 2010년 11월 26일 결국 IMF/EU에

* 이은경 부연구위원(eklee@kipf.re.kr)과 이경우 부연구위원(kwlee@kipf.re.kr)이 공동 집필

SECTION 1 >>

850억유로 구제금융을 신청하였고, 다음으로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재정위험에 봉착해 있다는 위기의식 확산

- 지난 11월말, IMF/EU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일랜드는 은행 부문에 대한 구제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재정적자가 32.3%에 이를 전망이고, 부채수준도 GDP 대비 118.9%로 2009년 65.5%에 비해 크게 증가

○ 2010년 유럽국가들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수치도 더욱 악화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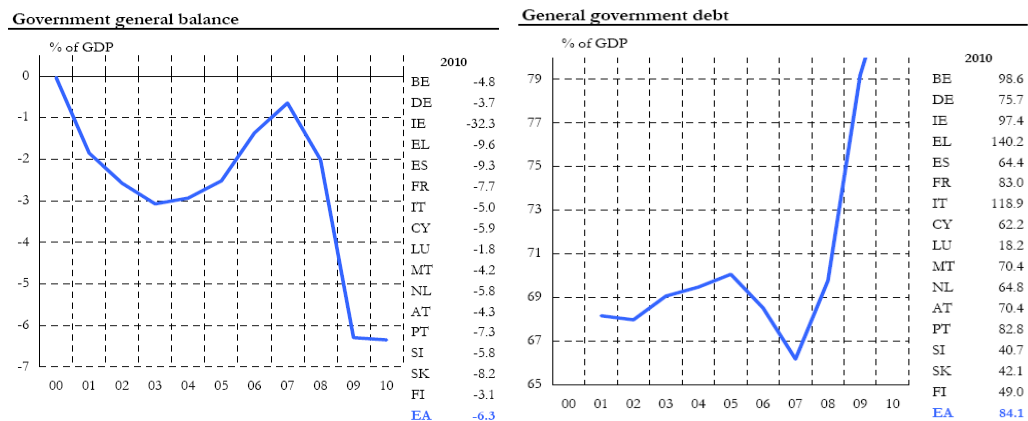
- 2010년 유럽 평균 재정적자는 GDP 대비 6.3%, 정부부채는 84.1%로 증가 전망
- 그리스는 강도 높은 재정적자 감축 노력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가 2009년 15.4%에서 2010년 9.6%로 크게 감소할 전망이나,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각각 9.3%, 7.3%로 소폭 감소

〈표 1-Ⅱ-4〉 2010년 PIIGS 국가들의 재정수지 및 국가부채 (GDP 대비 %)

2010년 전망치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재정수지	△7.3	△5.0	△32.3	△9.6	△9.3
국가부채	82.8	118.9	97.4	140.2	64.4

출처: EC, Key indicators for the euro area (2010.12.2 업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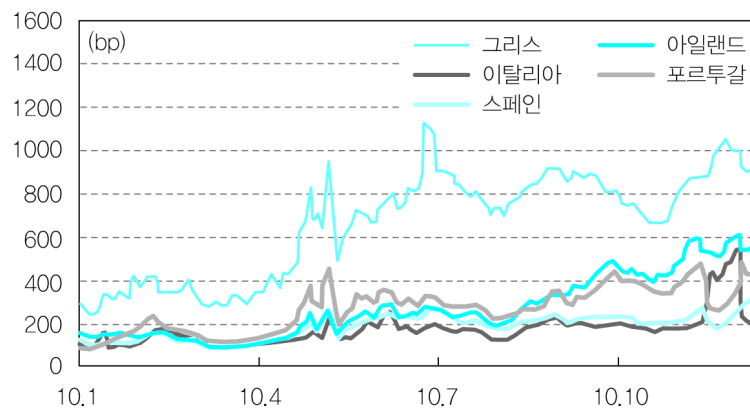
[그림 1-Ⅱ-6] 유럽 국가들의 2010년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GDP 대비 %)



출처: EC, Key indicators for the euro area (2010.12.2 업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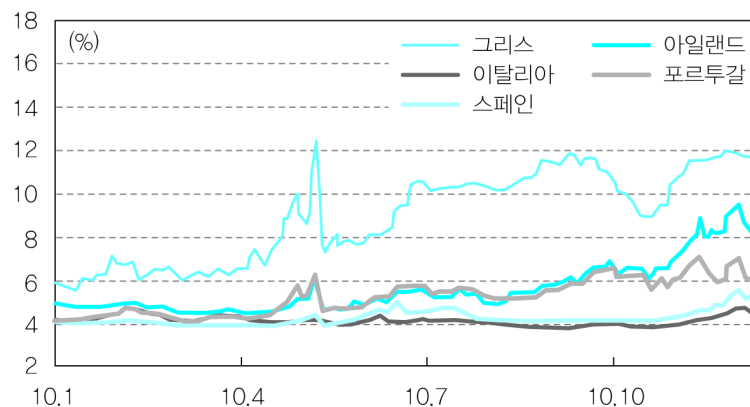
- 그리스 및 아일랜드의 재정위기가 다른 국가에 전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은 크게 불안해 하고 국가채무 위험이 증가하였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한 CDS(credit default swaps) 프리미엄(국가의 대외신용도 혹은 국채의 부도가능성 지표)이 2010년 중에도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임
- 독일 국채 대비 PIIGS 국가들의 국채 프리미엄도 큰 폭으로 상승, 2010년 10월경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프리미엄 상승이 독보적으로 높음

[그림 1-Ⅱ-7] 2010년 PIIGS 국가들의 CDS 프리미엄 (5년물)



출처: 기획재정부, 2011년 경제전망 (원자료: Bloomberg)

[그림 1-Ⅱ-8] 2010년 PIIGS 국가들의 국채금리 (10년물)



출처: 기획재정부, 2011년 경제전망 (원자료: Bloomberg)

- 문제는 그리스, 아일랜드와 같이 비교적 소규모 경제에서 시작한 재정위기가 스페인, 포르투갈을 비롯하여 이탈리아, 벨기에 등 유럽 전체에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음
- 2010년 PIIGS 국가들은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대대적인 재정건전화 정책을 발표하고는 있으나, 정치권과 국민들이 심한 반발을 표출하고, 금융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해 재정위험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 또한 유럽국가들의 재정 위험이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으며, 유로화의 평가절하(달러의 평가절상으로 미국의 수출시장에 적신호)를 초래하는 등 세계적 금융위기로 확산될 우려 존재

나. 위기에 대한 원인 및 대응

- (EU차원) 유로화를 사용하는 16개 회원국은 유럽재정안정화기구(EFSF,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를 설립(2010.6.7)하여 재정위기를 겪는 회원국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공급
 - 2010년 11월 28일, 85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일랜드에 EFSF는 2011-2012년에 177억유로 공급 합의 (EU와 IMF는 각각 225억유로 제공)
 - * EFSF는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 EFSM(European Financial Stability Mechanism) 및 IMF와 함께 재정위기에 빠진 회원국에게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 리스본조약의 제약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기구. 유로화를 사용하는 16개국이 2010년 5월 9일 룩셈부르크에 설립 합의, 2013년 6월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 채권은 회원국의 지급보증을 받아 4400억유로까지 채원조달이 가능하며, 출자비중은 ECB 지분 비율대로 적용
-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EFSF가 만료되는 2013년 중반부터 재정위기를 겪는 회원국들에게 구제금융 제공을 위해 영구적인 유럽안정화기구(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창설에 합의 (2010.11.28)
 - 현재 리스본조약하에서는 EU 차원의 구제금융 시스템을 상설화할 수 없기 때문에 ESM을 출범하려면 조약 개정이 필요, 이를 위해서는 EU 및 각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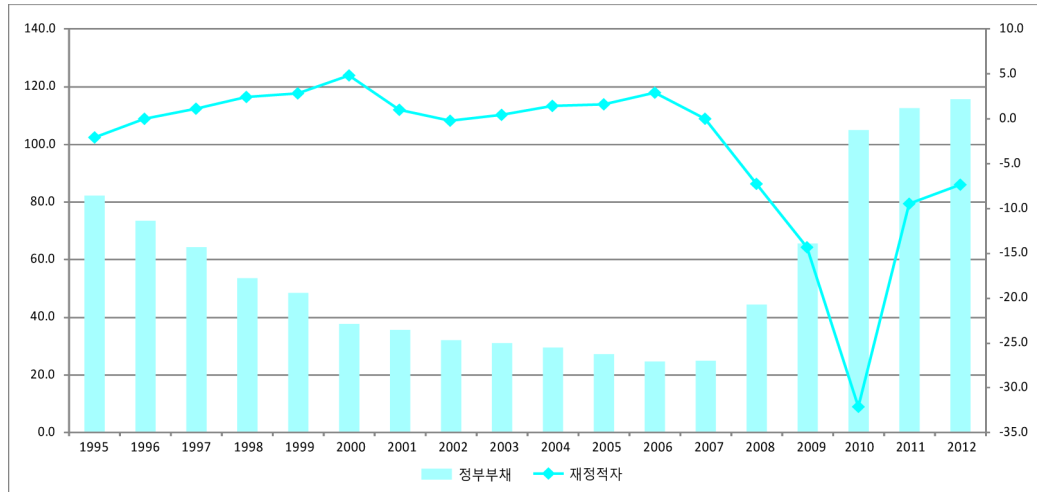
야 합

- EFSF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설립되는 상설기구인 ESM은 재정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재정위기가 발생한 회원국에는 EC, ECB, IMF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유동성 제공
 - －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경우, 그 회원국은 민간채권단과 IMF 규율에 부합하는 포괄적인 계획을 협상하고, 이후 ESM은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음
 - － 2013년 중반부터 유로지역에서 발행되는 모든 국채에 집단적 조항(Collective Action Clauses)을 삽입, 한 회원국이 발행한 모든 국채는 협상과정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며, 채권자들은 다수결을 통해 지불조건 등에 대한 합법적 수정이 가능

1) 아일랜드

- (재정지표) 아일랜드는 2007년까지 재정흑자를 보이고 국가부채도 GDP 대비 20%대까지 감축하는 등 매우 양호한 재정상황을 유지하였으나,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부터 재정적자 및 부채가 급증하였음
 - 2008년 재정적자가 GDP 대비 7.3%에서 2009년 14.4%까지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금융권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며 무려 32.3%까지 폭증할 전망
 - 국가부채 역시 2000년대에는 40% 미만으로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지속해왔으나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부터 급속히 증가하여 2010년 105%까지 이를 전망

[그림 1-Ⅱ-9] 아일랜드의 재정지표 (GDP 대비 %)



출처: 1995~2009년 수치는 Eurostat 자료(2010.12.2. 업데이트), 2010~2012년 수치는 OECD Economic Outlook(2010년 11월 발간) 예측치

□ (위기배경) 1990~2007년까지 아일랜드 경제는 연평균 6.5%의 고성장을 경험하며 유럽의 성공 사례로 인정받았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고성장에 따른 노동비용 및 물가 상승, FDI 감소 때문에 성장이 둔화되고 수출경쟁력이 하락하였고,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확대됨

- 90년대 초부터 고성장은 높은 교육수준, 재정건전화 노력, 노사 합의에 따른 낮은 노동비용, 영어사용, 12.5%로 유지된 낮은 법인세율, 그리고 꾸준히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 덕분
- 2000년대 초 이후 건설업은 고용 및 경기를 이끌었으나 경제의 기반이 나빠지면서 부동산 거품을 유발하고 금융권의 담보대출 의존도가 증가
- FDI는 다른 EU 국가들과의 유치 경쟁과 임금 및 물가 상승으로 2004년 이후 순유출을 기록

□ (위기원인) 2007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 구제를 위해 정부는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한편, 금융권의 예금 및 부채에 대한 4,400억유로(2009년 GDP의 2.75배)의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재정 위기가 촉발됨

- 2008년 이후 지속적인 재정긴축을 통해 재정건전성에 관한 시장의 신뢰를 얻고자 했으나, 계속되는 불황으로 금융권 부실이 계속 확대되면서 공적자금의 투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재정도 계속해서 악화되었음
 - 2010년 9월 30일, 아일랜드 정부가 부실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위해 추가로 투입한 구제금융 규모가 GDP의 20%에 이르고, 그 결과 2010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32.3%로 전망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확산
- (위기발생) 결국 아일랜드 정부는 2010년 11월 21일 IMF와 EU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향후 4년간 재정적자 150억유로를 감축하여 2014년 재정적자를 3%까지 낮추겠다는 국가재건계획(The National Recovery Plan 2011-2014) 발표
- 150억유로 중 60억유로(총 감축액의 40%)를 2011년에 집중시킨 예산안을 지난 12월 7일 발표하여, 2011년 재정적자를 9.1%로 줄일 계획
 - 150억 유로의 재정적자 감축 목표액 중 100억 유로는 정부지출 감소로, 50억 유로는 증세 등 정부수입의 증가를 통해 이뤄질 계획
- (국내 위기대응) 정부지출 삭감 및 세수 증대로 재정적자를 감축할 계획
- 공공부문 및 사회보장 지출 삭감, 예산제도 개혁 등을 통해 2014년까지 70억유로에 해당하는 정부지출 감소 계획
 - 세입 및 기타 정부수입을 50억유로 이상 확대: 소득세제 개선, 연금 개혁, VAT 인상, 토지세 도입, 공제 혜택 축소, 탄소세 인상, 취득세 및 자본이득세 개혁
 - 반면 법인세율은 현행 12.5%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올리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경제 성장과 고용 촉진을 위해 근로 유인을 늘리고 노동비용과 임대료를 낮추며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
- (국외 위기대응) EU와 IMF는 2010년 11월 27일 아일랜드에 대한 85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조치를 승인
- EU와 IMF가 각각 225억유로씩 지원하고, EFSF와 유로존에 속하지 않은 유럽국들이 175억유로를 지원하며, 아일랜드 정부도 현금보유액과 유동자산을 동원해 175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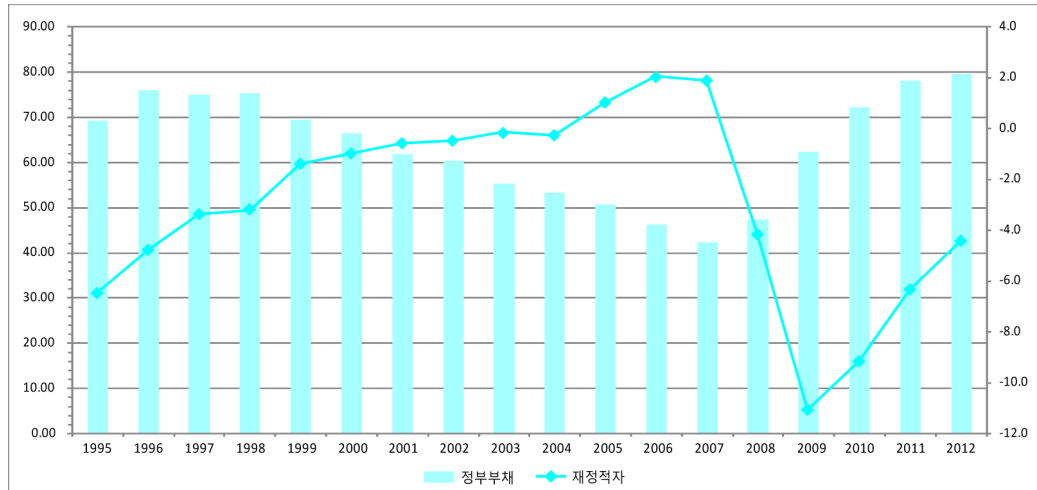
로를 투입하기로 했음

- (평가) 아일랜드 정부의 구제금융 계획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시장이 의구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
 - 아일랜드 정부가 발표한 자구안은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그 정책들을 실현할 만한 정치적 리더십이 부족한 상황
 - 아일랜드 정부가 보증한 4,400억유로에 달하는 은행권 예금과 부채가 잠재적 위험으로 존재하고, 불황으로 인해 금융권의 부실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일랜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팽배
 - 그러나 노동 및 자본비용을 낮춰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덜어낼 수 있다면 아일랜드 경제는 중장기적으로 회복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2) 스페인 사례

- (재정지표) 스페인은 2007년까지 재정흑자를 보이는 등 비교적 양호한 재정상황을 유지하였으나, 세계 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 11.2%까지 재정적자가 급증하였음 (그리스 15.4%, 아일랜드 14.4% 다음으로 높은 수준)
 - 국가부채는 2007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부터 증가, 그러나 2009년 국가부채는 62.4%로 PIIGS 국가 중에 가장 낮음 (유럽 27개국 평균인 74.0%에 비해서도 비교적 안전한 수준)
- (위기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주택가격 폭락, 주택시장에 자금을 공급해 주었던 저축은행 부실이 표면화되었고,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 높은 실업률도 스페인 경제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었음

[그림 1-Ⅱ-10] 스페인의 재정지표 (GDP 대비 %)



출처: 1995~2009년 수치는 Eurostat 자료(2010.12.2. 업데이트), 2010~2012년 수치는 OECD Economic Outlook(2010년 11월 발간) 예측치

- 독립적으로 자국 화폐를 사용한다면 환율과 금리를 통한 자동안정화 메커니즘을 통해 대외불균형 교정이 가능한데, 단일통화인 유로화를 사용하게 되면서 스페인의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문제가 심각해짐
- 경직적인 노동시장으로 인해 높은 실업률 지속, 최근 5년간(2006~2010년 3사분기) 평균실업률은 15.1%로 유럽국 중 가장 높음
- (국내 위기대응 정책) 스페인 재무장관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3%로 낮추기 위해 500억유로에 해당하는 재정지출 절감 계획 발표 (2010.1.29)
 - 2010년 공무원 신규채용 동결, 연금 수령연령 인상 등 지출감축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사회보장, 교육, R&D 및 해외원조 부분은 지출 삭감을 하지 않았고, 지방정부가 재정지출 절감분의 20%에 해당하는 양을 감축하기 기대하는 등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역부족
- (국내 위기대응 정책) 1월 발표에 이어 추가적으로 150억유로에 해당하는 재정건전화 정책(austerity measure) 승인(2010.5.20), 의회 통과(2010.5.27)

- 2010년 재정적자 11.1%를 2011년 6%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대대적인 비용 절감 정책을 도입
 - － 약 250만명의 공무원 임금 5% 삭감 및 총리 및 정부 각료 급여 15% 삭감 (2010년 6월 1일부터 적용)
 - － 13,000명의 공무원 구조조정 및 2011년 임금 동결
 - － 2500유로 출산수당 지급 중단 (12억 5천만유로 예산 절감 기대)
 - － 2011년 연금 동결: 연금에 대한 자동 물가연동 기제 중단 (15억유로 예산 절감 기대)
 - － 의약품 가격 보조금 감소
 - － 공공투자 60억유로 감축, 해외원조 6억유로 감축
 - － 지방정부에 대한 재원 120억유로 삭감
- 그동안 반대해 왔던 사회보장 및 공공투자 부문의 지출을 감축하는 등 본격적인 재정 건전화 경로를 모색하려는 시도로 평가받음

□ (국내 위기대응 정책) 스페인 정부는 재정위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건전화 계획과 제한된 경기부양책 승인 (2010.12.1)

- 국영 복권사업 지분의 30% 매각 결정 (50억유로 수입 예상)
- 마드리드공항과 바르셀로나공항 등 주요 공항의 지분을 49%까지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 추진 (90억유로 수입 예상)
- 2009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장기 실업자에 대한 월실업보조금 426유로 내년 2월부터 지급 중지
- 담배세 28% 인상으로 7.8억유로 세입확보 예측
- 연금 개혁 약속 (2011년 1월 28일까지):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인상, 조기정년시 연금수령액 삭감, 연금수령액을 낮추는 연금계산공식 개발
- 4만개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및 창업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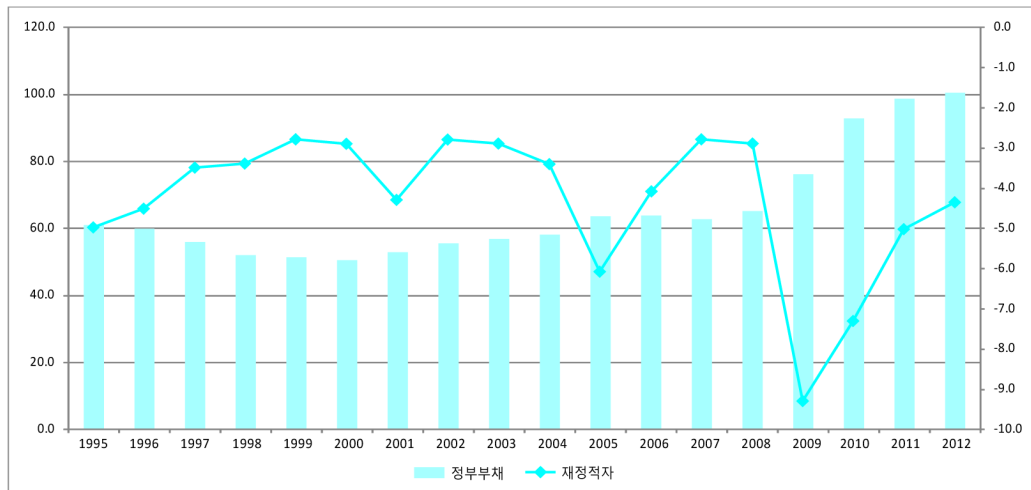
□ (긴축예산 편성) 스페인 정부는 경기회복 및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로 2011년도 긴축예산(austerity budget) 수립 (2010.12.21)

- 2011년 예산의 두 가지 큰 축은 재정건전화와 구조개혁임
 - － GDP 대비 재정적자를 2010년 9.3% → 2011년 6% → 2012년 4.4% → 2013년 3%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지출축소 계획을 제시
 - － 그러나 연구, 개발, 혁신을 위한 생산적 프로젝트는 유지
 - (세수증대)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 부유층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지방세 인상 등
 - (지출 삭감) 부처별 지출 삭감, 공공부문 임금 삭감 및 인력감축, 출산장려금지급 중단, 장기 실업보조금 지급 중단
 - (구조개혁) 경쟁력 향상 및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 연금, 금융부문에서 구조개혁 단행 제시
- (평가) 2011년 2월 현재 스페인 정부의 자구노력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유럽에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4번째로 큰 스페인 경제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을 합친 것의 2배 규모
 - 유럽국가들의 경제가 상호연계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스페인에 재정위기가 온다면 타 유럽 국가들로 확산될 위험이 존재,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시 유로화 등 유럽 경제 전체에 충격이 매우 클 전망
 - 그러나 스페인은 금융부문 개혁 및 노동시장 유연화를 단행하여 단기간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임으로써 국제사회 및 시장의 신뢰를 얻기 시작
 - －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저축은행의 합병 승인, 저축은행법 개정, 재정건전화 정책 시행, 구조개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 이웃국가인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받고 회생하지 않으면 스페인도 동반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였으나, 2011년 강도 높은 개혁을 시행하며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와는 달리 자력 회복이 가능하다고 평가받음

3) 포르투갈 사례

- (재정지표) 포르투갈은 1990년대부터 재정적자가 만성적으로 지속되어 근본적으로 국가재정이 취약한 상태였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국가부채도 증가하는 상황
 - 2008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2.9%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에 9.3%로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
 - 2009년 GDP 대비 국가부채는 76.1%로 최근 EU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일랜드(65.5%)보다 높은 수준
- (위기배경) 포르투갈은 고질적으로 낮은 경제성장률, 90년대 이래 방만한 재정운영, 수입의존적 경제구조에서 비롯되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및 높은 실업률 등이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음

[그림 1-Ⅱ-11] 포르투갈의 재정지표 (GDP 대비 %)



출처: 1995~2009년 수치는 Eurostat 자료(2010.12.2. 업데이트), 2010~2012년 수치는 OECD Economic Outlook(2010년 11월 발간) 예측치

- 지난 10년간 포르투갈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1% 미만(0.93%)으로 유럽국가들 중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유지
- 1997년도부터 평균 재정적자는 GDP 대비 3.9%로 그리스를 제외한 타 남유럽 국가보

다 높은 수준

- 유로화 가입 이후, 계속되는 유로화 강세로 PIIGS 국가들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수출경쟁력이 약화
- 강성노조 등 경직적인 노동시장으로 인해 OECD 국가들 중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음

□ (국내 위기대응) 포르투갈 정부는 재정적자를 2010년 7.3%에서 2011년 4.6%로 인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주로 세입 확충 위주의 새로운 재정건전화 정책(austerity measure) 승인 (2010.5.13)

- 경기회복(GDP 성장률 0.2%)으로 인해 세수가 증가하고 주로 일시적인 세금 인상 (2011년 말까지)을 통한 재정건전화 도모
 - － VAT 20% → 21%로 1%p 인상
 - － 연봉 15만유로 이상의 부유층의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 및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감면 축소
 - － 대기업 수익에 대한 세금 2.5%p 인상
 - － 공공기관 매각 및 민영화
 - － 시니어 공공부문 근로자(정치가 포함) 5% 임금 삭감
 - － 2013년까지 공공부문 임금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 금지
 - － 공공부문 2명 퇴직시 1명 고용 원칙

□ (국내 위기대응) 포르투갈은 2011년 재정적자 감축(7.3% → 4.6%)을 위해 지출 삭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2011년 긴축 예산안 승인 (2010.11.3)

- 지난 5월 공약한 내용을 포함, 포르투갈에 민주정부가 들어선 후 가장 큰 긴축 예산으로 GDP 대비 4.9%에 해당하는 재정 절감 기대
- (세입측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공제항목 축소 및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21% → 23%)을 통해 GDP 대비 1.4% 세수 증가
- (세출측면) 공공부문 운영비용 감소, 의료 및 복지 지출 감소,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 감소 등을 통해 GDP 대비 2.7% 지출 감소

- 공공부문 임금 5% 동결
- 고속 전철(리스본-포르토, 포르투갈 포르토와 스페인 비고) 건설 연기
- 2013년까지 국방비 지출 40% 삭감

□ (재정제도 개선) 포르투갈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재정규율 강화 및 독립된 감독기구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법(Budgetary Framework Law)에 대한 개정안 승인 (2010.12.2)

- 다년간 예산 및 수정안 국회에 제시, 예산 목표에서 이탈시 신속한 교정 요구
 - 재무부는 다른 부처와 협의하에 각 부처의 공공지출에 대한 분기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미달성시 다음 분기에 반영하도록 규정
-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연간 예산 보고서 발행
- 재정법 적용 범위를 광의의 정부로 확대, 광의의 정부(자치단체 및 공공기업 포함)의 지출을 감시하는 메커니즘 구축
 - 2011년 예산안 및 유럽 성장과 안정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재정건전화 정책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특히 보건, 사회보장, 교통 관련 지출절감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화 요구
- 프로그램 예산 시행
- 독립된 재정위원회(Council for Public Finances) 설립, 책임성 확보 및 재정건전화 정책 시행 여부 감시
- 공공투자 관련 프로젝트 감독 기구를 설립하여 재정적, 기술적으로 가능한 프로젝트만 시행

□ (기타 노력) 포르투갈 정부는 경쟁력 및 수출 회복을 위한 구조개혁 및 재정건전화 노력 시행

- 경쟁력 향상 및 수출 개선: 교역부문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무역신용보험 사용 장려, 비EU국 수출시 정부 개런티를 가진 교역 통로 확립, 수출 주력 혁신 기업 설립 장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 성장동력이 되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 절차 간소화: 2011년 1사분기까지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 경감, 혁신적 잠재력을 가진 기업 창립시 향후 2년간 행정제반비용 폐지,
신규 기업 설립시 등록제도 폐지

- 노동시장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실업보상금 감소 및 보상절차의 유연화, 경제위기 시 일시적 노동계약 중지 및 근로시간 축소, 청년실업자 등에 대한 취업교육을 실시하여 고용기회 확대
- 도시 혁신 및 부동산 시장 개선
- 조세 회피 및 탈루 감시: 세금 관련 기업과 정부의 컴퓨터 시스템 대조 확인 정책, 내부회계감사 강화 등
- 포르투갈 재무부는 2010년 11월부터 여러차례 영문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포르투갈 정부가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한다고 강조

- (평가) 포르투갈 정부의 재정위험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1년 2월 현재 외신들은 포르투갈의 만성적 재정적자, 낮은 성장률, 해외부채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으로 인해 결국 IMF/EU의 구제금융을 받을 것으로 전망
 - 특히 경제규모가 큰 스페인의 재정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포르투갈이 신속히 회생해야 하기 때문에 구제금융 신청에 대한 압력 증가

다. 평가 및 시사점

- 아일랜드와 스페인의 재정은 금융부문 부실로 인해 악화되었고, 정부가 제시한 재정건전화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위험 증대
 - 그리스와는 달리 스페인과 아일랜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전까지 재정상황이 비교적 양호하였고, 재정통계 투명성과 관련한 문제도 없었음
 - 그러나 세계적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막대한 경기부양 재원을 투입하였고, 그에 따른 실적은 부진
 - 스페인, 포르투갈은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었고, 실업자 및 퇴직자에게 제공하는 사회보장 혜택이 매우 높아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음
 - － 아일랜드는 노동비용 상승으로 경쟁력 하락

- 부동산 시장의 붕괴로 그에 자금을 공급해 주었던 은행권이 동반 부실해지며 정부의 재정부담이 급증하였고, 국가채무 위험이 증가
- 유럽의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유로화 단일통화체제가 위기를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향후 경제체제의 변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 단일 통화를 사용하면 개별 국가의 경쟁력 약화로 경상수지가 악화되어도 환율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 증대를 통한 경제회복을 꾀하기 어려움
 - 또한 경제위기 때문에 재정위기가 촉발된 나라는 중장기적 재정건전화와 단기적인 경기회복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조합을 찾아야 하나 유로 체제하에서의 위기국들은 정책 수단이 매우 제한적임
 - － 재정정책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긴축재정을 택해야 하고, 통화정책은 ECB가 유로존 공통의 통화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에 환율을 통한 수출의 증대도 꾀하기 어려움
 - 반면 미국의 경우, GDP 대비 10%(유럽 평균은 약 6%)가 넘는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2010년 말 8,580억달러에 달하는 감세 및 재정확대정책을 채택했고, FRB도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를 통한 경기회복을 뒷받침
 - － 결국 임금 등 생산비용이 감소하여 경쟁력이 증가하고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회복이 더디고, 그에 따라 금융권 부실과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경우 재정긴축에 따른 재정건전화의 효과는 감소될 수 있음
 - 향후 유로화 체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경제상황이 좋은 나라가 그렇지 않는 나라에게 재정 및 금융지원 혹은 부채 재조정(restructuring) 등을 하는 더 결속된 형태의 경제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면 결국 개편 또는 해체될 가능성도 있음
- 유럽의 재정위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재정지표는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는 재정정책 운용이 요구됨
 - 스페인과 아일랜드는 '08 금융위기 이전에는 재정지표가 매우 양호한 상황이었는데, 호황기에 재정위험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불황기에 재정지표가 급속도로 악화된

사례

- 재정지표는 개선되기는 어렵지만 악화되기는 쉬우므로, 우리나라 역시 현재 재정지표가 양호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음
 - － 공기업, 정부보증채, 공적연금 등은 재정지표에 반영되지 않지만 향후 재정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인
 - 정부의 중기재정인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미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저출산·고령화, 통일 등 위험요인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
 - 단기적으로는 재정총량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며 특히 세입보다는 세출을 통해 재정수지를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
 - － 포르투갈의 경우, 정부가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세입확대 방안(2010년 5월)을 제시했을 때보다 지출축소 방안(2010년 12월)을 제시했을 때 본격적인 재정건전화 정책 기조로 전환하였다고 인식하고 시장이 반응
 - 세출 측면에서는 지출효율화, 방만한 복지지출 억제,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을 통한 재정낭비 근절,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페널티 적용,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신규사업 방지 등이 필요
 - 세입 측면에서는 세원 확대, 탈세 및 탈루 방지, 조세감면 제도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
- 재정의 양적지표뿐만 아니라 질적지표(세입·세출 구조, 지출의 효과성·효율성, 재정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재정위험 등)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유럽국가의 예에서 보듯이 정부 재정건전화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시장이 신뢰하지 못하면 재정위기가 발생하게 되니,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재정상황을 관리·감독하는 시스템 필요
 - － 예를 들면, 국가채무 지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재정위험 요소인 공적연금, 통안증권,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도 별도의 관리 필요
 - 또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 및 재정규율 강화를 통한 재정제도 개선이 필요

- 포르투갈의 경우에도 대대적인 재정긴축정책을 시행하면서 재정법을 개정하여 다년간 예산안 수립을 의무화, 재정변수 및 공공지출, 공공투자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독립적인 위원회 설치 등 재정제도를 강화하였음
- 특히 복지 등 의무적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 강화 필요성 증대

□ 재정여건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독립된 재정위원회 및 재정적·기술적으로 가능한 프로젝트만 시행하도록 공공투자 감독기구 설립 등을 검토해 볼 필요 있음

○ 포르투갈이 재정건전화 정책의 일환으로 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재정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재정위원회는, 영국의 예산책임청 및 미국의 재정위원회 등과 비슷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임

- 2010년 5월에 설립된 영국의 예산책임청(OBR)은 재정 및 경제상황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만든 기구로서, 경제 및 재정전망을 관장하고 재정위험 요소(고령화, 펜션 등)를 평가하며, 정부 시책이 재정정책 목표와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판단
- 2010년 2월 18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중장기적으로 재정여건 개선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초당적 재정위원회 설립

□ 경제적 성과가 좋을 때에도 끊임없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며 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 필요

○ 아일랜드는 90년대 초부터 10여년간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을 바탕으로 FDI를 유치하여 수출주도형의 고성장을 경험했으나, 2000년대 초반 이후 임금, 물가 및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생산성 상승폭이 둔화되어 수출경쟁력이 하락하고 성장이 둔화되었음

- 이에 장기적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단기적 경제성장을 시도했고, 동시에 임금인상과 사회보장제도 확대를 통해 부동산 거품 형성과 경쟁력 하락을 유발하여 경제위기의 빌미를 제공

○ 한국도 2010년 6%를 넘는 고성장이 예상되고,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규모도 안정적이거나 향후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우려됨

- OECD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 때문에 한국의 2012~2025년 평균 잠재성장률이 2.4%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이런 상황에서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아일랜드처럼 건설업 등 내수 진작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재정 운용 및 경제정책의 방향을 성장잠재력 확충 쪽으로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
- 또한 최근 확대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여 향후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 있음
- 아울러 재정 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의 구조개혁을 통해 향후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지속적 관리 필요
 -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실업, 금융권 부실 등은 잠재적으로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이므로, 각 부문의 효율적 운영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건전성 유지
 - 아일랜드의 경우, 금융위기 초기에 부실은행들을 국유화하거나 4,400억유로에 달하는 예금과 부채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함으로써 이전까지 건전했던 재정의 악화와 장기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
 -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성 하락에 이은 대규모 예금인출(bank run) 사태를 막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악화시켜 위기를 심화시킨 면도 있음

Ⅲ

국내외 보고서

1. 주요 보고서 요약*

가. IMF, Fiscal Monitor Update (2011년 1월 27일 발표)

- 2010년, 선진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전년보다 1%p 감소한 8%를 기록하였고, 개도국은 전년보다 0.75%p 감소한 4%를 기록하는 등 재정상황이 예상보다 개선되었음

〈표 1-Ⅲ-1〉 2008-2012년 각 국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적자 (GDP 대비 %)					
선진국	-3.6	-8.8	-7.9	-7.1	-5.2
미국	-6.5	-12.7	-10.6	-4.6	-7.2
유로	-2.1	-6.4	-6.4	-4.6	-4.0
프랑스	-3.3	-7.6	-7.7	-6.0	-4.9
독일	0.0	-3.0	-3.5	-2.6	-2.3
이탈리아	-2.7	-5.2	-5.0	-4.3	-3.5
스페인	-4.1	-11.1	-9.3	-6.6	-6.0
일본	-4.1	-10.1	-9.4	-9.1	-8.0
영국	-4.9	-10.3	-10.3	-8.1	-6.1
캐나다	0.1	-5.5	-5.9	-4.7	-3.3
개도국	-0.7	-4.8	-4.1	-3.2	-2.8
중국	-0.4	-3.1	-3.1	-2.1	-1.5
인도	-7.9	-10.2	-9.8	-9.2	-8.4
러시아	4.3	-6.2	-4.2	-2.9	-3.0

* 이은경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eklee@kipf.re.kr)

〈표 1-Ⅲ-1〉의 계속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정부부채 (GDP 대비 %)					
선진국	79.2	91.4	96.5	101.0	103.6
미국	71.2	84.6	91.2	97.9	102.0
유로	69.6	78.9	84.3	87.1	88.7
프랑스	67.5	78.1	84.0	87.4	89.4
독일	66.3	73.5	76.6	77.1	77.1
이탈리아	106.3	116.0	118.7	120.1	120.1
스페인	39.8	53.2	63.1	68.4	72.6
일본	195.0	217.4	220.7	227.5	232.8
영국	52.0	68.3	77.2	82.1	84.5
캐나다	71.3	82.5	83.9	85.4	84.8
개도국	35.4	37.2	36.9	36.8	36.4
중국	17.0	17.7	18.4	18.4	17.6
인도	74.0	77.8	75.7	75.2	74.8
러시아	7.8	10.9	10.4	10.8	12.1

□ 2011년 재정건전화 속도는 완화될 전망이나, 국가별로 차이가 큼

- 작년 11월, G20 국가의 재정적자가 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2011년 1월 현재 재정적자 감소분은 0.25% 이내에 그칠 전망이고, 부채비율은 5%p 증가하여 GDP의 107%까지 증가할 전망
- 미국 의회는 2010년 12월, 소득세 인하 및 실업혜택 증가 등 확장 재정정책을 승인하여 선진국 중 유일하게 경기순응적인(pro-cyclical) 재정정책을 시행
 - － 그러나 토론토에서 개최된 G20 회의에서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합의, 따라서 2011~2012년에는 대대적인 재정적자 감축 정책이 시행될 전망

〈표 1-Ⅲ-2〉 2010년 11월 Fiscal Monitor 이후 발표된 주요국의 재정정책

국가	세입 및 기타 수입	지출	2011년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재정긴축정책			
그리스	세금 연체료 및 벌금 징수 가속화, 연료 밀반입 통제, 세금징수 효율화, 텔레콤 허가권 갱신, 공항 수수료 연장 (GDP 대비 1%)	공기업의 임금삭감, 관세인상, 병원 이용 환자부담금 인상 및 비용절감, 가족수당 수혜자 검증 절차 강화, 공공부문 단기계약제 도입, 국방지출 감소 (GDP 대비 1.2%)	GDP 대비 2.2%
아일랜드	세출감소, 민간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건강보험료 및 연금을 사회보험료로 통합 (GDP 대비 0.9%)	공공부문 임금 및 재량지출 삭감, 비누진적 사회보장 혜택 및 자본지출 감소 (GDP 대비 2.4%)	GDP 대비 3.5%
포르투갈 ¹⁾	VAT 2%p 인상, 세출감소 (GDP 대비 0.8%)	공공부문 임금, 연금, 사회이전지출 삭감 (GDP 대비 2.2%)	GDP 대비 3.0%
스페인 ²⁾	담배소비세 인상, 국가가 운영하던 복권 및 공항의 부분적 민영화	풍력발전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감소, 실업급여 감소	-
재정확장정책			
일본 ³⁾	법인세 5%p 인하(40%→35%), 소득 및 양도세 공제혜택 축소 및 연료세 인상 (GDP 대비 0.1%)	지역경제에 대한 자본지출 증가, SME에 대한 이전지출 및 실업혜택, 보육, 건강보험 혜택 증가 (GDP 대비 1%)	GDP 대비 1.1%
미국 ⁴⁾	2001, 2003 세금인하를 2년 연장, 1년간 직장근로자 세금 2%p 인하, 2009년 부동산세 제도 및 가속상감법 연장 (GDP 대비 0.8%)	긴급실업급여 지급을 13개월 연장 (GDP 대비 0.1%)	GDP 대비 0.9%

주: 1) 이러한 수입증대·지출감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1년 재정적자 목표(GDP 대비 4.6%)는 변함없음

2) GDP 대비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발표되지 않았음

3) 세입 상황이 예상보다 개선되어 2011년 재정적자는 2010년 11월 전망치보다 GDP 대비 0.2%만 증가할 예정

4) 연방정부 적자에 대한 영향

— 중기재정정책 수립 속도 둔화: 오바마 대통령이 설립한 재정위원회에서 지난 12월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나, 의회에 제출할 만큼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음

○ 일본의 경우, 2011~2012년 재정적자 감축이 계획되어 있으나 법인세 인하 등 재정건전화에 반하는 정책으로 인해 그 감소폭이 크지 않을 전망

○ 유럽은 2011~2012년 대대적인 재정건전화 정책이 예정되어 있음

— 독일과 프랑스는 경기부양책의 종료 및 성장회복 등으로 재정적자가 감소할 전망

이고, 스페인은 대규모의 지출감소 정책을 통해 대대적인 재정적자 감소를 기대하고 있음

- 영국은 2011년 재정긴축정책을 시행하고 향후 4년간 공공지출을 감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음
-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2011~2012년에도 지출감축 위주의 재정건전화 정책을 계속 시행할 예정

□ 전반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이나, 재정제도가 약화된 국가도 있음

- 미국 하원은 지출증가율을 억제하는 기제를 도입한 반면, 세금 인하 및 세출증가의 여지를 남겨두었음
- 유럽은 안정과 성장 협약 개선, European semester 시행, 2013년 6월부터 유럽안정기제(European Stability Mechanism, ESM) 도입 등 재정제도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 및 계획하고 있음

나. OECD, “Reforming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Budgeting” (2011.2)

□ 많은 국가들이 지출감축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예산제도 개혁이 필요함

- 재정 규율 설정
 - 중기적 시계에서 예산 총량 수치 목표 설정
 - 재정적자 및 부채 감축을 위해서는 지출 통제가 중요한 정책적 수단인데, 특히 경기호황기에 지출통제 규율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
 - 지출통제 규율에서 벗어나기 쉬운 법인세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고려해야 함
 - 재정 규율은 광의의 정부에 적용되어야 함
- 경제전망의 정확성
 - 경기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확장재정정책을 시행할 위험이 있으므로, 독립된

경제 전망을 하는 기관 필요

- 경제 전망시 취한 가정들을 모두 공개하고, 주요 변수에 대한 민감도 테스트를 시행해야 하며, 민간에서 시행한 경제 전망과 비교 필요

○ 중기 지출 정책 설정

- 재정규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재정건전화 정책 제시
- 3~5년 시계의 중기 예산을 수립하여 필요한 개혁 수행
- 중기 지출 계획이 매년 예산수립 과정에 잘 반영되기는 쉽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

○ 톱다운 방식

- 각 부처는 연간 예산편성 당시 지출을 커버할 수 있을만큼 일정액의 자원 (lump-sum money)을 배분받고, 배정받은 재원을 크게 네 개의 카테고리(임금, 기타 운영비용, 이전지출, 자본비용)로 배분함
- 예산은 중앙정부의 정책방침을 반영하며, 중기 지출 계획 및 정치적 우선순위에 따라 중앙정부가 자원 배분
- 각 부처에 일정량의 재원을 배분한 후, 부처 내부적으로 세부 프로그램 및 기관에 재량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유 허용
- 이러한 톱다운 예산편성 방식이 중앙정부와 각 부처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줄다리기를 막고, 각 부처가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음

○ 경영적 유연성은 극대화

- 각 부처의 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경영자에게 전권 부여
- 권력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 통제 기제의 확립

○ 성과평가와 결과 정보 이용

- 연간 예산 편성시 요구되는 성과와 결과 정보 포함

○ 장기적 예산 추이 제공

- 20, 40, 60년 단위의 장기 예산 전망치를 제공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 재정 전망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모든 공공수입과 지출을 포함해야 함
- 중기 지출 계획이 장기 재정전망과 같은 선상에 있음을 확인하고, 미래에 급격한

조정 대신 서서히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재정위험에 대비할 수 있음

다. OECD, “Improving Fiscal Performance Through Fiscal Councils” (2010.12)

- 재정 성과 개선을 위해 독립적 재정위원회(fiscal council) 설립이 필요
 - 지속되는 정부의 재정적자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재정정책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deficit bias)
 - 정부의 재정적자가 지속되는 것은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인에 의거함
 - 정치가들이 재선을 위해 지출 증대 및 세금 축소 등의 공약을 남발하는 등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착하기 때문
 - 공유지의 비극(common pool problem): 정치가들이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free-riding 하는 문제 발생
 - 시간의 비일관성 문제(time inconsistency): 사전적으로 결정되는 정책이 정책결정자에게는 사후적으로 덜 바람직하게 여겨지기 때문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
 - 중기재정체제에서 재정목표를 명시하고 재정법에서 절차 및 투명성 요건 제시: 뉴질랜드와 호주
 - 수량적인 재정준칙을 설정
 - 독립적인 재정 기구 설립: 독립적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처럼 독립적인 재정당국을 설립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제한된 책임을 부여하는 재정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 제안
- 재정위원회(fiscal council)의 역할은 다음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존하는 재정위원회는 독립적으로 거시경제 및 재정전망을 시행하고 중장기 재정준칙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등 이들 세 개 역할을 조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림 1-Ⅲ-1] 재정위원회의 역할

General information		Forecasts and projections of macroeconomic and/or budgetary assumptions					Tasks to be filled				
Institution		Macro forecasts	Forecasts for govt expenditure	Forecasts for govt revenues	Forecasts for govt balance and debt level	Long-term projections of govt finances	Analysis of budget	Monitoring of budgetary implementation	Estimates of short and long-term effects of policy measures	Analysis of whether budgetary plans & outcomes are in line with fiscal rules	Not explicitly in charge of any of these tasks, but fulfils some of them
Austria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IHS)	X			X						
Austria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WIFO)	X			X						
Austria	Government debt committee	X					X				
Belgium	National accounts institute	X						X			
Belgium	High council on finance (HCF) – Section “Public Sector Borrowing Requirement”									X	X
Denmark	Danish Economic Council	X	X	X	X	X					X
Estonia	State Audit Office										
France	Commission Economique de la Nation and Conference Economique Annuelle	X			X		X				
France	Cour des Comptes							X			
Germany	Working Party on tax revenue forecasting			X							
Germany	Joint Economic Forecast by 6 leading research institutions (JEF)	X	X	X	X						X
Germany	Council of Economic Experts on Overall Economic Trends	X				X					X
Germany	Advisory Board to the Federal Minister of Finance										X
Greece	Center of Planning and Economic Research (KEPE)	X	X	X							X
Hungary	State Audit Office (ASZ)						X	X		X	
Hungary	Fiscal Council of Hungary	X	X	X	X		X	X		X	
Italy	ISAE	X	X	X	X						X
Luxembourg	Court of Auditors										X
Netherlands	The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CPB)	X	X	X	X	X	X	X	X	X	
Portugal	Court of Auditors							X			X
Spain	Court of Auditors						X	X		X	
Spain	National Committee of local administration										
Slovenia	Macroeconomic Analysis	X						X			
Sweden ¹	Fiscal Policy Council								X	X	
Sweden ²	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X	X	X	X	X					X
United Kingdom	National Audit Office						X				
United Kingdom ³	Office of Budget Responsibility (OBR)	X	X	X	X	X			X	X	

General information		Tasks to be filled						
Institution		Normative reports and/or recommendations on fiscal policy						
		Normative statements in budgetary plans and respect of the fiscal policy rules	Assessment of the budget/alternative quantification of the measures therein	Proposals for changes in the budgetary plans	Normative statements on implementation of fiscal plans/respire of fiscal rules	Alert function to signal a possible deviation from plans	Recommendation in case a slippage to initial fiscal plans is identified	Others
Austria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IHS)							
Austria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WIFO)							
Austria	Government debt committee			X				
Belgium	National accounts institute							
Belgium	High council on finance (HCF) – Section “Public Sector Borrowing Requirement”			X	X	X	X	
Denmark	Danish Economic Council			X (Federated entities)	X	X	X	
Estonia	State Audit Office				X	X	X	
France	Commission Economique de la Nation and Conference Economique Annuelle							
France	Cour des Comptes				X			
Germany	Working Party on tax revenue forecasting							
Germany	Joint Economic Forecast by 6 leading research institutions (JEF)						X	X
Germany	Council of Economic Experts on Overall Economic Trends						X	
Germany	Advisory Board to the Federal Minister of Finance							X
Greece	Center of Planning and Economic Research (KEPE)							
Hungary	State Audit Office (ASZ)		X		X			
Hungary	Fiscal Council of Hungary		X	X	X	X	X	
Italy	ISAE							
Luxembourg	Court of Auditors		X			X	X	
Netherlands	The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CPB)							
Portugal	Court of Auditors	X			X			
Spain	Court of Auditors				X			
Spain	National Committee of local administration		Only local finances					
Slovenia	Macroeconomic Analysis							
Sweden ¹	Fiscal Policy Council	X				X	X	
Sweden ²	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X			X			
United Kingdom	National Audit Office	X						X
United Kingdom ³	Office of Budget Responsibility (OBR)	X				X		

1. Author's assessment.

2. Author's assessment. The mandate includes monitoring and evaluating the quality of the government's economic forecasts and underlying models. The 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also undertakes analysis of whether budgetary plans and outcomes are in line with fiscal rules.

3. Based on HM Treasury "Draft: 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 (HM Treasury, 2010).

Source: "National independent institutions", Chapter III, Public Finances in EMU, 2006, except where noted.

- 예산편성 과정에 필요한 독립적 전망치 제시, 공식적인 전망치와 대비하여 평가, 실증적 분석을 통한 재정정책 이슈 평가 (예: 의료개혁의 중장기 비용)
- 예산편성에 필요한 거시경제 및 재정변수에 대한 독립적인 전망 시행

- 재정정책의 적절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규범적 의견(normative view) 제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바람직한 시계 제안
- 규범적 권한을 가진 재정위원회(자문위원회, 독립적인 연구소, 감사원)는 재정정책 수립 및 감독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는 이를 귀담아 들을 때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
 - 오스트리아의 정부 부채위원회(Government Debt Committee, GDC): 부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의 퀄리티 평가
 - 12명의 재정전문가로 구성
 -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으로부터 재원과 인력 지원받음
 - 재정부를 통해 정부에 조언을 제공하며, 이를 담은 보고서를 대중에 발표
 - 벨기에의 재정 자문의위원회(High Council on Finance): 1936년 설립되었으나 1989년 재정정책 수립 및 시행에 공헌하기 위해 강화되었음
 - 장기 고령화 관련 지출 전망, 재정정책에 대한 정기적 평가
 - 유럽 안정과 성장 조약에 위배되지 않는 정부의 재정 목표를 제안해야 하는 규범적 역할 담당
 - 헝가리의 재정위원회(Fiscal Council): 2009년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 및 재정 투명성 향상을 목적으로 재정책임법에 의거하여 설립
 - 거시경제 및 주요 재정 변수들에 대한 전망치 제시, 예산법의 효과 측정 및 제언, 재정정책에 대한 방법론 제안, 재정규율(PAYGO와 부채상한) 준수 여부 모니터링
 - 덴마크의 경제위원회(Economic Council): 거시경제 전망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운영, 조세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전반적인 재정 이슈에 대한 자문위원회
 - 현재 재정규율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정책적 제언
 - 스웨덴의 재정정책위원회(Fiscal Policy Council): 2007년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 독자 목표, 중앙정부 지출 상한, 경기변동과 관련한 재정상황 등을 평가하기 위해 설립
 - 예산의 투명성을 감독 및 평가하고 정부의 경제 전망에 대한 평가 시행
- 재정 이슈들에 대한 독립적 분석을 제공하는 재정위원회는 정부 및 대중에게 정책효과

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

- 미국의 국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1975년 예산의 비용 및 장기 효과 분석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연방정부 예산에 포함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관련 재정정책에 대해 객관적이고 초당적이며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
 - 매년 대통령 예산안에 대해 베이스라인 전망치 제시
- 캐나다의 국회예산처(Parliamentary Budget Officer): 2006년 재정책임법에 의거 미국의 CBO를 본따 설립, 국가 재정의 객관적 분석, 정부 추정, 경제전망, 비용추정치 제공
 - 정부 데이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그러나 캐나다 수상에 의해 해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독립성은 약함
- 한국의 국회예산정책처(NABO): 2003년 국회에 재정정책 관련 제언 기구로 설립
 - 예산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초당적인 정보 제공, 재정정책 평가, 경제 및 세입 전망 수행, 일반 리서치 수행
 - 처장은 국회의장이 임명, 임기가 국회의장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독립성은 제한적
- 멕시코의 재정연구센터(Center for the Study of Public Finances): 미국의 CBO를 모델로 하여 설립된 동 기구는 의회에 소속되어 경제, 재정, 부채, 예산안, 재정법 등에 대한 정부 보고서 검토
- 네덜란드의 중앙기획청(Central Planning Bureau): 1945년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 및 전망을 위해 설립
 - 연간 예산 편성과정에서 거시전망치 제공, 재정정책 및 노동이슈, 비용편익분석, 장기재정이슈들에 대한 광범위한 리서치 수행, 모든 정당의 경제정책 평가

□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독립적인 거시 및 재정 전망을 제시하는 재정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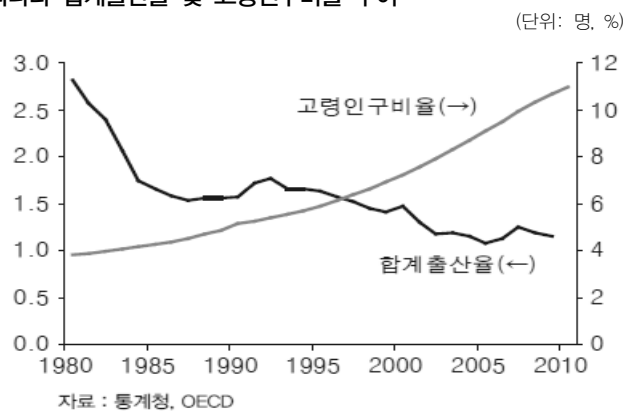
- 벨기에의 연방기획청(Federal Planning Bureau): 거시경제 전망치를 제공하고, 정부는 예산 편성시 이 정보를 이용하도록 법으로 정함
- 오스트리아의 경제리서치 기관(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장단기 거시경제 전망치를 제시하고,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정부는 예산편성에 이 정보를 이용

- 네덜란드의 중앙기획청(Central Planning Bureau): 거시경제 전망치를 제공하여 정부는 예산안 편성시 대부분의 경우 이 정보를 이용, 재정총량 전망치 제시
- 칠레 재정부의 GDP 추계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for Trend GDP, 16명의 독립된 거시경제학자로 구성)는 주요 거시변수 전망치를 제시하고 재 정부는 예산안 편성시 이를 이용하도록 법제화
 - 기준 구리 가격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for the Reference Copper Price)는 정부의 공식적인 구리가격 전망치 제시
- 독일의 세입추계 특별조사위원회(Working Party on Tax Revenue Forecasting): 정부가 제시한 거시경제 전망치에 기초하여 예산의 세입전망치 제시
- 영국의 예산책임청(Office of Budget Responsibility): 2010년 재정 및 경제에 대한 독립적 평가 기구로 설립
 - 전망(가정 및 판단)에 대한 책임, 정부 정책이 재무부에서 정한 시책과 일관성 있는지 확인, 고령화 비용 및 연금 분석 등 공공부문 재정 평가

라. LG경제경영연구원 “저출산 예산 너무 적다” (2011.1)

- 2009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고령인구 비율은 11%에 달하고 있음
- 2017년부터 생산인구 감소, 2019년부터는 총인구 감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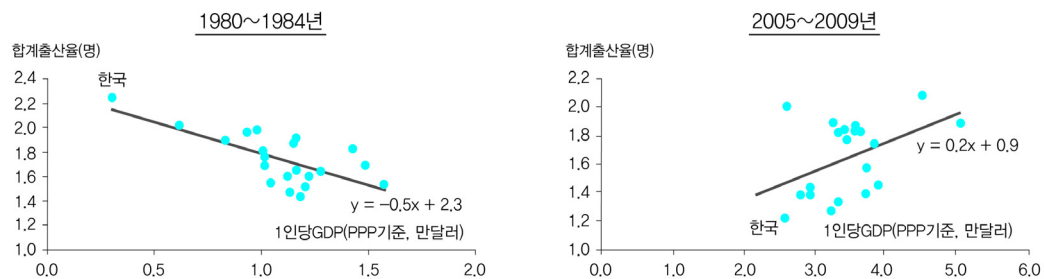
[그림 1-Ⅲ-2]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및 고령인구비율 추이



SECTION 1 >>

- 저출산의 원인은 출산 및 육아의 기회비용이 높기 때문: 소득 및 고용불안정, 과도한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등
- 저소득 국가 포함시 출산율과 1인당 소득간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거나, 선진국의 경우, 소득과 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 － 우리나라는 90년대 이후 소득과 출산율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그림 1-Ⅲ-3]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및 1인당 GDP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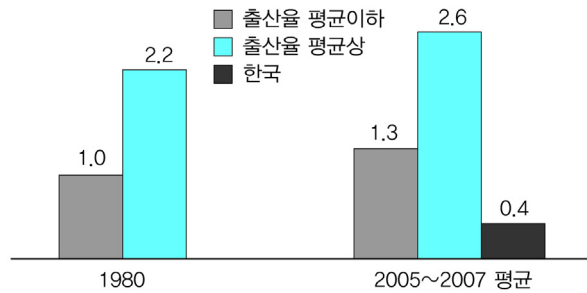


주: OECD국 중 21개국 자료임.

자료: OECD

- 이는 선진국들이 1980년대 이후 양육비 경감, 출산후 고용시장 지원 등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보임
 - －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 보육을 위한 휴가제도, 탄력적 고용, 실직 부모를 위한 고용 지원 등
 - － 따라서 저출산 대책 평균 지출규모는 1980년 GDP 대비 1.6%에서 2007년 2%로 증가하였고, 선진국 중 출산율이 평균 이상인 국가들은 저출산 대책 지출에 GDP의 2% 중반 이상을 지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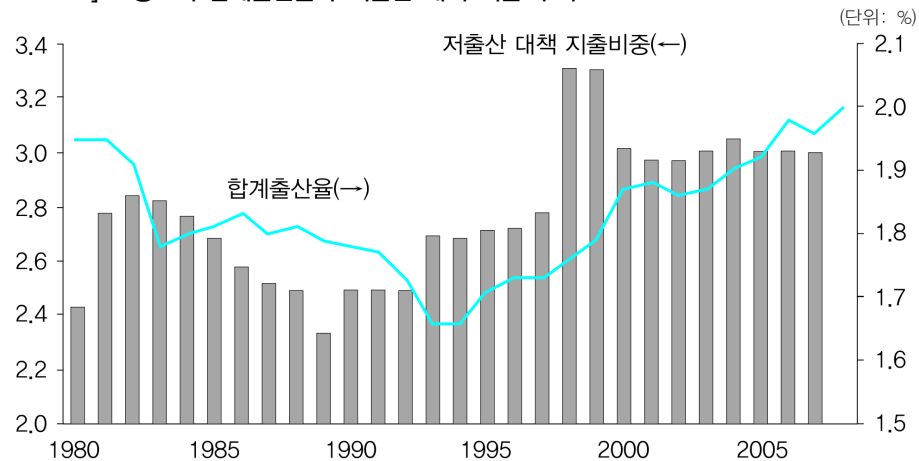
[그림 1-Ⅲ-4] OECD 국가들의 저출산 대책 예산 비교 (%)



주: 평균 이상 국가군은 합계출산율이 OECD 평균 이상인 국가들을 의미, 저출산 대책 예산은 GDP 대비 비중으로 OECD의 'Public social spending on family benefits' 자료 이용
자료: OECD

-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대책 예산은 그동안 평균 29.5%로 다른 재정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해 왔으나, 2009년 저출산 대책 지출규모는 GDP 대비 0.5%에 그침
 - 한국은 2000년에 들어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6년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5년간 42.2조원(저출산 부문에 19.7조원) 투입
 -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2011~2014년에 78.5조원(저출산 부문에 39.7조원) 투입 예정
 - － 계획대로 예산 투입시 저출산 대책 예산은 GDP 대비 0.8%로 상승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
-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저출산 대책 예산 규모를 확대하여 출산율 반등을 위한 지출을 증가시켜야 함
 - 프랑스는 저출산 대책 지출 규모를 늘려 합계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케이스

[그림 1-Ⅲ-5] 프랑스의 합계출산율과 저출산 대책 지출 추이



주: 저출산 대책 지출비중은 G에 대비 비중임.

자료: OECD

- OECD 21개국을 대상으로 94년 이후 자료를 사용하여 패널회귀분석 시행, 저출산 대책의 재출비중이 출산율 사이에 작지만 유의미한 상관관계 발견
 - － 종속변수는 합계출산율, 설명변수는 GDP 대비 저출산 대책 지출 비중, 1인당 GDP, 고용률, 교육비 등 경제상황 및 비용변수 투입
 - － 저출산 대책 예산이 출산율 상승에 미치는 효과는 0.05~0.1 사이로 유의하지만 작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책 효과의 크기가 과거에는 작고 현재로 올수록 증가해 왔기 때문
- 출산율이 반등해야 잠재성장률이 상승하고 그에 따른 국가부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음
 - － 노동생산성 유지, 여성의 경제참여율 상승, 노인부양비율 감소

[그림 1-Ⅲ-6] 패널회귀모형의 추정결과

변수	모형1		모형2	
	회귀계수	p값	회귀계수	p값
상수	0.26	0.57	-2.16	0.00
저출산 대책 예산	0.093	0.00	0.053	0.00
1인당 GDP	0.067	0.57	0.6	0.00
고용률	0.013	0.00	0.01	0.00
교육비	-	-	0.08	0.00

주: OECD 21개국에 대하여 패널회귀분석시킨 결과임. 연도별 확률효과를 가정하여 추정한 결과임. 1인당GDP는 로그화시켜 적용. 교육비는 중등교육 이하까지의 비용임. 교육비를 제외한 모형1의 경우 1994년부터의 자료를 이용한 것이며, 교육비를 포함한 모형2의 경우 97년 이후 자료를 이용 추정된 결과임. p값이 0.05보다 작다는 것은 회귀계수가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

자료: OECD, LG경제연구원

- 따라서 저출산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 필요한 지출
 - － 일본은 고령화 대책에만 집중하고 저출산 대책에는 투자를 적게 하여 현재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음

마. 삼성경제연구소 “2011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반기별 전망” (2010.12)

- 2010년 한국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수출과 투자 확대로 고용상황도 개선되고 있으며, 금융시장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음
 -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이다가 2010년 하반기부터 경기흐름 둔화 시작
 - 향후 경기흐름에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
- 2011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8%(상반기 3.1%→하반기 4.4%)로 예상하여, 2010년 5.9%에서 크게 하락할 전망
 - 대외적 요인: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글로벌 금융 불안요인 상존, 통상마찰 확대 가능성

- 2011년 세계 경제성장률도 3.8%(상반기 3.7%, 하반기 3.9%)로, 2010년 4.6%보다 하락
 - 대내적 요인: 경기부양력 약화, 금리 인상 등 기업과 가계의 채무부담 확대
- 2011년 민간소비 3.6%, 설비투자 5.1%, 건설투자 1.6%, 수출 9.0%, 소비자 물가 2.8%, 실업률 3.5%, 금리 5.1%, 환율 1080원으로 전망
 - 2010년 민간소비는 소득 증가, 양의 자산효과 확대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2011년 민간소비는 고용 개선세 둔화, 이자 지급부담 확대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 2010년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 수요회복에 따른 수출 주력산업의 호황에 힘입어 전년 대비 23.9% 증가하였으나, 2011년 상반기에는 수출 증가세의 약화로 5.9%, 하반기에는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4.4% 증가세에 그칠 전망
 - 2010년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0.4% 감소하였으나, 2011년에는 공공부문의 주택건설 투자에 힘입어 전년 대비 1.6% 증가 예정
 - 2010년 수출은 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여 연간 27.9%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는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선진국과 신흥국의 회복세가 동반 둔화되며 9.0%로 하락 전망
 - 따라서 경상수지 흑자는 171억달러로 축소될 전망
 - 2010년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2011년에는 원화 가치 상승,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2.8% 상승할 것으로 전망
 - 2010년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고용불안감도 진정세에 접어들었으며, 2011년 일자리 창출력은 2010년보다 약화되어 실업률은 3.5%로 전년 대비 0.3%p 하락할 전망
 - 2011년 시장금리는 2010년보다 상승한 평균 5.1%로 전망
 - 2010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로 하락하였는데 2011년에도 달러화의 약세 등으로 인해 환율은 1070원까지 하락할 전망
- 2011년은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성장세의 둔화로 경제 불안정성이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제정책 정상화 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

- 재정건전성 개선과 성장동력 확보를 조화롭게 추구
- 금리정상화를 시도하되 부작용을 최소화

2. 보고서 목록

가. 국제기구

□ IMF

1. Post-Crisis Fiscal Policy Priorities for the ASEAN-5, IMF Working Paper WP_10_252 (1 Nov, 2010)
2. Should Advanced Countries Adopt a Fiscal Responsibility Law?, IMF Working Paper WP_10_254 (1 Nov, 2010)
3. Bilateral Financial Linkages and Global Imbalances: a View on The Eve of the Financial Crisis, IMF Working Paper WP_10_257 (1 Nov, 2010)
4. Private Sector Consumption and Government Consumption and Debt in Advanced Economies An Empirical Study, IMF Working Paper WP_10_264 (1 Nov, 2010)
5. Financial Innovation and Risk, The Role of Information., IMF Working Paper WP_10_266 (1 Nov, 2010)
6. What Cause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 Evidence on the Drivers of Financial Imbalances 1999 - 2007., IMF Working Paper, WP_10_265 (1 Dec, 2010)
7. A Status Update on Fiscal Exit Strategies, IMF Working Paper WP_10_272 (1 Dec, 2010)
8. How Does Trade Evolve in the Aftermath of Financial Crises?, IMF Working Paper WP_11_3 (1 Jan, 2011)
9. Asian Financial Integration: Trends and Interruptions, IMF Working Paper WP_11_4 (1 Jan, 2011)
10. The Impact of Fiscal Consolidation and Structural Reforms on Growth in Japan , IMF Working Paper WP_11_13 (1 Jan, 2011)
11. Trade and Trade Finance in the 2008-09 Financial Crisis, IMF Working Paper, WP_11_16 (1 Jan, 2011)
12. Government Debt Issuance in the Euro Area: The Impact of the Financial Crisis , IMF

Working Paper, WP_11_21 (1 Jan, 2011)

13. Global Shocks and their Impact on Low-Income Countries: Lessons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MF Working Paper, WP_11_27 (1 Feb, 2011)
14.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Global Recovery Advances but Remains Uneven (26 Jan, 2011)
15.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Market Update: Global Financial Stability Still at Risk (25 Jan, 2011)
16. Contingent Capital: Economic Rationale and Design Features, Staff Position Note No. 2011_11 (25 Jan 2011)
17. Emerging from the Global Crisis - Macroeconomic Challenges Facing Low-Income Countries, IMF policy paper (5 Oct 2010)
18. Macro-Fiscal Implications of Health Care Reform in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IMF policy paper (30 Dec 2010)

□ OECD

1. Towards a Less Distortive and More Efficient Tax System in Portugal,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14 (Dec 2010)
2. The Impact of Structural Policies on Saving, Investment and Current Accounts,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15 (Dec 2010)
3. Fiscal-Consolidation Strategies for Canadian Governments,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18 (Dec 2010)
4. The 2008-09 Crisis in Turkey. Performance, Policy Responses and Challenges for Sustaining the Recovery,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19 (Dec 2010)
5. After the Crisis Mitigating Risks of Macroeconomic Instability in Turkey,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20 (Dec 2010)
6. Regulatory Reforms to Unlock Long-Term Growth in Turkey,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21 (Dec 2010)
7. Reforming China's Monetary Policy Framework to Meet Domestic Objectives, OECD

- Economics Department WP No.822 (Dec 2010)
8. Product Market Regulation and Competition in China,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23 (Dec 2010)
 9. Fiscal Decentralisation and Public Investment The Experience of Latin America,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24 (Dec 2010)
 10. Does Fiscal Decentralisation Strengthen Social Capital? Cross-Country Evidence and the Experiences of Brazil and Indonesia,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25 (Dec 2010)
 11. Current Account Imbalances in the Euro Area A Comparative Perspective,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26 (Dec 2010)
 12. Resolving and Avoiding Unsustainable Imbalances in the Euro Area,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27 (Dec 2010)
 13. Minimising Risks from Imbalances in European Banking,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28 (Dec 2010)
 14. Improving Fiscal Performance Through Fiscal Councils,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29 (Dec 2010)
 15. Real House Prices in OECD Countries, The Role of Demand Shocks and Structural and Policy Factors,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31 (Dec 2010)
 16.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10 Issue 2 (Dec 2010)
 17. Making the Dutch Pension System Less Vulnerable to Financial Cris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32 (Jan 2011)
 18. Improving the Flexibility of the Dutch Housing Market to Enhance Labour Mobility,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33 (Jan 2011)
 19. The GDP Impact of Reform. A Simple Simulation Framework,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34 (Jan 2011)
 20. Raising Potential Growth After the Crisis. A Quantitative Assessment of the Potential Gains from Various Structural Reforms in the OECD Area and Beyond,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35 (Jan 2011)

21. Housing Markets and Struc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36 (Jan 2011)
22. The Price Responsiveness of Housing Supply in OECD Countri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36 (Jan 2011)
23. Increasing Public Sector Efficiency in Slovakia,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39 (Jan 2011)

□ World Bank

1. Bank capital : lessons from the financial crisi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no. WPS 5473 (1 Sep, 2010)
2. The financial crisis and its impacts on global agriculture,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no. WPS 5431 (1 Sep, 2010)
3. Public credit registries as a tool for bank regulation and supervision,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no. WPS 5489 (1 Dec, 2010)
4. A framework for analyzing competition in the banking sector : an application to the case of Jordan,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no. WPS 5499 (13 Dec 2010)
5. How large is the 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 ? evidence from World Bank lending,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no. WPS 5500 (13 Dec, 2010)
6. Corporate vulnerability and bank stability : evidence from Jordan,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no. WPS 5502 (13 Dec, 2010)
7. Mortgage lending in Korea : an example of a countercyclical macroprudential approach,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no. WPS 5505 (14 Dec, 2010)
8. Macroeconomic and policy implications of population aging in Brazil,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no. WPS 5519 (3 Jan 2011)
9. Access to financial services and the financial inclusion agenda around the world : a cross-country analysis with a new data set,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no. WPS 5537 (1 Jan 2011)
10. How do governments respond after catastrophes ? natural-disaster shocks and the

fiscal stance ;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no. WPS 5564 (7 Feb 2011)

11. Global Development Finance 2011: External Debt of Developing Countries (Dec 2010)

□ ADB

1. Institutions for Regional Integration: Toward an Asian Economic Community (Dec 2010)
2.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0 Special Note: Strength of Recovery in 2010 is Exceeding Expectations (Dec 2010)
3. ASEAN Economic Integration: Features, Fulfillments, Failures and the Future, ADB WP No. 69 (Dec 2010)
4. Changing Impact of Fiscal Policy on Selected ASEAN Countries, ADB WP No. 70 (Dec 2010)
5. An Agenda for High and Inclusive Growth in the Philippines (Dec 2010)
6. Monetary Policy Discipline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Indonesia, ADB WP No. 238 (Jan 2011)
7. Infrastructure and Growth in Developing Asia, ADB WP No. 231 (Jan 2011)
8. The Impact of Monetary Policy on Financial Markets in Small Open Economies: More or Less Effective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DB WP No. 72 (Jan 2011)
9.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Asia, ADB WP No. 233 (Jan 2011)
10. Drivers of Developing Asia's Growth: Past and Future, ADB WP No.235 (Jan 2011)

□ ECB

1. Level, slope, curvature of the sovereign yield curve, and fiscal behaviour, ECB WP NO.1276 (Dec 2010)
2. Openness and optimal monetary policy, ECB WP No. 1279 (Dec 2010)
3. Can we prevent boom-bust cycles during euro area accession?, ECB WP No. 1280 (Dec 2010)

2010)

4. Non-standard monetary policy measures and monetary developments, ECB WP No.1290 (Jan 2011)

나. 국내학회

□ 한국재정학회 (<http://kapf.or.kr>)

재정학연구 제3권 제4호 (2010. 11)

1. 교육분야 정부지출의 효율성 측정과 결정요인
2.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주요 세목별 세수증대 정책의 귀착효과 비교/김승래
3. 교육분야 정부지출의 효율성 측정과 결정요인/박형수 · 류덕현
4. 우리나라 공공자본의 공간적 배분과 경제성장/이근재 · 최병호
5. 최근 유럽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에 대한 실증분석:유로 존(Euro-zone) 국가들의 재정 정책의 경기대응성을 중심으로/김종희
6. 부동산 양도소득 중과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만우 · 손주현
7. 적정조세 이론과 한국의 조세개혁/전주성

11월 18일 에너지세제 정책 세미나 개최 (2010.11.18)

1. 한국의 에너지 · 환경세제 발전방향/김승래(한국조세연구원)
2. 수송부문에너지 사회적 비용과 정책과제/강만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 전력 및 가스부문 가격정책 개선방향/정한경(에너지경제연구원)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정책토론회 (2010.12.04)

1. Arbitration as Insitution of International Tax Dispute Resolution/김선영(김&장법률사무소)
2.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면제의 효과분석/안종석(한국조세연구원)
3. 혼성회사가 참여한 국제적 인수합병의 조세법적 문제/박종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 국제거래와 조세협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취급방안/김진웅(김&장법률사무소)
5.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소득탈루 추이분석/박명호(한국조세연구원)

□ 한국재정정책학회 (<http://www.public.or.kr>)
(업데이트 없음)

□ 한국지방재정학회 (<http://www.kalf.or.kr>)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5권 제3호(2010년 12월)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학교시설비 지원의 공정성/설인환

□ 한국경제학회 (<http://www.kea.ne.kr>)
경제학연구 제58권 4호 (2010년 12월)

1.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에 선행하여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외국인주식투자자금의 급속한 유출과 단기외채의 급증/장의태
2. 연속적 혁신, 특허 체제와 특허 경쟁/박종국
3. 케이블 TV 산업구조의 가격효과/최인 · 김종민 · 남재현
4. 조선 후기 노비 가격의 구조와 수준(1678-1889)/이우연 · 차명수
5. 글로벌 아웃소싱이 제조업 임금불평등에 미친 영향/남병탁

다. 국내연구소

□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재정포럼

1.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탈루규모 추정/정재호 (2010. 11)
2.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현황과 인력관리 방안/라영재 (2010. 11)
3.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 재정추계/이은경 (2010. 12)
4. 국제조세회피 방지 관련 정보교환 논의와 현안과제/홍범교 (2010. 12)
5.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와 활용: 알리오시스템을 중심으로/허경선 (2010. 12)

6. 재정건전화 지속기간에 관한 분석 및 시사점/송호신 (2011. 1)
7.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의 정책방향/김지영 (2011. 1)
8. 국정과제의 성과관리 현황과 개선방향/원종학 (2011. 1)

세미나 자료

1. 제2회 재정패널 학술대회 발표자료집/한국조세연구원 (2010. 11)
2. 우리나라 준조세 실태 및 정책방향/손원익 (2010. 12)
3. 재정통계 개편안/한국조세연구원 (2011. 01)

기타 연구자료

1.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와 시사점/김진수 외 (2010. 10)
2. 아시아 공기업 지배구조 정책브리프: 개혁을 위한 권고안 (2010. 10)
3.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2010. 10)
4. 기업의 도산 관련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김완석 · 정지선 (2010. 11)
5. KIPF 재정동향 제4호 (2010. 12)
6. KIPF 공공기관 동향 (2010. 12)

□ 국회예산정책처 (<http://www.nabo.go.kr>)

예산분석 보고서

1. 2011년도 예산안 쟁점 분석 (2010.11.15)
2.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2010.11.19)
3. [예산현안분석 제38호]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0.11.29)
4. [법안비용추계 제6호] 「저출산대책특별법안」 재정소요 추계 (2010.12.23)
5. [법안비용추계 제7호] 일자리 만들기 법률안 재정소요 추계 (2010.12.23)

경제분석 보고서

1. NABO 경제동향&이슈(통권 제8호) (2010. 11.29)
2. NABO 경제 및 재정통계(제9호) (2010.12.1)

3. [경제현안분석 제58회] 재정정보 공개 현황 및 개선방안 (2010.12.6)
4. [경제현안분석 59회] 위안화 절상의 영향과 시사점 (2010.12.9)
5. 미국 조세법원에 관한 연구 (2010.12.20)
6. [경제현안분석 제60회] 고령화가 생산성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2010.12.21)
7. NABO 경제 및 재정통계(제10호) (2011.1.4)
8. [경제현안분석 61회] 한·중 신재생에너지 정책 비교와 시사점 (2011.2.1)
9. NABO 경제 및 재정통계(제11호) (2011.02.1)

기타보고서

1. [일자리 정책 연구 제4회]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0.12.3)
2. [일자리 정책 연구 제5회]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2010.12.13)
3. [일자리 정책 연구 제6회]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와 개선과제 (2010.12.14)
4. [일자리 정책 연구-종합]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 (2010.12.21)

포럼/간담회

1. 이중노동시장 구조하의 노사관계 현상과 과제 (2010.11.26)
2. GDP 추계방법 변경과 거시경제모형 (2010.11.30)
3. 세수추계 모형 검토 및 개선방안 (2010.12.3)
4. The Role of the Legislature in Budget Processes :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2010.12.10)
5. R&D 혁신정책의 거버넌스 개편 방안 (2010.12.9)
6. 연령별 세입구조를 고려한 세수추계 (2010.12.17)
7. 재정권 강화 TF 전문가 간담회 - 사전예산제도 (2011.1.7)
8. 사회복지재정 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2011.1.13)
9. 국민연금 장기전망 (2011.1.13)
10. 견제와 위임의 관점에서 본 조세정책 (2011.1.14)
11. 기본법 근거 예산사업과 법조항의 연계성 분석 (2011.1.26)

□ KDI (<http://www.kdi.re.kr>)

보고서

1. Economic Bulletin, November 2010 (2010년 11월)
2. click 경제교육 2010. December (2010년 11월)
3. 나라경제 2010. 12 (2010년 12월)
4. KDI 경제동향 2010. 12 (2010년 12월)
5. Economic Bulletin, December 2010 (2010년 12월)
6. click 경제교육 2011. January (2010년 12월)
7. KDI 북한경제리뷰 2010년 11/12월 (2010년 12월)
8. 나라경제 2011. 1 (2010년 12월)
9. KDI 경제동향 2011. 1 (2011년 1월)
10. Economic Bulletin, January 2011 (2011년 1월)
11.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1월 (2011년 1월)
12. click 경제교육 2010. February (2011년 1월)
13. 나라경제 2011. 2 (2011년 1월)

국제회의/세미나/공청 · 토론회

1. KDI, 「개혁의 실현」 공개 정책토론회 개최 (2010년 12월)

□ 한국은행 (<http://www.bok.or.kr>)

1. 해외경제정보 제2010-46호: 아일랜드 은행위기의 전개과정과 전망/해외조사실 (2010.11.25)
2. 해외경제정보 제2010-47호: 신흥시장국 주가 · 채권가격 · 환율 강세의 배경과 정책대응/종합분석팀 (2010.12.2)
3. 해외경제정보 제2010-48호: 포르투갈 경제의 리스크 요인과 전망/구미경제팀 (2010.12.9)
4. 해외경제정보 제2010-49호: 1990년대 이후의 엔화 강세와 경제에 미친 영향/해외조사팀 (2010.12.16)

5. 해외경제정보 제2010-50호: 1980년대 이후 미국의 환율정책 변화/종합분석팀 (2010.12.23)
6. 해외경제정보 제2010-52호: 2011년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 평가/해외조사실 (2010.12.30)
7. 해외경제정보 제2010-51호: 미국 新재정정책의 영향과 전망/해외조사실 (2011.1.6)
8. 해외경제정보 제2011-1호: 중국의 해외투자 패턴 변화와 향후 전망/아주경제팀 (2011.1.6)
9. 해외경제정보 제2011-2호: 미국의 주택압류(foreclosure) 지속 요인과 전망/구미경제팀 (2011.1.13)
10. 해외경제정보 제2011-3호: 신흥시장국 인플레이션 현황과 정책대응/종합분석팀 (2011.1.20)
11. 해외경제정보 제2011-4호 : EU 공동국채(Euro-bond) 발행 논의와 향후 전망/구미경제팀 (2011.1.27)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보고서

1. 스페인 재정위기 가능성과 향후 전망/이종규, SERI 경제포커스 제319호(2010.12.07)
2.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진로/김용기 외, CEO 인포메이션 제 785호(2010.12.22)
3. 2011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반기별 전망/황인성 외, 연구보고서(2010.12.24)
4. 위기의 지방자치, 민선 5기의 도전과제/박용규 외, 연구보고서(2010.12.28)
5. 2011년 해외 10대 트렌드/구본관 외, CEO 인포메이션 제 786호(2011.01.05)
6. 2011년 국내 10대 트렌드/정영식 외, CEO 인포메이션 제 787호(2011.01.12)
7. 중국 노동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권혁재 · 이정일, 연구보고서(2011.01.13)
8. 최근 물가불안의 원인과 대응책/정진영 외, 연구보고서(2011.01.21)

□ LG 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보고서

1. LGERI 리포트: LGERI의 미래생각(7) 글로벌 경제사회 복합위기 오나/조용수 (2010년

12월)

2. LGERI 리포트: 험난한 유럽의 미래, 필사적인 노력에도 흔들리는 유로화/유승경 (2010년 12월)
3. LGERI 리포트: 2011년 중국 경제 8대 이슈/박래정 (2010년 12월)
4. LGERI 리포트: 2011년 국내경제 전망 (2010년 12월)
5. LGERI 리포트: 2011년 국내외 금융 이슈 (2010년 12월)
6. LGERI 리포트: 2011년 세계경제 기상도(Two Speed World의 리스크와 기회) (2011년 1월)
7. Weekly 포커스: 저출산 예산 너무 적다/강중구 (2011년 1월)
8. LGERI 리포트: 인도 경제를 중국 경제와 달리 봐야 할 8가지 이유/박래정, 홍석빈 (2011년 2월)

□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

보고서

1.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개선방향/김필현(2010.12.6)
2. PIIGS 국가부도 위기의 교훈/김필현(2010.12.24)
3.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11년 1월호 [Vol.21-1]/(2011.1.10)

□ 자유기업원 (<http://www.cfe.org>)

CFE 리포트

1. 전세대란과 한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 [1]/조주현(2010.12.2)
2. 이명박 정부의 기로에 선 감세정책: 감세철회 논쟁/조동근(2010.12.9)
3. 북한 연평도 도발사건과 관련한 방송3사 보도태도 분석/이동훈(2010.12.16)
4. 노동시장의 새로운 모형과 질서/김태기(2010.12.24)
5. 물류산업의 오해와 이해/전재완(2011.1.13)
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과 기능/황수연(2011.1.27)

□ 국가경영전략연구원 (<http://www.nsi.or.kr>)

1. [제689회]집권 후반기 MB정부의 과제/이재오(2010.11.24)
2. [제691회]2011년 한국경제 - 계속되는 세계경제 불안의 와중에서/김영용(2010.12.8)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1. EU 로비제도(European lobbying)의 현황과 사례 연구/강유덕(2010년 11월)
2.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 증가와 단기자본 규제/박복영 · 오승환 · 양다영(2010년 11월)
3. 서울 G20 정상회의 결과와 향후 과제/윤덕룡 · 오승환(2010년 11월)
4. 중국의 외환정책과 국제통화질서: 위안화의 절상과 국제화를 중심으로/조종화 외(2010년 12월)
5. 중국의 외환정책과 국제통화질서: 위안화의 절상과 국제화를 중심으로/권율 · 박수경(2010년 12월)
6.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남부/김봉훈 외(2010년 12월)
7.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동부/김봉훈 외(2010년 12월)
8.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북부/김봉훈 외(2010년 12월)
9.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서부/김봉훈 외(2010년 12월)
10. 한 · 중미 개발협력방안 연구/김영철 외(2010년 12월)
11.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와 APEC의 경제통합과제/김상겸 외(2010년 12월)
12. 우리나라의 환율변동 요인분석과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윤덕룡 · 김소영 · 오승환(2010년 12월)
13. 새로운 국제금융 질서하에서 동아시아 금융협력 방안/박영준 외(2010년 12월)
1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채권시장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허인(2010년 12월)
15. 중국의 경기순환 및 거시경제정책: 구조적 특징과 시사점/지만수 · 박월라 · 이승신(2010년 12월)
16.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미 · 중 경제관계/이장규 외(2010년 12월)
17. 주요국의 저출산 · 고령화 대비 성장전략 연구와 정책 시사점/김양희 외(2010년 12월)

18.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금융 - 금융산업 현황과 협력방향/정계룡 외(2010년 12월)
19. 인도의 산업발전전략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한국과 인도 간 경제협력 강화에 주는 교훈과 함의/장지호 · 김정렬 · 조영희(2010년 12월)
20. 인도 지역사회와 경제특구에 대한 연구: 경제적 · 사회적 ·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이규태 · 배지연 · 허울(2010년 12월)
21. 한 · 중 · 일 역내 직접투자 동향과 활성화 방안/정형곤 외(2010년 12월)
22. 유로존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김홍중 외(2010년 12월)
23. 한 · 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20년: 새로운 비전과 실현방안/이재영 외(2010년 12월)
24. 한 · 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김진오 외(2010년 12월)
25. 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응방안/김태운 외(2010년 12월)
26. 아프리카 주요국 경제현황 및 중점 협력분야: 가나 · 콩고(DRC) · 남아공 · 에티오피아/박영호 · 김민희 · 전해린(2010년 12월)
27.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분석과 한국의 진출 방안/조영관 외(2010년 12월)
28.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중앙아시아: 경제 · 자원 · 과학(2010년 12월)
29.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현황과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 연구/김태운 · 이재호(2010년 12월)
30. 아세안의 경제발전과 한 · 아세안 개발협력/권율 외(2010년 12월)
31. 한 · 중남미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권기수 외(2010년 12월)
32. 중남미 의료시스템 개혁 연구/임상래 · 이상현 · 박윤주(2010년 12월)
33. 2011년 세계경제 전망(요약)(2010년 12월)
34. 아일랜드 구제금융의 배경과 위기확산 가능성 전망/강유덕 · 오태현 · 오현정(2010년 12월)
35. 2011년 세계경제전망: 국제거시금융환경(2010년 12월)
36. 2011년 중국의 경제정책 전망과 발전전략 조정/북경사무소(2010년 12월)
37. 2011년 중국 경제 전망과 12차5개5년 계획의 핵심 정책/북경사무소(2010년 12월)
38. 2011년 세계경제 전망: 세계지역경제(2011년 1월)

□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kif.re.kr>)

보고서

1. 콜시장의 지준시장화에 따른 콜금리 움직임 분석/임형석 (2010.11)
2. 금융위기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한 통화신용정책/하준경 (2010.12)
3. 금융개혁에 대한 신흥국의 시각 - “민간부문과의 대화”/한국금융연구원 (2010.12)
4. 지급결제기능과 금융시스템의 안정/김자봉 (2010.12)
5. 국내은행의 스트레스테스트 활용 현황과 개선방안/서정호 (2010.12)
6. 시스템 리스크를 감안한 추가 규제자본금의 추정에 관한 연구/김자봉 외 (2010.12)
7. 서민금융과 금융시스템 : 서민금융 공급시스템의 중장기 정책과제/이건호 (2010.12)
8. 금융그룹의 매트릭스 조직에 관한 연구/김자봉 외 (2012.12)
8.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리스크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구정한 외 (2011.1)
9. 해외주식투자 환헤지에 대한 연구/임형준 (2011.1)

세미나

1. State of the World Economy, 2011-2012: Whither or Wither? (2010.11.18)
2. 「금융정책 릴레이 토론회 - 제 1차 토론회-」(2010.11.23)
3. 금융위 출입기자단 세미나 (2010.12.03)
4.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국내 금융규제환경 변화 (2010.12.07)
5. 새로운 글로벌 금융환경과 한국금융의 발전전략 (2010.12.13)
6. 김종수 한국은행 총재 초청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 (2011.1.19)

제 2 부 주요국의 재정동향

I. 주요국 동향

II. 미 국 (FY2011: 2010.10~2011.9)

III. 일 본 (FY2011: 2011.4~2012.3)

IV. 영 국 (FY2010-11: 2010.4~2011.3)

V. 프랑스 (FY2011: 2011.1~2011.12)

VI. 독 일 (FY2011: 2011.1~2011.12)

VII. 캐나다 (FY2010-11: 2010.4~2011.3)

VIII. 호 주 (FY2010-11: 2010.7~2011.6)

I

주요국 동향*

- 미국과 일본은 성장동력 확충 방안을 담은 예산안 FY2012, FY2011을 발표하였음
 - 미국의 FY2012 예산안(2011.10~2012.9)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 및 향후 10년간 재정적자 감축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재정건전화 목표는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받음
 - － 경제성장과 미래 경쟁력을 제고시킬 분야(교육, 인프라, R&D)에 대한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
 - － 2021년까지 재정적자를 3.1%로 낮추겠다는 목표(2010년 현재 11%)는 실현 가능한 것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가정으로 하여 설정
 - － 베이붐세대가 은퇴하고 연금과 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재정적자 감축 계획은 수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 일본은 2011년에도 경제성장률이 1% 초반으로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성장과 고용’의 예산기조하에 신성장전략의 지속적인 추진 및 경기회복에 중점을 둔 FY2011 예산안(2011.4~2012.3) 발표
 - － 국제 경쟁력 확보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 고용확대를 위해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 부여
 - － 사회보장비를 전년 대비 5.3% 증가시켜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한 데 반해 다른 지출항목들(특히 공공사업, 지방교부금, 경제긴급대응 예비비 등)을 대대적으로 삭감하여 총지출 증가율은 0.1%에 그침
 - －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규 국채발행액 억제 등 재정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정책을 취함

* 이은경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eklee@kipf.re.kr)

- 독일이 발표한 FY2011 예산안과 영국의 재정법 2011, 그리고 프랑스의 세제개편은 재정 건전화에 중점을 둔 내용을 담고 있음
 - 독일은 FY2011 예산안(2011.1~2011.12)에서 세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노동 및 사회보장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8.3% 삭감하고, 독일정부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로 국가 재정건전화를 지목
 - 2011년까지 마스트리히트 재정수지 기준 목표(GDP 대비 3.5%) 달성에의 의지 고취
 - 2011년 예산은 성장 지향적 출구전략을 반영
 - 프랑스는 FY2010 4차 수정예산 및 FY2011 본예산(2011.1~2011.12)에서 부동산세 간소화, 환경세 부과, 담배세 인상, 세정 강화 및 세제 간소화, 각종 세제혜택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건전화에 주력
 - FY2011 사회보장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하고, 연금개혁, 의료비지출 증가율 통제 등 복지혜택 축소
 - FY2011-2014 중기재정에서 재정적자 삭감 목표 명시: 2010년 7.7% → 2011년 6% → 2014년 2%
 - 중기 재정건전화 방안으로 지방정부 재정건전화, 세제지원 혜택 축소 및 폐지, 지출통제 정책을 제시
 - 영국의 재정법안 2011은 소득세 관련 세제혜택 축소, 행정시스템 정비 등 재정건전화 내용을 담고 있음
 - 그러나 영국은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사전예산안 제도 폐지, 지난 겨울부터 2번의 추경을 통해 지출을 증액하는 등 재정건전화에 반하는 정책도 시행
- 캐나다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가계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는 것 이외에 특별한 경기부양 혹은 재정건전화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 않음
- 호주는 수해지역 재건을 위해 추가 소득세 형태의 한시적인 특별세 도입 및 예산절감액 투입 예정

II

미국 (FY2011: 2010.10~2011.9)

1. 세제개편

□ '10.12월 오바마 대통령 2010 감세연장법(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 of 2010) 서명

○ 동법은 2010년 말 종료되는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을 한시적으로 2년 연장하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함

－ 그 외 2011년 말까지 실업수당 연장과 사회보장세 1년간 2%p 인하, 자본소득세·배당소득세 세율을 현행수준(15%)으로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

○ 오바마 대통령은 그간 연소득 25만달러 미만 소득자에 대해 감세조치를 연장하고,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감세조치를 종료할 것을 주장하여 왔으나

－ '10.11월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패한 후 12월 초, 부유층을 포함한 전 소득계층에 감세혜택을 부여하는 공화당의 주장을 수용

－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부유층 감세연장 등을 양보한 것에 대한 답례로, 반대입장을 보였던 실업급여 연장과 사회보장세 인하 등 현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합의

□ FY2012 예산안 주요 세제개편안

○ 중산층에 대한 감세정책을 영구화하고 지난해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였던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정책과 유산세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방침

－ 연소득 25만달러(부부합산)/20만달러(독신)의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정책을 2012년 이후에는 폐지

－ 유산세는 일몰종료 후 2009년 수준인 최고세율 45%, 면세한도 350만달러 회복

SECTION 2 >>

〈표 2-Ⅱ-1〉 유산세 연도별 공제한도 및 최고세율

(단위: 백만달러,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면세한도	1	1	1.5	1.5	2	2	2	3.5	— ¹⁾	5	5
최고세율	50	49	48	47	46	45	45	45	0	35	35

주: 1) 유산세 폐지

- 대체최저한세(AMT)를 2014년까지 연장하여 운영하되, 고소득층(부부합산: 25만달러, 독신: 20만달러)에 대해 항목별 공제한도를 최대 28%로 제한
- 조세 체계 단순화, 법인세율 인하 등 법인세 개혁 제안
- 대형 금융기관의 과도한 레버리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책임금 부과
 - 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의 대형 금융기관에 금융위기책임금을 부과하여 향후 10년간 약 300억달러 징수

2.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 2011.2월 오바마 대통령은 올 10월부터 시작되는 FY2012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 총 3조 7,290억달러 규모의 이번 예산안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와 재정적자 감축에 주안점으로 두고 작성
 - － 교육, 산업, 청정에너지, 인프라 등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분야에 지출 확대
 - － 재정건전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1조 1천억달러(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전비를 포함한 안보지출 절감분 제외)의 재정적자 절감

〈표 2-Ⅱ-2〉 FY2012 예산안 예산총량 전망

(단위: 십억달러,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재정수입	2,174	2,627	3,003	3,333	3,583	3,819	4,042	4,257	4,473	4,686	4,923
재정지출	3,819	3,729	3,771	3,977	4,190	4,468	4,669	4,876	5,154	5,422	5,697
재정적자	1,645	1,101	768	645	607	649	627	619	681	735	774
GDP 대비 %	10.9	7.0	4.6	3.6	3.2	3.3	3.0	2.9	3.0	3.1	3.1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2, OMB, 2011.2

- (국가경쟁력 제고)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에서도 경제성장과 미래 경쟁력을 제고시킬 분야에는 예산을 확대 배정
 - (교육) Pell Grant 장학금 최대 수혜액 5,550달러를 지속 유지, 향후 10년간 10만명의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사 양성 등 지원
 - (산업)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연구개발 일반과 생의학 연구 지원, R&D 세액공제의 단순화, 범위 확대, 영구화 등 제안
 - (인프라) 도로, 교량, 고속철도, 건물,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등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는 인프라 개선에 투자
- (재정건전화)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분야를 제외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재정적

SECTION 2 >>

자 삭감을 위한 고통분담

- (세출측면) 5년간 비안보 재량지출 동결, 200여개의 재정사업 종료 및 삭감, 향후 5년간 국방비 지출 계획에서 780억달러 삭감 등
- (세입측면) 지난 12월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정책과 유산세 기한대로 종료, 대체최저한세(AMT)를 2014년까지 연장하여 운영하되, 고소득자에 대해 항목별 공제한도를 28%로 제한

나. 추경

□ 해당사항 없음

다. 결산

□ 2010.12월 FY2010 발생주의 회계기준 결산자료 발표

- 2010.10월 발표된 FY2010 현금주의 결산*과 달리, 발생주의 회계기준 결산에서는 전 회계연도에 비해 순운영비용 확대

* 현금주의 재정적자: (FY2009)1조 4,171억달러 → (FY2010)1조 2,941억달러

- 연방 공무원 및 재향군인 연금의 추정비용이 증가되고 Fannie Mae 및 Freddie Mac 등 정부지원기업(GSEs)에 대한 지출 전망으로 순운영비용 확대

〈표 2-Ⅱ-3〉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결산 비교

(단위: 십억달러)

	2010	2009
순운영비용(Net Operating Cost)(A)	-2,080.3	-1,253.7
Change in:(B)		
Liabilities for Veteran's Compensation	223.8	-149.2
Liabilities for Military and Civilian Employee Benefits	279.3	114.0
Liabilities for 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s	268.0	78.1
Downward Reestimate for TARP(C)	86.4	-110.0
Other, Net(D)	-71.3	-96.3
현금주의 재정적자(E=A+B+C+D)	-1,294.1	-1,417.1

자료: 2010 Financial Report of the U.S. Government

3.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

1) 재정위원회 보고서 발표

- 2010.12월* 재정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Fiscal Responsibility and Reform)는 2015년까지 기초재정수지(이자지급을 제외한 재정수지) 균형 달성과 장기 재정건전성 개선을 목표로 재정건전화 방안을 담은 보고서 발표

* 지난 2010.2월 재정위원회 설립을 위한 대통령령에는 위원회가 중장기 재정건전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12월 1일까지 표결하도록 명시

- 2015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GDP 대비 2.3%로 줄이고, 2020년까지 재정적자를 4조 달러 가량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
- 재량지출 삭감, 광범위한 조세개혁, 보건의료비용 인상 억제, 기타 의무지출제도 개선, 사회보장제도 개혁, 예산 수립과정 개선의 6개 부문 개혁과제를 제시

- 재정위원회의 재정건전화 방안은 의회 상정을 위해 필요한 찬성 14표를 얻지 못하여 부결

- 보고서의 제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총 18인의 위원 중 14인 이상의 찬성을 통한 의결이 필요하나, 표결(12.3일)에서 찬성 11표로 의회 상정을 위한 14표에 미달하여 부결

- 다만, 재정건전화의 필요성이 절실한 만큼 재정위원회의 방안은 올해에도 표면화될 가능성 존재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상기 세제개편 내용 중 2010 감세연장법(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 of 2010)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표 2-Ⅱ-4〉 2010 감세연장법 주요 내용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율	▪ '10.12월 일몰 예정이던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인 개인소득세율 10%, 15%, 25%, 28%, 33%, 35%를 2012년까지 연장 ※ 예정대로 일몰 종료되었다면 개인소득세율은 15%, 28%, 31%, 36%, 39.6%로 회귀
	세액공제	▪ 근로장려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입양세액공제(adoption tax credit), 부양가족세액공제(dependent tax credit) 등 근로 가족과 아동에 관련된 조세혜택 일몰 시효 2012년까지 연장
법인세		▪ 내국세법 §168(k)의 50% 보너스 감가상각규정이 2011년에는 100%까지 범위 확대 ▪ 내국세법 §41의 연구세액공제는 2009년에 일몰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11년 12월까지 연장 적용 ▪ 일자리 기회 세액공제(Work Opportunity Tax Credit)¹⁾의 일몰기한 2011년까지 연장
기타		▪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2011년 임금에 대해 2%p 인하 ▪ 실업수당 13개월 연장

주: 1) 푸드 스탬프, 생활보조금(SSI) 수급자 등 동 프로그램에서 지정한 취약계층 그룹에 속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

다. 기타 정책이슈

1) 2011.1월 하원, 의료보험 개혁법 폐지 법안 통과

-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 하원에서 의료보험 개혁법 폐지안 통과
 - 1.19일 공화당이 발의한 의료보험 개혁법 폐지안은 찬성 245, 반대 189로 통과
 - 이는 작년 3월 발효된 의보개혁법을 폐지하는 법안으로, 공화당은 지난 중간선거의 주요공약을 이행
-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 개혁법 폐지 노력은 사실상 성공하기 힘들 전망
 -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유지하고 있고, 설령 상원에서 가결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

2) 의회예산처(CBO) 경제 및 재정전망 보고서 발표

□ 2011.1월 의회예산처(CBO)는 경제 및 재정전망 보고서(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1 to 2021)를 발표

- (경제전망) 경기부양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는 있지만 당분간 경제성장과 고용은 최근 수년간의 잠재수준을 밑돌 전망
 - － 기업투자 및 순수출 증가와 함께 소비자 지출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며 작년 12월 감세조치 연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개선될 전망
 - － 투자지출 증가에 힘입어 실질 GDP가 증가하여 아웃풋 갭은 2016년 전반기에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2017~2021년에는 잠재GDP 성장률과 동일한 비율로 실질 GDP 성장

〈표 2-Ⅱ-5〉 경제전망(2010년~2021년)

(단위: %)

	2010	2011	2012	2013-2016 평균	2017-2021 평균
실질 GDP ¹⁾	2.5	3.1	2.8	3.4	2.4
소비자물가지수(CPI-U) ¹⁾	1.2 ³⁾	1.3	1.3	2.0	2.3
실업률 ²⁾	9.6 ³⁾	9.2	8.2	5.3 ⁴⁾	5.2 ⁵⁾

주: 1) 전년 4/4분기 대비 변화율

2) 4/4분기

3) 2010년 확정치

4) 2016년 전망치

5) 2021년 전망치

자료: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1 to 2021

- (재정전망) 경제성장과 더불어 실업급여 연장 등 일몰조항이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FY2011 이후 재정적자는 현저히 감소할 전망
 - － 다만, FY2011에는 작년 12월 감세조치 연장 등이 세입증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경기회복으로 줄어든 세출을 초과하는 지출증가로 재정수지는 전년보다 악화될 전망

SECTION 2 >>

〈표 2-Ⅱ-6〉 재정전망(FY2011~FY2021)

(단위: GDP 대비 %)

	2010 ¹⁾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재정수입	14.9	14.8	16.3	18.8	19.9	20.1	20.0	20.3	20.4	20.5	20.7	20.8
재정지출	23.8	24.7	23.3	23.1	23.0	23.1	23.5	23.4	23.3	23.7	23.9	24.0
재정수지	-8.9	-9.8	-7.0	-4.3	-3.1	-3.0	-3.4	-3.1	-2.9	-3.2	-3.2	-3.2

주: 1) 2010년 확정치

자료: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1 to 2021

3) 관리예산처(OMB) 인사

□ 2010.11월 신임 관리예산처장으로 Jacob Lew 부임

- 관리예산처는 작년 7월 Peter Orszag 관리예산처장 사임 이후 이번 인사 전까지 Jeffrey Zients 처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 새로 부임한 Jacob Lew 관리예산처장은 1998년에서 2001년(클린턴 행정부)까지 관리예산처장을 역임한 경력을 소유
 - 당시 3회계연도 동안 재정수지 흑자를 실현한 인물

Ⅲ

일본 (FY2011: 2011.4~2012.3)

1. 세제개편

- 일본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고용촉진 등을 위해 2011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 (2010.12.16)
 -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은 디플레이션 탈피와 고용 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회복, 납세자 보호를 위한 개혁, 지역주권 확립을 위한 지방세 제도 개혁 등으로 요약됨
 - － 이러한 세제개편안은 2010년 9월 발표된 「신성장전략 실현을 위한 3단계 경제대책」 중 3단계 조치에 해당하며 자세한 내용은 ‘재정동향 제4호’를 참조
 - 기업의 경쟁력 제고,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대법인 및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12년만에 각각 4.5%p, 3%p 인하할 계획임
 - － 대법인의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실효 법인세율은 5.05%p 인하(40.69% → 35.64%) 되는 효과가 기대
 - 고용 확대를 위해 고용촉진세제를 도입하여 고용을 일정수준 이상 증가시키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
 - － 당해 사업연도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도 말에 비해 10% 이상 증가하고, 5인 이상(중소기업의 경우 2인 이상) 증가한 경우 1인당 20만엔 공제
 - － 단, 공제한도는 당기 법인세액의 10%(중소기업의 경우 20%)임
 - 환경관련 투자촉진세제를 도입하여 탄소 배출 저감이나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에 기여하는 설비를 취득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상각함
 - － 설비 취득가액의 30%(중소기업의 경우 취득가액의 7% 세액공제 선택 가능)
 - － 단, 공제한도는 당기 법인세액의 20%이며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는 1년간 이월공제가 가능

SECTION 2 >>

- 한편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 조치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소득층의 세금 공제 축소, 조세특별조치 항목의 정비, 환경세 등을 인상하는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증세 조치도 병행할 계획
- 2011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법인세율 인하 조치 등으로 평년 및 초년도 기준으로 각각 646억엔, 3,061억엔 감소할 전망
 - － 재무성은 법인세율 1%p 인하시 세수가 0.3조엔 감소할 것으로 추정
 - ⇒ 경과: 국회 제출 (2011.1.25)

〈표 2-Ⅲ-1〉 2011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

(단위: 십억엔)

개정사항	평년도	초년도	비고
1. 법인세	-775.8	-428.4	감세
(1) 법인세율 인하	-1,219.4	-807.6	감세
(2) 과세기반 확대 등	584.9	438.6	증세
① 감가상각제도의 재검토	178.0	116.4	
② 결손금 이월공제제도의 재검토	178.8	143.0	
③ 에너지수급 구조개혁추진투자촉진세제의 폐지 등	228.1	179.2	
(3) 정책감세	-113.9	-40.2	감세
① 중소기업 등의 경감세율 인하	-67.1	-14.8	"
② 고용촉진세제 도입	-36.5	-13.9	"
③ 환경관련 투자촉진세제 도입	-24.9	-19.5	"
④ 조세특별조치 항목의 정비	21.9	9.1	증세
(4) 기타	-27.4	-19.2	감세
① 공익법인 등의 법인세율 인하 등	-30.8	-21.6	"
② 의료용기기 등의 특별상각제도의 재검토 등	3.4	2.4	증세
2. 개인소득세	216.2	35.8	증세
(1) 급여소득 및 부양공제, 퇴직소득과세 등의 재검토	211.2	35.6	증세
(2) 기타	36.1	0.2	
3. 재산세	282.7	87.6	증세
(1) 상속세 · 증여세의 재검토	280.2	100.3	증세
① 상속세 기초공제 인하	235.5	78.5	"
② 상속세 세율(최고세율 50%→55% 인상) 재검토 등	59.1	34.1	"
③ 증여세 세율 완화 등	-14.4	-12.3	감세
(2) 기타	2.5	1.7	
4. 소비세	219.8	9.4	증세
(1) 지구온난화대책을 위한 환경세 등	246.1	35.7	증세
(2) 항공기 연료세율 인하	-26.3	-26.3	감세
5. 기타 과세	-7.5	-10.5	감세

출처: 재무성, 「平成23年度 税制改正(内国税関係)による増減収見込額」, 2010.12.16.

2. 예산, 결산, 추경

가. FY2011 예산안 (FY2011: 2011.4~2012.3)

- 일본정부는 2010년 6월 발표된 「신성장전략」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경제회복에 중점을 둔 FY2011 예산안을 발표 (2010.12.24)
 - FY2011 예산안은 ‘성장과 고용’이라는 예산기조하에 「신성장전략」 실현을 위한 3단계 경제대책」중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며, 민주당의 정책공약 이행, 재정규율 준수 등에 중점
 -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FY2010 예산 대비 1,124억엔(0.1%) 증가한 92조 4,116억엔으로 사상 최대 수준
 - (세입내역) FY2011 세입은 재정건전화 추진을 위한 「재정운영전략」(2010.6)에 따라 신규 국채발행액이 전년도 수준인 44.3조엔으로 억제되어 있으며 세수는 기업경기 회복 등으로 소폭 증가
 - － 조세 및 인지수입은 기업실적 회복에 따른 법인세 증가(1.8조엔) 및 소득세 증가(0.9조엔) 등으로 전년 대비 3.5조엔(9.4%) 증가한 40.9조엔 수준으로 전망
 - － 세수부족에 따른 신규 국채발행액은 재정건전화 조치에 따라 44.3조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년대비 마찰가치로 세수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
 - (세출내역) FY2011 세출 부문에서는 급속한 인구고령화 대비 및 민주당 정책공약 이행을 위한 사회보장비(아동수당 등)가 크게 증가하고 공공사업비는 대폭 삭감
 - － 분야별로는 사회보장비가 전년 대비 1.4조엔(5.3%) 증가한 28.8조엔 규모로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한 반면 공공사업비는 대폭 삭감됨
 - － 사회보장비 중 정책공약 이행 예산은 3.6조엔으로 전년 대비 0.5조엔 증가⁴⁾
 - (국가채무) 재정건전화 조치에 따라 신규 국채발행을 억제함에도 불구하고 FY2011 말 국가채무 수준은 892조엔(2009년 GDP 대비 184%)에 달할 전망
- ⇒ 경과: 국회 제출 및 심의 개시(2011.1.24)

4) 민주당 정책공약(manifesto)상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예산 소요액은 2013년까지 총16.8조엔 규모로 이 중 FY2011 일반회계 집행규모는 3.6조엔(아동수당 2.2조엔, 농가소득 보상 0.6조엔, 고교 수업료 무상화 0.4조엔 등) 수준임

SECTION 2 >>

〈표 2-Ⅲ-2〉 FY2011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단위: 십억엔, %)

구 분	추정(A)	전망(B)	(B-A)	(%)
	FY2010	FY2011	비교증감액	증감률
세 입				
조세 및 인지수입	37,396.0	40,927.0	3,531.0	9.4
세외수입	10,600.2	7,186.6	-3,413.6	-32.2
국채발행	44,303.0	44,298.0	-5.0	-0.0
계	92,299.2	92,411.6	112.4	0.1
세 출				
일반세출	53,454.3	54,078.0	623.7	1.2
－ 사회보장비	27,268.6	28,707.9	1,439.3	5.3
－ 공공사업비	5,773.1	4,974.3	-798.7	-13.8
－ 경제위기대응비	1,000.0	810.0	190.0	-19.0
지방교부세 등	17,477.7	16,784.5	693.2	-4.0
국채상환비 등	20,649.1	21,549.1	900.0	4.4
계	92,299.2	92,411.6	112.4	0.1

출처: 재무성, 「平成22年度予算政府案」, 2010.12.24

나. FY2010 추경 (FY2010: 2010.4~2010.3)

□ 2010년 10월 8일 발표된 「엔고·디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급종합대책」 실시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FY2010 1차 추경안 발표 (2010.10.26)

○ 동 대책은 「신성장전략 실현을 위한 3단계 경제대책」(2010.9.10)중 2단계 조치로 디플레이션 극복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4조 8,513억엔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

－ 1단계 조치는 급격한 엔화강세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자 「경제위기대응·지역활성화 예비비」(9,179억엔) 활용 (2010.9.24)

－ 단계별 경제대책의 세부 내용은 ‘재정동향 제4호’를 참조

○ 추경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대책 등(3.1조엔)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주로 사회간접자본 정비,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등에 투입

⇒ 경과: 국회 제출(2010.10.29) 및 심의개시(2010.11.2), 예산성립(2010.11.26)

〈표 2-Ⅲ-3〉 FY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내역

(단위: 십억엔)

세 출	금 액	세 입	금 액
「엔고·디플레이션대응을 위한 긴급종합경제대책」	4,851.3	조세 및 인지수입	-2,247.0
－ 고용·인재육성	319.9		
－ 신성장전략의 추진	336.9		
－ 보육, 의료, 연금 등	1,123.9		
－ 지역활성화, 중소기업대책 등	3,070.6		
기타경비	196.8	세외수입	-18.3
국채정리기금 특별회계	812.3	국채발행	-
기본경비 감액	-1,431.3	전년도 잉여금	2,200.5
계	4,429.2		4,429.2

출처: 재무성, 「平成23年度補正予算」, 2010.10.26.

다. 결산

□ FY2009 결산은 2010년 7월 30일 발표, 11월 19일 국회에 제출되었고, FY2010 결산은 2011년 7월 발표될 예정

○ FY2009 결산 내용은 ‘재정동향 제3호’를 참조

3.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

- 최근 재정건전화 정책은 2010년 6월 발표된 「재정운영전략」에 근거하여 실시중
 - 자세한 내용은 ‘재정동향 제3호’를 참조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1) 「신성장전략 실현을 위한 3단계 경제대책」중 3단계로서 FY2011 세제개편안 발표 (2010.12.16)

- 「신성장전략 실현을 위한 3단계 경제대책」중 3단계로 2011년 세제개편안을 발표 (2010.12.16)
 - 국제 경쟁력 확보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5%p 인하(중소기업의 경우 경감세율 3%p 인하)
 - 세부내용은 전술한 ‘1. 세제개편’ 내용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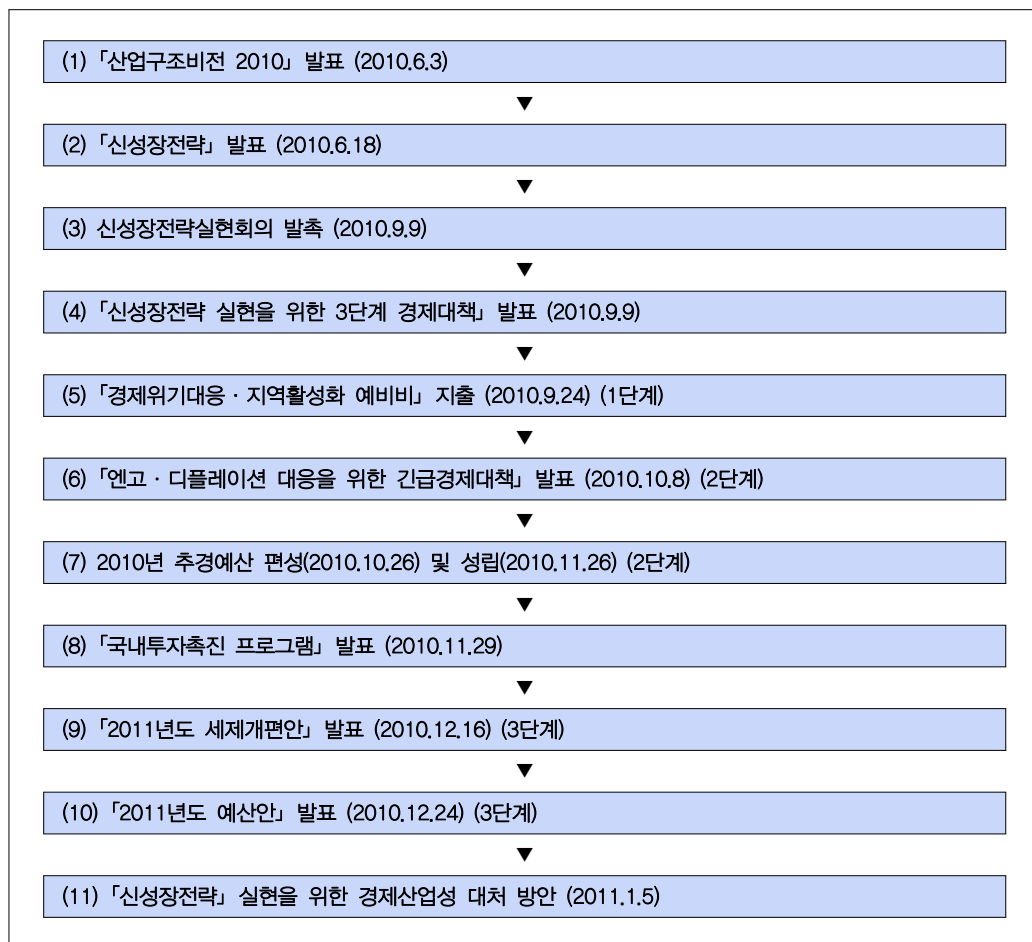
- 2) 경제산업성, 「신성장전략」 실현을 위한 대처 방안 발표 (2011.1.5)

- 경제산업성은 2010년 6월 발표된 「신성장전략」 실현을 위해 현재 진전 내용과 향후 과제를 정리하여 발표함
 - 국제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고 사업활동 거점으로서의 이점 강화
 - 새로운 성장을 주도하는 전략 분야: 고기능 단품 물건을 파는 산업에서 시스템 판매, 과제 해결형, 문화 부가가치 산업에 중점
 -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활성화: 다양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개
 - 기술 가치에 연결하는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 전략 추진

- 동 방안 중 국제경쟁력 우위와 사업 활동 거점 확보 차원에서 외국계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감면 등 투자 유치 대책을 포함

- 유치 대상 기업 선정 조건은 「아시아 거점화 추진 법안」을 1월 국회에 제출할 때 정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외국계기업의 아시아본사와 연구개발센터를 각각 15개씩 유치할 예정
- 선정된 외국계기업에 대해서는 실효 법인세율을 5년간 28.5%(현재 2011년 세제개정으로 약 35% 수준)로 인하하고 특허료, 심사청구료 등도 절반으로 감면해줄 예정
- 동 정책 실시를 위해 25억엔의 예산을 마련하여 초기투자를 지원할 계획임

〈참고〉 일본 경제대책과 산업정책의 흐름도



출처: 경제산업성, 「新成長戦略の実現に向けた経済産業省の取組」, 2010.10.26.

다. 기타 정책이슈

- 니혼게이자이신문, 올해 노인 복지 예산이 9.9조엔(135조원) 부족하다고 보도 (2011.1.4)
 - 현재 일본정부는 노인 복지 예산을 소비세수로 충당하고 있으나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매년 자연 증가 비용이 커지고 있는 상황
 - 이는 정부가 전면적인 세제개혁을 연기해온 결과로, 소비세율을 현재 5%에서 12%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 제기
 - 간 나오토 총리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비세 인상 등 재원 마련 문제를 포함한 사회 보장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
- 각료회의, 경제전망 및 경제재정운영의 기본 방향 발표 (2011.1.24)
 - 2010년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으나 수출 호조와 수요 및 고용창출 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은 3.1% 정도로 3년만에 플러스 성장이 예상됨
 - 2011년은 「신성장전략실현을 위한 3단계 경제대책」중 마지막 단계로 ‘성장과 고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나 세제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디플레이션 탈피와 경제회복에 주력할 방침
 - － 세부적으로는 ‘3단계 경제대책’의 1~2단계를 더욱 강화, 3단계로서 예산 및 세제 등을 활용하여 단기적으로 경제 회복, 나아가 중장기적인 공급측면의 성장제약 완화, 엔고 및 디플레이션 상황에 대한 환율 및 금융 지원
- S&P, 일본의 높은 재정적자 지속 및 향후 재정건전성 악화 전망에 따라 장기국채 등급을 ‘AA’에서 ‘AA-’로 하향 조정 (2011.1.27)
 - 2010년 1월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된 데 이어 불과 1년여 만에 신용등급 자체가 한 단계 하향 조정된 것으로 2002년 이후 처음⁵⁾
 - S&P는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이 예상보다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와 같은 조

5) 『제정동향』 제2호에 수록된 ‘일본 신용등급 하향조정’ 관련 내용은 등급 자체가 아닌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된 내용으로 수정

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짐

－ 특히 현 민주당 정권의 국가채무관리에 대한 정책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

－ 디플레이션의 지속,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가 등도 일본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평가

○ 반면 일본의 높은 대외순자산 수준 및 금융부문 유연성이 재정문제를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 유지

IV

영국 (FY2010-11: 2010.4~2011.3)

1. 세제개편

1) 은행세 도입

- 2011년 은행세(Bank Levy) 세율 인상으로 연간 25억파운드 세입 확보 예상
 - 12월 발표한 재정법안 2011 초안에서 세율을 확정하였으나 지난 2월 8일 정부가 2011년 은행세율을 2012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발표함
 - － 은행세 도입 당시,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고려했던 경과조치 기간이 현 시점에 서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판단
 - － 기발생된 효력분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로 2011.3.1~2011.4.30까지 세율을 0.1%로 조정하고 2011.5.1 이후는 0.075% 세율 적용
 - － 2012년 이후 세율은 재정법안 2011 초안과 동일
 - 2011.2월 현재 은행세 확정 세율 (기본세율)

〈표 2-Ⅳ-1〉 영국의 은행세율

기간	은행세율
2011.1.1~2011.2.28	0.05%
2011.3.1~2011.4.30	0.1%
2011.5.1~	0.075%

- 세율 변경에 따라 2011년 은행세입은 당초보다 8억파운드 증가한 25억파운드로 전망됨

- 재정법안 초안에서는 2011년에 0.05%, 2012년부터 0.075% 세율을 적용하고, 2011.1.1부터 효력이 발생함
 - 은행세는 2010.6월 발표한 긴급예산안에서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법안 초안에서 확정된 세율은 정부안보다 각각 0.01%p, 0.005%p 인상

2) 법인세 개혁안 (2010. 11. 29)

- 법인세 기본세율은 FY2014-15까지 매년 1%p씩 인하, 소규모기업의 법인세율은 21%에서 20%로 인하
 - 2010년 총선 이후 발표한 긴급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정법 2010(no.2)에서 FY2011-12의 법인세 기본세율을 27%로 확정
 - 재정법안(Finance Bill) 2011 초안에서 FY2012-13 법인세 기본세율을 26%로 규정하고, FY2011-12의 소규모기업 법인세율을 20%로 인하
 - 2011.3월에 발표할 예산안 2011에서 법인세 기본세율을 24%까지로 인하하는 방침을 확정할 계획
- 하이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 특허 수익에 대해 FY2013-14부터 법인세 저세율(10%) 적용 등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 추진을 계획

3) 재정법안(Finance Bill) 2011 초안* 주요 내용

* 재정법안(Finance Bill)은 예산안 발표시기에 의회에 제출되는 법안으로서 연간 세입변동사항을 상세히 다루고 있음. 영국 정부는 지난 2010년 12월 9일 정부 재정법안 초안을 공개하고 자문과정(~2011.2.9)을 진행하였음. 주로 긴급예산안에서 발표된 세입정책 변동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입변동사항은 은행세의 경우와 같이 의회와 국왕의 최종 승인 전이라도 효력 발생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수 있음.

- FY2011-12 소득세율 한도금액 및 인적공제 변경
 - 65세 이하 개인 인적공제 금액을 1,000파운드 인상한 7,475파운드로 제안
 - 고세율(higher rate) 구간의 납세자가 인적공제 인상으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기본세율 한도금액을 35,000파운드로 인하

□ 법인세 인하로 인한 재정비용

- 기본세율 인하에 따른 비용은 FY2011-12에 4억파운드, FY2012-13에 12억파운드로 예상
- 소규모 기업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재정비용은 약 1억파운드로 예측

□ 국세청 행정시스템 정비 등

- 납세자 집단 등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을 국세청에 부여하고, 소득세(PAYE) 관련 정보를 실시간 시스템으로 구축

4) 기타

□ 재정법(Finance Act no.3) 2010 승인 (2010. 12. 16)

- 2010년 9월 의회에 제출된 재정법안(Finance Bill no.2) 2010에 대해 최종 승인
- 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재정동향 4호 참고

2.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 과거 노동당 정부의 사전예산안(Pre-budget) 폐지
 - 사전예산안을 재무장관의 가을성명(Autumn Statement, 2010. 11. 29)으로 대체
 - 가을성명은 예산책임청(OBR)의 경제·재정전망 보고 내용을 위주로 진행
 - － 경기부양계획 검토안(Growth Review), 법인세 개혁안 내용을 함께 발표하고 아일랜드 재정지원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함
 - － 긴급예산안(2010.6)과 중기재정계획(Spending Review 2010)에 포함된 세제개혁 및 지출계획에는 큰 변화 없음
 -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 주요내용은 재정동향 3, 4호 참고
- OBR의 경제·재정전망(2010. 11. 29) 주요 내용
 - OBR은 정부가 FY2015-16에 경상수지균형과 FY2014-15~FY2015-16에 공공부문 순부채의 감소를 실현할 확률이 50% 이상일 것으로 평가
 - 2010년 경제성장률을 1.2%에서 1.8%로 상향조정하고 2011년과 2012년은 0.2%p씩 하향 전망함
 - － OBR의 경제전망은 OECD 등 다른 기관 전망치에 비해 다소 낙관적임

〈표 2-Ⅳ-2〉 경제성장 전망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OBR (Nov)	1.8	2.1	2.6	2.9	2.8	2.7
OBR (June)	1.2	2.3	2.8	2.9	2.7	2.7
Independent forecasters (Nov)	1.7	1.9	2.1	2.4	2.5	..
OECD (Nov)	1.8	1.7	2.0	..	..	..
IMF (Oct)	1.7	2.0	..	..	..	2.6

출처: The 2010 Autumn Statement, Parliamentary Document.

- 고용시장 개선으로 2015년까지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

SECTION 2 >>

- 6월 예측에 비해 2010년 실업률은 0.2%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12년 이후는 6월 예측치보다 다소 상향 전망
- FY2014-15까지 일반정부 공공인력 감축규모는 6월보다 약 16만명 축소된 33만명으로 전망

〈표 2-Ⅳ-3〉 실업률 전망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OBR (Nov)	7.9	8.0	7.7	7.2	6.7	6.1
OBR (June)	8.1	8.0	7.6	7.0	6.5	6.1
difference	-0.2	0.0	0.1	0.1	0.1	0.1

출처: The 2010 Autumn Statement, Parliamentary Document

- FY2010-11 재정적자는 6월 예측보다 10억파운드(GDP 대비 0.1%p) 감소할 것으로 전망
 - FY2011-12 이후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FY2015-16에는 GDP 대비 1.0%(약 180억파운드)까지 감축될 것으로 예측
- 공공부문 순부채는 FY2013-14에 GDP의 69.7%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

〈표 2-Ⅳ-4〉 재정적자 및 채무 전망

(단위: GDP 대비 %)

	FY2010-11	FY2011-12	FY2012-13	FY2013-14	FY2014-15	FY2015-16
공공부문 순차입(PSNB)	10.0	7.6	5.6	3.5	1.9	1.0
6월 전망치 대비 증감(%p)	-0.1	0.1	0.1	0.0	-0.1	-0.1
공공부문 순부채(PSND)	60.8	66.3	69.1	69.7	68.8	67.2
6월 전망치 대비 증감(%p)	-1.1	-0.9	-0.7	-0.7	-0.6	-0.1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0, 11, 29

나. 추경

- FY2010-11 겨울(Winter) 추경에서 자원이출 약 58억파운드, 자본지출 약 57억파운드 증액 (2010. 11. 23)

- 본세출예산(Main Estimates)과 함께 자원지출 약 5,017억파운드, 자본지출 약 4,807억 파운드 편성
 - － 부처별 지출한도(DEL)의 총액은 변동 없음
 - － 연간관리지출(AME) 증액분은 OBR의 가을 경제·재정전망에서 반영됨
 - 증액분 중 DEL 예비비 3억 4,160만파운드, 차년도이월(End Year Flexibility) 9억 9,910만파운드, AME 부처별 프로그램 30억파운드 증액
 - 순자원요구액 기준으로 지역사회부(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약 21억파운드, 노동연금부(Work & Pension) 7억파운드, 교육부 6억파운드 증액됨
- FY2011-12 봄(Spring) 추경에서 자원지출 358억파운드, 자본지출 82억파운드 증액 (2011. 2. 14)
- 증액분에는 DEL 예비비 65억파운드, 차년도 이월 21억파운드 포함
 - AME 부처별 프로그램 218억파운드 증액분 중 203억파운드는 비현금성 지출로서 공공재정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
 - 순자원요구액 기준으로 국방부 예산이 약 181억파운드, 보건부 약 41억파운드 증액됨
 - 부처별 프로그램 예산은 대부분 증액되었으며, 행정예산은 총 1억 1,600만파운드 감소

다. 결산

- 사전예산안(Pre-budget)과 함께 발표되던 정부 결산보고서(End of Year Fiscal Report)는 사전예산안 폐지에 따라 발간되지 않음
- 예산책임청(OBR)의 경제·재정 전망보고서(Economic and Fiscal Outlook)에서 공공부문 경상세입, 총관리지출 등에 대한 FY2009-10 실적치 제시
 - － 정부 결산보고서 형식의 예결산 비교는 제시하지 않음

3.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

- 조세회피 방지 대책에 따른 법률 변화 발표 (2010. 12. 6)
 - 세금계산서를 줄이기 위한 계열사 간 대출 및 파생상품 거래 제한 등 일부 조항은 즉시 효력 발생
 - 향후 4년간 50억파운드, 이번 의회 회기기간 동안 추가 20억파운드 확보 가능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경기부양계획 검토안(Growth Review)에서 시장경기 활성화, 성장촉진을 위한 재정정책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 (2010. 11. 29)
 - 6개의 우선 성장지원 분야 설정
 - － 첨단제조업(advanced manufacturing), 창조적 디지털 산업(digital & creative industries), 전문서비스(business & professional services), 소매업, 건설, 의료보호 및 생명과학
 - 기업의 자본공급 활성화 등 금융지원대책 마련
 - － 소규모기업(SMEs)의 자본공급 안정성을 위해, 은행 주도의 기업성장기금(Business Growth Fund) 15억파운드를 신규로 조성
 - － 기업금융보증(Enterprise Finance Guarantee)을 통해 향후 4년간 총 20억파운드 규모의 대출 지원
 - － 기업자본기금(Enterprise Capital Funds)의 정부지분을 2억파운드까지 확대
 - 중기재정계획(Spending Review)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본투자 확대조치 등 인프라 사업을 통한 경기부양 추진
 - － 민간부문 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 구축에 FY2014-15까지 390억 파운드 이상 투자
 - － 2000억파운드 규모의 국가 인프라구축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Plan) 추진을 위해 민간부문 투자모델 개선, 적절한 규제장치 마련 등 정부대책 수립

- 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법인세 개혁과 근로 인센티브 향상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등의 정부 계획도 포함

□ 인프라 구축사업 재원 일부 할당 (2011. 2. 10)

- 중기재정계획(2010.10)에서 발표한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 재원 5억 3천만파운드 중에서 웨일즈 북부 지역에 1천만파운드 할당
 - － 인프라구축계획은 재정동향 4호 참고

다. 기타 정책이슈

□ 공공서비스연금(Public Service Pensions) 개혁 추진 (2010. 11. 26)

- 공공서비스연금 개혁을 위해 독립위원회(Independent Public Service Pensions Commission)에서 검토 진행 중
 - － 급여수준, 기여율 등 단기적 요소와 중장기 제도개혁에 대한 위원회 검토 내용은 2011년 예산안에 반영될 계획
- 대표적으로 지방정부, NHS, 교사, 공무원, 군인 연금이 공공서비스연금에 해당되며, FY2008-09 지출은 320억파운드로 기초국가연금 비용의 약 2/3에 해당

□ 1:1 채무상당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 FY2011-12에 2,700만파운드 지원 (2011. 2. 12)

- 2011.1월 정부는 2011.3.31까지 위 프로그램의 재원을 조달하던 금융통합기금(Financial Inclusion Fund)의 종료를 발표한 상태임
- 위 사업은 기업·혁신·기술부(Business, Innovation & Skill)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감사원의 사업평가(Value For Money)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음

V

프랑스 (FY2011: 2011.1~2011.12)

1. 세제개편

□ FY2010 4차 수정예산 및 FY2011 본예산(2010년 12월)을 통해 세제개편안 마련

○ FY2010 4차 수정예산은 부동산세 개혁, 환경친화적 유인책 마련, 세정 강화 및 세제 간소화, 지방세 확충 등 4개 기조로 마련

〈표 2-V-1〉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출처	구분	주요내용
FY 2010 4차 수정예산	부동산세 개혁	- 부동산 관련 업체에 대한 15여개의 부담금을 2개 세금으로 대체하여 간소화하고 지가 평가 과정을 정비 (사업용 부지에 국한) • (배경) 1970년대에 마련된 기존 지가 평가 시스템이 현 부동산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고 계산 방식도 단순화할 필요 • (추진일정) 2011년부터 5개 지역(Herault, le Pas-de-Calais, Pas-de-Calais, le Bas-Rhin, Paris, la Haute-Vienne)에 한해 시범 실시 후 2014년 전면 도입
	환경친화 유인	- 심각한 오염물질 유발에 대한 벌금 부과 대상(자동차) 확대(2012년 1월 시행) 및 관련 세율도 점진적 인상
	세정강화 및 세제 간소화	- (세정 강화) 지하경제 등 탈세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조사 권한 및 법적 대응조치 기능 강화, 온라인 게임 관련 법규위반 단속을 위해 관세 규정 변경 - (부가가치세 간소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절차 및 기준 간소화 • 동일 그룹 내 거래일 경우 순계 금액에 대하여 과세
	지방세 확충	- 담배세를 1000개피당 164유로 → 173(~180)유로로 인상하고 Le Grand Paris의 재원 조달을 위해 특수설비에 추가 과세 • Le Grand Paris : 파리 시내 교통체계 개편 사업
FY 2011 본예산	세제혜택 감소	- 건강보험 계약시 세금면제 혜택 폐지 (세율 3.5% 적용) - 45,000유로 규모 이하 중소기업 자산에 대한 세율 인하폭을 하향조정 (75% → 50%)
	다양한 세원 확충	- 모기지론 원리금 상환에 대한 공제 혜택 종료 • 대신 향후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하여 1주택 소유자 대출 조건 강화 - (은행세) 최소요구자본금에 대하여 0.25% 세율 적용 - 온라인 광고에 대하여 1% 세율 적용 - 월 400유로 초과 연금에 대한 과세 • 단, 2011년 1월 이전 수급 개시인 경우는 월 500유로 초과시 적용 - 국가의료보조 수급 개시할 때 등록비 30유로 부과

- FY2011 본예산은 주로 세제혜택 감소, 다양한 세원 확충을 통한 수입 증대를 목표로 함⁶⁾
 - 이는 FY2011-2014 중기재정예산안(2010년 9월) 재정건전화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내용 중 일부가 FY2011 예산안에 반영된 것임

6) 본고에서는 재정동향 4호 및 주요국 예산안 2011에서 다루지 않은 세제개편 내용만을 보완하였음

2.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 FY2011 예산안(2010년 9월 발표)이 국회를 통과하여 본예산으로 확정⁷⁾ (12월 15일)
 - 예산 기조 및 규모는 예산안과 대동소이하며, 일반정부 재정적자 역시 당초대로 GDP 대비 6% 달성을 목표 (2010년 일반정부 재정적자 GDP 대비 7.7%)
 - － 성장률 2%, 물가상승률 1.5% 가정 하에 제로증가율 원칙으로 지출을 통제하고 소득세를 인상·각종 세제혜택 축소 및 폐지를 통한 세입 확충 (주요국 예산안 2011 참고)
 - 세금환급분 및 EU 지원금을 제외한 순수입은 1,982억유로, 순지출은 2,864억유로, 특별회계 재정적자는 34억유로, 최종 재정적자는 916억유로로, 2010년 재정적자(1,485억유로) 대비 38.3% 감소
 - － 한시적 지출 종료 및 경기회복세에 따른 수입 증대에 기인 (미래투자계획 324억유로 감축, 위기대응 정책 52억유로 감축 등 상세 내용은 주요국 예산안 2010 및 재정동향 4호 프랑스 편 참고)
 - 중기재정 2011-2014 예산법안에서 재정건전화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각종 세제 혜택 축소 및 폐지 내용을 반영 (주요국 예산안 2011 V. 프랑스 참고)
 - － 총규모는 10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 (상세 내용은 1. 세제 개편 참고)

7) 출처는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jsessionid=?cidTexte=JORFTEXT000023314376&dateTexte=&oldAction=rechJO&categorieLien=id>

〈표 2-V-2〉 FY2010 -11 재정규모 변동추이

(단위: 백만유로)

	FY2010 ¹⁾ (A)	FY2011 예산안 (B)	FY2011 본예산 (C)	(C)-(A)
순수입 ²⁾	173,880	197,827	198,176	24,296
순지출 ²⁾	321,972	286,405	286,390	△35,582
일반회계 재정수지	△148,093	△88,578	△88,214	59,879
특별회계 재정수지	△406	△3,426	△3,425	△3,019
총재정수지	△148,501	△91,993	△91,628	56,873

주: 1) FY2010 4차 수정예산 수치(나. 추경 참고)

2) 세금환급분 및 EU 지원금이 제외된 수치로 재정동향 2호와 상이

출처: FY2010 결산 및 FY2011 예산안·본예산

□ FY2011 사회보장예산안(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11, 2010년 9월 발표) 역시 국회 통과⁸⁾ (2010년 11월)

○ 사회보장예산 적자는 2010년 231억유로에서 2011년 214억유로로 감축

- － 고용회복에 따른 보험료 등 수입 증대(2010년 대비 50억유로(2.9%) 증가 전망), 80억유로의 신규 자원 창출, 연금개혁 효과, 의료지출 통제 등에 힘입을 것으로 전망
- － 관련 상세 내용은 재정동향 4호 및 주요국 예산안 2011과 같으며, 표 〈V-3〉를 통하여 일부 보완

〈표 2-V-3〉 사회보장예산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신규 자원 창출	－ 사회보장혜택 감축 및 신규 과세 (FY2011 본예산* 및 사회보장예산 통해 마련)로 80억유로 마련 * 1. 세제개편 내용 중 일부가 사회보장예산에 충당
연금개혁	－ 법정 정년 연장 (만 60세 → 만 62세) 및 연금수급개시연령 조정 (만 65세 → 만 67세) －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 － 요율인상 및 고소득층 소득세율, 자본세율 인상 － 배당금 세제 혜택 폐지로 마련된 자원 투입 － 상기 창출된 신규자원 80억유로 중 30억유로 투입
의료지출 통제	－ FY2011 의료지출목표(ONDAM)를 3% 이내로 통제 － 반면 증가하는 고령자 의료수요를 위해 별도 공간, 데이케어, 임시 보호소, 양로원 내 의료시설 등 확충 노력 지속 (le Plan de Solidarité Grand)

8) 출처는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jsessionid=?cidTexte=JORFTEXT000023261006>

나. 추경

- 사회보장기금 부채 상환 및 재원부족 부처 지원을 위한 FY2010 4차 수정예산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10) 의회 통과⁹⁾ (2010년 12월 21일)
 - 사회보장기금 흑자 재원을 활용하여 17억유로의 기금 채무를 완전히 청산
 - 재원이 부족한 일부 부처 지원을 위해 1억 5천만유로의 기금 설립

- (재정수지) FY2010 예산 대비 순수입은 34.56억유로 증가하고 순지출은 2.85억유로 감소하여 총재정적자는 1485억유로로 소폭 개선 (34.64억유로 재정수지 개선)
 - 세외수입 증가 및 지출 억제 노력에 기인
 - － 정부당국은 사업소세 개혁의 효과 및 지출부문 제로증가율 원칙 준수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 (11월 17일 각료회의)
 - － 제로증가율(zéro volume) 원칙이란 연금 및 부채상환비용을 제외한 지출의 실질 증가율이 0이 되도록 한다는 원칙

〈표 2-V-4〉 FY2010 예산과정에서의 재정지표 변화

(단위: 백만유로)

	본예산 (A)	1~3차 수정예산 (B)	4차 수정예산 (C)	최종 (A)+(B)+(C)
순수입 ¹⁾	166,189	4,235	3,456	173,880
순지출 ¹⁾	288,335	33,931	△294	321,972
일반회계 재정수지	△122,146	△29,696	3,749	△148,093
특별회계 재정수지	4,779	△4,900	△285	△406
총재정수지	△117,369	△34,596	3,464	△148,501

주: 1) 세금환급분 및 EU 지원금이 제외된 수치로 재정동향 2호와 상이
출처: FY2010 4차 수정예산

9) 출처는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jsessionid=?cidTexte=JORFTEXT000023316044&dateTexte=&oldAction=rechJO&categorieLien=id>

다. 결산

□ 예산부는 FY2010 중앙정부 결산 (l'exécution du budget de l'Etat en 2010)* 발표¹⁰⁾
(2010년 1월 14일)

* 프로그램별 성과목표 달성 여부 및 관련사유 보고를 위한 연례성과보고서 (les Rapports Annuels de Performances, 재정동향 4호 참고)와는 다름

○ (재정수지) FY2010 재정적자는 1,488억유로로 FY2010 4차 수정예산 수치¹¹⁾보다 소폭(10억유로) 개선

－ 이는 수입이 예산을 하회하였음에도 지출이 동결되고 특별회계 재정수지가 개선(26억유로 ↑)되었기 때문

○ (재정수입) FY2010 재정수입은 예상보다 28억유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사회보장세 수입이 21억유로 감소

○ (재정지출) FY2010 재정지출은 목표를 달성, 제로증가율 원칙이 준수되었음을 반증

－ 이러한 지출 억제를 통해 사회보장기금 및 토지신용기금(le Crédit foncier de France) 채무 상환

－ 예외적 지출(약 700억유로)은 미래투자계획(324억유로), 위기대응정책(52억유로), 사업소세 개혁*에 따른 지방정부 보전(324억유로) 등에 의한 것

〈표 2-V-5〉 FY2010 결산

(단위: 십억유로)

	4차 수정예산 ¹⁾ (A)	결산 (B)	(B)-(A)
총수입 ²⁾	272.9	273.7	0.8
총지출 ²⁾	422.7	422.5	△0.2
특별회계 재정수지	△0.6	2.0	2.6
총재정수지	△149.8	△148.8	1.0

주: 1) 4차 수정예산(나. 추경 참고)을 토대로 재추정한 수치이므로 표 〈2-V-4〉와 상이할 수 있음
출처: FY2010 결산 보도자료

10) 출처는 http://www.budget.gouv.fr/discours-presse/discours-communiques_budget.php?type=communiqu&id=4945&rub=2

11) 나. 추경에서 언급한 4차 수정예산을 토대로 재추정한 수치이므로 〈표 2-V-4〉와 상이할 수 있음

SECTION 2 >>

* 사업소세 개혁 : 대표적인 지방세인 사업소세의 과세범위를 부동산에 국한(동산 제외)하고 부가세와 함께 지역기여세(contribution économique territoriale)로 통합 (2010년 1월 시행). 단, 과세범위가 축소되는 데 따른 지방세수 손실을 2010년에 한하여 보전하기로 한 바 있음

- (특별회계) FY2010 특별회계 재정수지는 예상보다 26억유로 개선되었으며, 주로 대그리스 지원이 집행 지연(14억유로)된 데 따름
- 이에 따라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GDP 대비 7.7%가 될 것으로 추정 (2011년 3월 공식 발표 예정)

3.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

- FY2011-2014 중기재정예산안(Projet de Loi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 2010년 9월 발표)이 국회 통과¹²⁾ (2010년 12월)
 - 동 예산안은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표되었으며 FY2011 예산안, EU 안정성장협약 및 적자감축조치와도 연계
 - FY2010 GDP 대비 7.7%인 일반정부 재정적자를 FY2011 6% → FY2014 2%로 감축할 것을 목표
 - － 이는 경제회복세(2011년 성장률 2% 전망)에 힘입은 수입 증대* 및 제로증가율 원칙 준수를 통한 지출통제에 기인
 - * 증세조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제지원 혜택 축소 및 폐지를 통해 총 100억유로의 수입 증대 효과
 - (지방정부 재정건전화 조치) 지방정부 지원 규모를 동결하되 취약 지역을 위하여 지원 비율 조정
 - － 중앙정부 및 사회보장기금 관련 재정건전화 조치는 상기한 1. 세제개편, 2. 예산 및 결산)가. 예산 및 재정동향 4호, 주요국 예산안 2011 참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세 지속을 위하여 가계소비,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 － (가계소비) 주택 매입시 무이자 대출 지원 지속
 - － (기업투자) FY2011 본예산을 통해 중소기업 연구관련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특허권 관련 공제 혜택을 주변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

12) 출처는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23310845&dateTexte=&categorieLien=id>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 정책이슈

- 프랑스 재무부 단기 경제전망 모델인 Opale을 업그레이드하여 연도별로 고정된 가격변수를 사용하는 대신 기준연도 대비 증가율을 적용 (La Maquette de Prévision Opale 2010, 2011년 2월 2일)
 - 가격 변동에 따른 대체효과, 관련 경제 모델 및 주요 경제 변수의 추정치에 대한 점검도 실시
- 경제산업부는 전략 정보보안 부문의 발전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 관련 기업에 제공하고 국제 표준화를 위하여 노력할 계획 (2010년 12월 8일)
 - 지적재산권 등 민간경제 및 연구기관에 향후 위협이 될 수 있는 이슈에 선제적 대응
 -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처별 해당 내용 조사, 지역별 시행 점검, 국제기준 검토 등의 업무 수행
- 경제산업부는 피츠버그 G20회의 합의에 따른 금융기관 종사자 보너스에 대한 기준 마련 (2010년 12월 17일)
 - 다양한 보너스 형태에 대한 수량적 기준을 마련, 전체 보너스의 40% 이상(고소득자의 경우 60%), 주식 등 비현금 보너스의 50% 이상에 적용
 - 감독기관은 규정 준수 여부 및 리스크 관리, 장기 성장목표 등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음
- 경제산업부는 은행 부문의 구조적 위험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여 상이한 유관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하기로 함 (2011년 2월 7일)
 - 위원장은 경제산업부 장관이며 위원은 중앙은행 총재, 각 금융감독기관의 장, 금융시장협회 및 회계기준협회의 장 등으로 구성

VI 독일 (FY2011: 2011.1~2011.12)

1. 세제개편

- 독일 내각은 세제를 간소화하고 그에 따른 인력과 비용을 감축하는 법률안 패키지(세제 간소화법: Steuervereinfachungsgesetz 2011)를 발표 (2011년 2월 2일)
- 동 패키지는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es) 및 동법 집행규칙, 부가가치세법(Umsatzsteuergesetzes), 상속 및 증여세법(Erbchaftsteuer- und Schenkungsteuergesetzes), 부동산 이전세법(Grunderwerbsteuergesetzes)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
 - 독일 정부는 이를 통해 세무행정 절차를 보다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하며, 관련된 인력 및 비용을 감축하여 납세자들의 부담을 약 5억 9천만유로 줄일 것으로 전망
 - － 세무서는 근로자들의 직업관련 지출에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자동으로 (현행 920유로에서) 1,000유로씩 환급해주게 되며, 이와 관련된 조세 경감액은 약 3억 3천만유로로 예상 (소득세법 §9a 개정)

〈표 2-VI-1〉 세제간소화법 패키지로 인한 재정상 변동내역

(단위: 백만유로)

	연간 효과 ¹⁾	회계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소득세법 §9a 개정	-330	-630	-330	-330	-330	-330
소득세법 §32 개정	-200	-190	-195	-200	-200	-200
소득세법 §§9c 개정	-60	-5	-45	-60	-60	-60
기타	5	0	5	5	5	5
합계	-585	-825	-565	-585	-585	-585
연방정부	-266	-840	-565	-585	-585	-585
주정부 및 지방정부	-319	15	0	0	0	0

주: 1) 12개월 전체 (평가)기간에 대한 재정수입 증감 효과

출처: Steuervereinfachungsgesetz 2011, 독일 재무부, 2011년 2월

SECTION 2 >>

- 학생이나 직업훈련중인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별도의 소득증빙 절차 없이 세제혜택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총 약 2억유로의 세금이 경감 (소득세법 §32 개정)
- 보육수당과 관련된 소득법상의 복잡한 서류제출 절차도 사라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세부담이 약 0.6억유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소득세법 §§9c, 10 개정)

2.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 2011년도 연방정부 예산안이 의회 심의를 거쳐 당초 정부안에 비해 16억유로 삭감된 3,058억유로로 확정 (2010년 11월 26일)
 - 신규차입을 제외한 재정수입은 2,574억유로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대비 약 7.6% 증가한 규모
 - － 이 중 조세수입은 약 2,295억유로로, 전년 대비 176억유로 증가
 - 재정지출은 3,058억유로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대비 약 4.3%(137억유로) 감소한 규모

〈표 2-VI-2〉 연방정부 2011년도 확정예산

(단위: 십억유로, %)

	2009	2010	2011(정부안)	2011(확정)
I. 재정지출	292.3	319.5	307.4	305.8
전년대비 증가율	3.5	9.3	-3.8	-4.3
II. 재정수입	292.3	319.5	307.4	305.8
조세 수입	227.8	211.9	221.8	229.5
세외 수입	30.2	27.4	28.1	27.9
신규 차입	34.1	80.2	57.5	48.4
III. 투자지출	27.1	28.3	33.8	32.3
GDP 성장률 ¹⁾	-4.7	3.3	2.0	

주: 1) GDP 성장률: 2010년 및 2011년은 전망치

출처: 독일 재무부, 2010년 12월, IMF World Economic Outlook (GDP성장률)

- 신규차입은 약 484억유로로 전망되며, 이는 2010년의 802억유로는 물론, 당초 정부안 575억유로에 비해 줄어든 규모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 2011년부터 신규차입이 감소하고 있으며, 중기재정계획상 2014년까지 약 241억유로 수준으로 감소할 예정

-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 및 사회보장(Arbeit und

SECTION 2 >>

Soziales) 분야의 예산이 전년 대비 119억유로(8.3%) 감소한 1,313억유로로 감소 규모 및 비율 역시 가장 크게 나타남

○ 기타 연방부채(Bundesschuld)가 전년 대비 17억유로(1.7%) 감소한 372억유로, 교통, 건설 및 도시개발(Verkehr, Bau und Stadtentwicklung) 분야가 전년 대비 11억유로(4.1%) 감소한 252억유로로 나타남

－ 재무일반(110억유로)은 전년 대비 9억유로(8.7%), 교육 및 연구(116억유로)가 7억유로, 국방(315억유로) 분야는 4억유로(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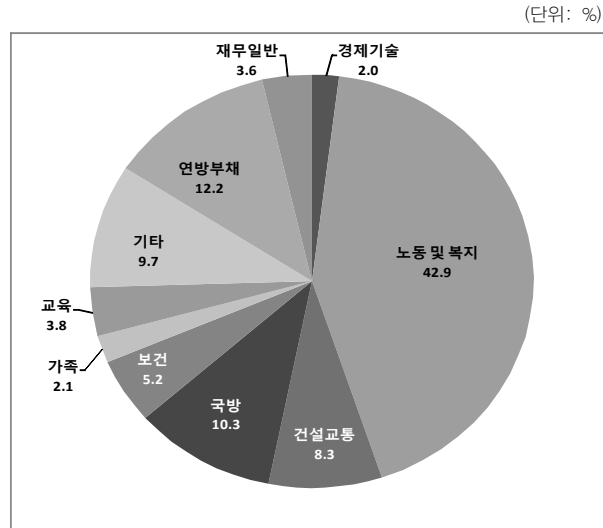
〈표 2-VI-3〉 2011년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

(단위: 십억유로, %)

분야	2010년 (A)	2011년 (B)	증감분(B-A)	증감률
노동 및 사회보장(Arbeit und Soziales)	143.2	131.3	-11.9	8.3
연방부채(Bundesschuld)	38.9	37.2	-1.7	-1.7
국방(Verteidigung)	31.1	31.5	0.4	1.4
교통, 건설 및 도시개발 (Verkehr, Bau und Stadtentwicklung)	26.3	25.2	-1.1	-4.1
재무 일반(Allgemeine Finanzverwaltung)	10.1	11.0	0.9	8.7
경제 및 기술(Wirtschaft und Technologie)	6.1	6.1	0.0	-0.1
교육 및 연구(Bildung und Forschung)	10.9	11.6	0.7	7.2
가족(Familie)	6.5	6.5	-0.1	-1.1
보건(Gesundheit)	16.1	15.8	-0.3	-2.2
기타(Sonstige)	30.3	29.6	-0.7	-2.4
합계	319.5	305.8	-13.7	-4.3

출처: 독일재무부, 2010년 12월

[그림 2-VI-1] 2011년 분야별 세출예산 비중



출처: 2011년 예산안, 독일 재무부, 2010.11

나. 추경

□ 해당사항 없음

다. 결산

- 2010년도 연방정부 결산이 잠정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신규차입은 당초 예산상 802억유로보다 적은 440억유로 (2011년 1월 13일)
 - (재정지출) 재정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158억유로 감소한 3,037억유로이며, 전년 결산 대비 114억유로 증가
 - (재정수입) 재정수입은 2,593억유로로 2010년 예산 전망치인 2,389억유로보다 204억유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 결산 대비 16억유로 증가
 - － 조세수입은 2,262억유로로 당초 예산 전망치 2,119억유로보다 143억유로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결산 대비 16억유로 감소
 - － 세외수입은 331억유로로 당초 예산 전망치인 270억유로보다 61억유로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결산 대비 32억유로 증가

SECTION 2 >>

- (신규차입)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010년 예산에서 802억유로로 전망됐던 신규차입은 잠정결산 결과 440억유로에 그쳐, 독일정부는 재정건전화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자평
 - － 이는 조세수입의 증가와 무선이동통신사업 관련 경매로 인한 수입 증대, 노동시장 및 이자비용 등에서 지출 감소의 결과
 - － 그러나 440억유로의 신규차입 규모는 여전히 독일연방공화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 (전년 대비 증가율 29%)

〈표 2-VI-4〉 2010년 잠정 결산 개요

(단위: 십억유로, %)

	2010 예산(A)	2010 잠정결산(B)	2009 결산(C)	예산대비 증감(B-A)	전년대비 증감 (B-C)	전년대비 증감률
재정지출	319.5	303.7	292.3	-15.8	11.4	3.9
재정수입	238.9	259.3	257.7	20.4	1.6	0.6
조세수입	211.9	226.2	227.8	14.3	-1.6	-0.7
세외수입	27.0	33.1	29.9	6.1	3.2	10.7
Münzeinnahmen ¹⁾	0.4	0.3	0.3	-0.1	0	0.0
신규차입	80.2	44.0	34.1	-36.2	9.9	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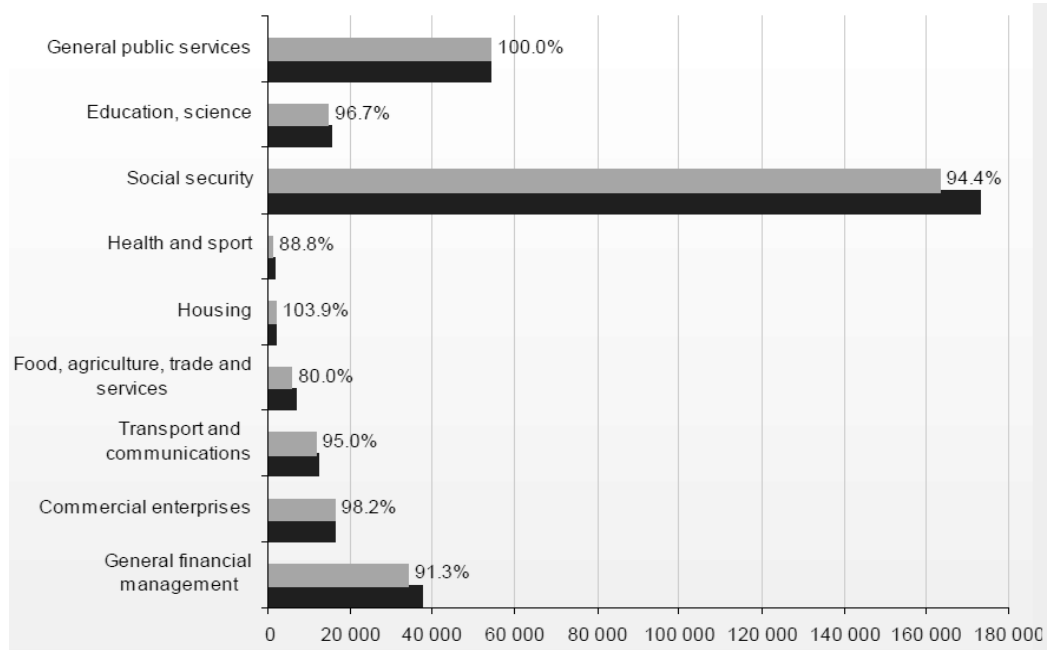
주: 1) Adjusted for revenue from coin

출처: 독일 재무부, 월간 보고서, 2011년 1월

- 기능별 세출결산 내역은 [그림 VI-2]와 같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보장 세출은 예산 대비 94.4%의 집행률을 보임
 - 기타 공공서비스 일반은 100%, 재무 일반이 91.3%, 교육과학이 96.7% 등의 집행률을 나타냄

[그림 2-Ⅵ-2] 2010년 잠정결산 기능별 세출 내역

(단위: 백만유로, %)



주: 위 막대가 잠정결산, 아래 막대가 예산, %는 예산 대비 %를 나타냄
출처: 독일 재무부, 월간 보고서, 2011년 1월

3.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

- 독일정부는 2011년까지 마스트리히트 재정수지 기준 달성을 목표로 함
 - 마스트리히트 적자(Maastricht-Defizit: 지방정부 및 사회보험을 포함할 경우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3.5%로 유럽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European 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상 기준인 3%를 초과하고 있으나, EU국가들 중에서는 양호한 수준
 - －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2010년 7월에 4.5%에서 2010년 11월 말 현재 3.7%로 하락
 - 2011년 일반정부 재정적자 예상규모도 2010년 7월에 1,090억유로로 전망했으나 11월 말 920억유로로 전망치 하향조정
 - － 이 경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에 근접하게 되어, 마스트리히트 기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500억유로 가까운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구조적으로 건전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독일정부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2011년 예산에는 독일정부의 성장 지향적 출구전략이 반영되었으며, 독일 정부는 경제위기 관리 정책들을 신중하게 회수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재정건전화를 지향하고 있음
 - 그 외 별도의 경기부양 및 성장정책은 발표된 바 없음

다. 기타 정책이슈

- 독일정부는 오스트리아정부와 OECD 투명성 기준에 부합하도록 이중과세협정을 개정하는 조약에 서명함 (2010년 12월 29일)
 - 동 조약의 개정으로, 양국은 상대국의 세제와 '예측가능하게 관련된' 요청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할 의무를 갖게 됨

- － 조약이 발효되면, 오스트리아는 독일정부가 요청할 경우 (범죄수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도) 세제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 2011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동 조약의 시행으로, 양국 금융기관에 관련된 정보교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Schäuble 독일 재무부장관과 Salgado 스페인 경제장관은 새로운 이중과세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의회 비준을 거친 후 발효될 예정 (2011년 2월 3일)

○ 기존 독일-스페인 간의 이중과세협정은 1966년에 발효된 것으로, 스페인 경제성장 등 새로운 경제 환경을 반영하여 동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양국 협상이 2006년부터 진행되다 마침내 새로운 협정이 탄생

○ OECD 모델을 바탕으로 완성된 새로운 협정은 양국 간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고 이자 및 로열티와 관련된 원천징수 권리의 포기를 강조하고 있음

○ 개정된 협정의 새로운 특징 중 하나는, 정부는 사회보장연금 수령자들에게 과세할 수 있는 제한된 권리를 가지며, 2015년 이후 신규 연금수령자들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5%, 2030년 이후 은퇴자들에 대한 세율은 10%가 됨

○ 또한 조세 경쟁을 완화하기 위하여 OECD의 DBA (Doppelbesteuerungsabkommen: 이중과세협정)와 조세정보교환협정(Steuerinformationsaustauschabkommen)에 관한 모델에 따라 정보교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마련됨

VII

캐나다 (FY2010-11: 2010.4~2011.3)

1. 세제개편

- 캐나다 재무부는 소득세법(Income Tax Act) 중 기술적인 사항을 개정하는 입법안을 발표(2010년 11월 5일)
 - 파트너십과 파트너에 대한 규정으로 전문 파트너십(professional partnership)이라는 규정을 신설, 한 명 이상의 전문직 종사자가 영업하는 파트너십을 정의함
 - 연금과 관련해서 등록된 연금계획(registered pension plan) 납부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 생애자본이익(lifetime capital gains) 공제 중에서 적격농가자산(qualified farm property)과 적격어업자산(qualified fishing property)의 요건에 대한 비과세 사항이 추가
- 정부는 2011년 자동차 구입 공제한도 및 기업의 자동차 운영경비 혜택을 2011년에도 유지하기로 결정(2010년 12월 29일)
 - 승용차에 대한 주요 경비 한도를 3만캐나다달러로 유지
 - 2010년 이후 자동차 구입을 위하여 대출을 할 경우, 이자공제 최대 한도액을 월 300캐나다달러로 유지
 - 2010년 이후 자동차 리스를 하는 경우 리스 공제한도를 월 800캐나다달러로 유지
 - 개인소유 차량을 영업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세금공제 한도는 첫 5,000km까지 1km당 52센트, 추가 주행거리에 대해서는 46센트씩
- 경기부양책에서는 개인, 가계 및 기업의 세금경감 및 세제혜택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2011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제혜택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10년 12월 30일)

- 연방 법인세율을 18%에서 16.5%로 인하하여 신규 사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
- 장거리 트럭 운전자들의 식비 공제율을 75%에서 80%로 상향 조정함
- 2011년 7월부터는 이혼한 부모가 자녀에 대해 공동 양육권을 지니고 있는 경우 또는 부부가 별거중인 경우 자녀세제혜택(Canada Child Tax Benefit), 보육보조금(Universal Child Care Benefit), 재화 및 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통합판매세(Harmonized Sales Tax) 아동보조금을 각각 수령할 수 있게 됨

2.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 캐나다 FY2011-12 예산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통상 매년 2~3월에 발표됨
- 재무부 장관은 FY2011-12 정부부문 간 이전지출 규모가 전년 대비 22억캐나다달러 증가한 560억캐나다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2010년 12월 20일)
 - 보건이전지출(Canada Health Transfer)은 전년 대비 15억캐나다달러(6%) 증가한 270억달러로 전망되며, 사회이전지출(Canada Social Transfer)은 전년대비 3억 3,500만 캐나다달러(3%) 증가한 115억캐나다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FY2011-12 지역평등화교부금(equalization)은 2억 8,700만캐나다달러 상승한 147억캐나다달러, 지방공식회계(Territorial Formula Financing: TFF)¹³⁾는 2억 1,200만 캐나다달러 증가한 29억캐나다달러

나. 추경

- 해당사항 없음

다. 결산

- FY2009-10 결산보고서는 재정동향 제4호에 실림

13) TFF는 캐나다 정부에서 3개 준주(territory)인 Yukon, Northwest, Nunavut에 연간으로 이전하는 지원금의 형태로 각 정부가 필요로 하는 세출 규모에서 각각의 세입을 차감하여 계산함

3.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

- 캐나다 정부는 2009-2010년 부채관리보고서(Debt Management Report)를 발표하면서 FY2009-10 정부의 차입규모 및 부채관리 계획 등을 상세히 기록, 2010년 3월말 현재 정부부채 규모는 5,191억캐나다달러(2010년 12월 16일)
 - FY2009-10 재정적자는 556억캐나다달러, 예산외 거래는 총 80억캐나다달러, 시장부채(market debt)¹⁴⁾는 535억캐나다달러 상승

〈표 2-VII-1〉 FY2009-10 캐나다 부채 증감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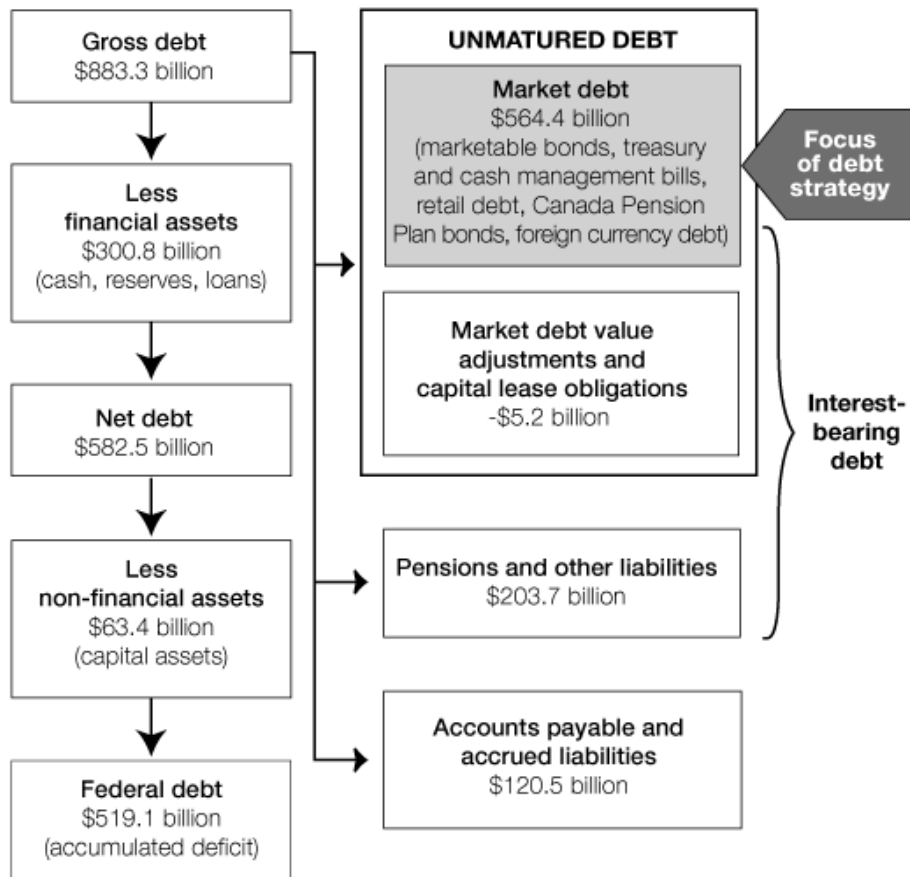
	2010.3.31	2009.3.31	증감
캐나다달러 채무(payable in CAD)			
국채(marketable bonds)	368.0	295.2	72.8
단기증권(treasury and cash management bills)	175.9	192.3	-16.4
소매 부채(etail debt)	11.9	12.5	-0.7
캐나다연금계획채권(Canada Pension Plan bonds)	0.5	0.5	0.0
총캐나다달러 채무(total payable in CAD)	556.1	500.5	55.6
외화 채무(payable in foreign currencies)	8.2	10.4	-2.2
총시장부채(total market debt)	564.4	510.9	53.5
시장 부채값 조정 및 자본리스채무(market debt value adjustment and capital lease obligations)	-5.2	3.1	-8.3
총만기이전 부채(total unmatured debt)	559.1	514.0	45.1
연금 및 기타계정(pension and other accounts)	203.7	196.1	7.6
총이자부 부채(total interest-bearing debt)	762.8	710.2	52.6
채무계정, 누적채무 및 수당(accounts payable, accruals and allowances)	120.5	114.0	6.5
총부채(gross debt)	883.3	824.2	59.1
총 금융자산(total financial assets)	-300.8	-299.0	-1.8
총 비 금융자산(total non-financial assets)	-63.4	-61.5	-1.9
연방부채(federal debt-accumulated deficit)	519.1	463.7	55.4

출처: "Debt Management Report 2009-2010", 캐나다 재무부, 2010.12

14) 캐나다 국채(marketable bonds), 단기증권(treasury and cash management bills), retail debt, Canada Pension Plan 채권, 외화부채(foreign currency debt)

[그림 2-Ⅶ-1] 캐나다 부채 구성(2010년 3월 말 현재)

Composition of the Federal Debt, at March 31, 2010



Note: Numbers may not add due to rounding.

출처: Debt Management Report 2009-2010, 캐나다재무부, 2010.12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캐나다 경기부양 2개년 계획(Canada Economic Action Plan: CEAP) 제7차 보고서가 발표, 총 600억캐나다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2009년 2분기부터 캐나다의 경제성장률이 분기당 1.3%p씩 증가(2011년 1월 31일)
- 26,0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현재 완료되었거나 진행 상태이며 2010-11회계연도가

종료되면서 대부분 완료될 예정

- － 인프라건설부양펀드(Infrastructure Stimulus Fund), 캐나다건설펀드-지역단위지원 (Building Canada Fund Communities Component Top-up), 후생인프라캐나다 (Recreational Infrastructure Canada) 프로그램, 지식인프라프로그램(Knowledge Infrastructure Program)에 대해서는 완료시점을 2011년 3월말에서 2011년 10월 말로 연장

- 제 7차보고서의 총경기부양지출액은 600억캐나다달러를 소폭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 6차보고서의 총지출규모보다 소폭 하락
 - － 2009-10년 총경기부양지출 규모가 소폭 하락했으며 이는 노동시장 조건이 개선되어 고용보험 지급액이 감소하고, 주택수리세금환급(Home Renovation Tax Credit) 지출이 예상보다 적어 차이가 발생하였음

〈표 2-Ⅶ-2〉 경기부양책 제6차보고서 및 제7차보고서의 비교

(단위: 억캐나다달러)

	제6차보고서(2010.9)			제7차보고서(2011.1)		
	2009-10	2010-11	합계	2009-10	2010-11 ¹⁾	합계
• 캐나다 국민들을 위한 세금 부담 경감	30.2	31.8	62.0	30.2	31.8	62.0
• 실업자에게 혜택	37.3	53.5	90.8	33.4	49.2	82.7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구축	68.0	88.7	156.7	60.3	87.9	148.2
• 미래 경제 구축	15.5	23.2	38.7	15.5	22.7	38.2
• 산업 및 커뮤니티 지원	109.8	22.7	132.5	109.8	22.6	132.4
총연방정부 경기부양지출	260.8	219.9	480.7	249.3	214.2	463.5
지방정부 경기부양 (Assumed provincial and territorial actions)	70.6	69.7	140.3	70.6	69.7	140.3
총경기부양지출 (Total Economic Action Plan stimulus)	331.9	289.6	621.0	319.9	283.9	603.8

주: 1) 위에 언급된 4개 인프라부양펀드의 시한이 연장됨에 따라 이 중 일부 금액은 2011-12회계연도로 이양될 예정임

출처: CEAP 제6차보고서/제7차보고서, 캐나다재무부, 2010.10/2011.1

- 2009년 2분기부터 경제성장률은 분기당 1.3%p씩 증가, 2009년 7월부터 40만 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이 중 85%가 상근직

SECTION 2 >>

〈표 2-Ⅶ-3〉 캐나다 경기부양책이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

(단위: %)

	2009			2010				
	Q2	Q3	Q4	Q1	Q2	Q3	Q4	12월
실질GDP성장률								
실질	-2.8	0.9	4.9	5.6	2.3	1.0	-	-
CEAP 미적용 시	-4.3	-0.5	2.9	3.8	1.8	-0.3	-	-
CEAP 효과(%p)	1.5	1.4	2.0	1.8	0.5	1.3	0.4	-
고용률								
실질	-1.6	0.0	1.5	1.5	3.4	1.4	0.4	-
CEAP 미적용 시	-2.2	-0.6	0.6	0.6	2.8	0.7	-0.2	-
CEAP 효과(%p)	0.6	0.6	0.9	0.9	0.6	0.7	0.6	-
고용된 인원(천명)	28	53	92	129	158	189	215	222

출처: CEAP 제7차보고서, 캐나다재무부, 2011.1

- 캐나다 재무부는 민간부문¹⁵⁾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경제예측조사를 받아 각 항목의 평균치를 산정하여 경제 및 재정전망을 발표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현재 2011년 GDP성장률 및 GDP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 (2011년 2월 1일)

15) 2010년 12월 조사에 참여한 기관 :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BMO Capital Markets, Caisse de depot et placement du Quebec, CIBC World Markets,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 Desjardins, Deutsche Bank of Canada, IHS Global Insight, Laurentian Bank Securities, National Bank Financial, Royal Bank of Canada, Scotiabank, TD Bank Financial Group, UBS Securities Canada, University of Toronto(Policy and Economic Analysis Program)

〈표 2-Ⅶ-4〉 민간부문 경제예측조사 비교 (2010.9/2010.12)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0-2015
실질GDP성장률							
2010.9	3.0	2.5	2.8	2.9	2.6	2.5	2.7
2010.12	2.9	2.4	2.8	2.9	2.6	2.5	2.7
GDP인플레이션							
2010.9	2.8	2.0	2.3	2.0	2.0	1.9	2.2
2010.12	2.9	2.2	2.3	2.1	2.1	2.1	2.3
명목GDP성장률							
2010.9	5.9	4.6	5.2	5.0	4.6	4.4	4.9
2010.12	5.9	4.7	5.2	5.1	4.8	4.7	5.0
실업률							
2010.9	8.0	7.7	7.4	7.0	6.8	6.6	7.3
2010.12	8.0	7.7	7.3	7.0	6.8	6.6	7.2
CPI인플레이션							
2010.9	1.7	2.2	2.1	2.1	2.0	2.0	2.0
2010.12	1.8	2.3	2.1	2.0	2.1	2.0	2.0

출처: 캐나다 재무부, 2011.2

다. 기타 정책이슈

- 캐나다 재무부는 해외 원조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으며 2010년 정부개발원조(ODA) 지불금이 정부개발원조책임법(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ccountability Act)에 부합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정부, 해외기관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조사 실시(2010년 12월 21일)
- 캐나다 재무부는 현재 World Bank의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에 연간 3억 8,400만캐나다달러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는 빈곤국의 지역 인프라 구축 또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아이티와 같은 취약국가 지원에 사용됨
-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IBRD)에서는 2010년 4월, 860억 US달러 규모의 자금 증액을 신청했는데 IBRD는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교육, 보건, 사회보호, 농업, 기후변화, 남녀평등, 인프라 개선에 자금을 지원해줄 예정
 - － 2011년 초에 승인될 경우 캐나다가 지원하는 금액은 이 중 16억 US달러

- IMF는 빈곤퇴치 및 성장 신탁(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을 설립해 빈곤 국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2010년 예산 중 대출금 형태로 8억캐나다달러 그리고 보조금 형태로 4,000만캐나다달러를 제공함
 - 캐나다는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계획,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MDRI) 등을 통해 빈곤국가의 채무 구제(debt relief)에 참여하고 있으며 MDRI로 50년간 총 25억캐나다달러를 제공할 계획
 - 재무부는 또한 World Bank의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을 통해 기후변화(2억 9,150만캐나다달러), 국제농업 및 식량프로그램(3년간 6억캐나다달러 증액 지원), 중소기업 지원(2,000만캐나다달러)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
- 캐나다 재무부는 2010년 조세지출 및 평가(Tax Expenditures and Evaluations 2010) 관련 보고서에서 2010년 예산(Budget 2010)의 세제개편 및 조세지출 내역 보고 (2011년 1월 18일)
- 2010-11회계연도에 도입된 세제개편 내용은 모두 개인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이었음
 - － 보육보조금(Universal Child Care Benefit), 의료비세액공제(Medical Expense Tax Credit), 근로자 스톡옵션공제(Employee Stock Option Deduction), 미국사회보장혜택(U.S. Social Security Benefits), 세금공제 주식투자자를 위한 광물탐사세액공제(Mineral Exploration Tax Credit for Flow-Through Share Investors)

VIII

호주 (FY2010-11: 2010.7~2011.6)

1. 세제개편

- 수해복구의 재원 마련을 위해 한시적 특별세(Temporary Flood Replacement Levy) 도입 법안 발의 (2011. 2. 10)
 - 수해지역의 재건을 위해 FY2011-12 동안 호주 거주자를 대상으로 추가 소득세의 형태의 특별세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는 법안을 발의하여 하원에 상정
 - 특별세 부과 방식은 다음과 같음
 - 연간 5만~10만호주달러 소득자의 경우, 5만호주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에 0.5% 부과
 - 연간 10만호주달러 이상 소득자의 경우, 5만호주달러 이상 과세소득에 0.5%, 10만호주달러 이상 과세소득에 1% 부과
 - 홍수피해가구와 연소득 5만호주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동 특별세는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는 현행 의료비 세금(Medicare levy)에 추가되는 방식임

2.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 FY2010-11 예산안은 2010년 5월 11일에 발표(동 예산안 내용은 재정동향 3호 참조)되었고, FY2011-12 예산안은 2011년 5월 10일에 발표 예정

나. 수정예산안

- 흑자예산 달성을 위한 재정지출 감축안을 담은 반기경제·재정보고서(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0-11)는 2010년 11월 9일에 발표
 - 동 보고서 내용은 재정동향 4호 참조

다. 결산

- FY2009-10 결산(Final Budget Outcome)은 2010년 9월 24일에 발표
 - 동 결산 내용은 재정동향 4호 참조

3.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

- 변동사항 없음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변동사항 없음

다. 기타 정책이슈

- 퀸즐랜드와 빅토리아 등 대규모 홍수로 피해를 입은 지역 복구를 위해 연방예산을 투입할 계획 (2011. 1. 27)
 - 2011년 1월에 발생한 홍수로 주정부의 피해가 급격하게 불어나자 연방정부가 56억호주달러 규모의 복구예산을 투입

SECTION 2 >>

〈표 2-Ⅷ-1〉 연방정부의 복구예산 추산 내역

(단위: 백만호주달러)

재해구호 및 복구제도(Natural Disaster Relief and Recovery Arrangements (NDRRA)) ¹⁾	-4,900
동 제도에 호주정부는 특정 자연재해로 인한 주 및 준주의 피해비용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며 개인구호 및 필수적인 공공인프라 복구, 지역사회 복구 보조 등을 포함	
재해복구지원금(Australian Government Disaster Recovery Payment (AGDRP)) ²⁾	-600
동 지원금은 사회보장법하에 재해로 인해 피해를 받은 호주 거주자에게 일회에 한하여 지급되며 수령자격이 있는 자에게 성인 1명당 1,000호주달러와 (16세 미만)각 자녀당 400호주달러가 지급. 신청자는 약 4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재해로 인한 소득손실보조금(Disaster Income Recovery Subsidy) ³⁾	-120
동 보조금은 홍수와 극심한 기후로 인해 소득 손실을 입은 고용인과 중소기업자, 농가를 지원할 목적으로 매 2주마다 지급되는 것으로 개인의 특성에 따라 구직보조금(Newstart allowance)의 최대율과 동등한 기준으로 지급. 신청자는 약 7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주정부의 구호기금에 대한 기부금(Donations to the State relief funds and appeals)	-12
호주정부는 퀸즐랜드와 빅토리아 주정부의 구호기금에 약 1,200만호주달러를 기부	
Total ⁴⁾	-5,632

주: 1) 동 제도는 일차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주정부의 구호기금과 사회간접자원의 복구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주정부는 NDRRA제도를 통해서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 동 지원금은 2011년 1월 10일부터 31일 사이에 호주 북동부지역에 발생한 홍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시행

3) 동 보조금은 2010년 11월 29일을 기점으로 2010년 12월~2011년 2월까지 이어지는 홍수와 극심한 기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결과 소득을 잃은 것이 증명된 사람들에게 재정지원을 할 목적으로 시행

4) 전체 지원액은 1차 추정치이며 자세한 내용은 FY2011-12예산안에 포함될 것임

출처: www.treasurer.gov.au

○ 연방정부는 위와 같은 복구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감축 및 ‘특별세(Flood Levy)’ 도입을 계획

— 재난지역의 인프라 재건 등을 위해 FY2011-12 동안 일회성 특별세 도입으로 약 18억호주달러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

• 자세한 내용은 ‘1. 세계개편’ 참조

— 예산감축을 통해 약 18억호주달러를 절감

• 청정 자동차 환급 제도(Cleaner Car Rebate Scheme) 중단

• 친환경 자동차 혁신 펀드(Green Car Innovation Fund) 폐지

• 탄소 포집·저장 프로그램(Carbon Capture and Storage Flagships) 및 태양광 프로그램(Solar Flagships programs), 지구촌 탄소 포집·저장 연구소(Global

- Carbon Capture and Storage Institute)에 대한 지출 감소와 재원조달 연기
- 지역 인프라 프로그램(Regional Infrastructure Program) 및 더 나은 지역사회 건설 프로그램(Building Better Regional Cities Program)의 우선순위 재조정
- 기타 재정지출 감소 및 연기 (<표 2-VIII-2> 참조)
-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연기로 약 10억호주달러의 재원 마련
 -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연기하여 약 10억호주달러의 복구재원을 마련하고, 수해 지역의 필수 인프라를 복구하기 위해 부족한 기술인력들을 보강
- 홍수 피해로 인해 FY2010-11 경제성장률이 0.5%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위와 같은 예산 감축 노력과 특별세 징수로 인하여 FY2012-13에 연방예산 흑자 전환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SECTION 2 >>>

〈표 2-Ⅷ-2〉 수해지역의 복구를 위한 자원 조달 계획

	Impact on underlying cash balance					Total \$m
	2010-11 \$m	2011-12 \$m	2012-13 \$m	2013-14 \$m	2014-15 \$m	
Flood Levy	0	1560	235	0	0	1,795
The Government will introduce a temporary levy on individual tax payers to raise funds for the recovery and reconstruction effort. From 1 July 2011, with effect for the 2011-12 income year only, a levy of 0.5 per cent will apply to taxable income of between \$50,001 and \$100,000 and 1.0 per cent to taxable income above \$100,000. Individuals who have received an Australian Government Disaster Recovery Payment for a flood event in 2010-11 will be exempt from paying the flood levy.						
Cleaner Car Rebate Scheme - not proceed	0	157	119	85	69	429
The Cleaner Car Rebate Scheme was to provide grants of \$2,000 to motorists who scrap their pre-1995 passenger vehicles and purchase new, low emission, fuel efficient vehicles. The Government will not proceed with the scheme. This will provide savings of \$429 million over the forward estimates.						
Priority Regional Infrastructure Program (PRIP)	0	50	125	125	50	350
The \$800 million PRIP is being established to invest in projects identified by local communities in regional areas. The Government will reallocate \$350 million to support flood recovery of funding from the PRIP to support flood recovery efforts in regional Australia. This will be allocated under the NDRRA in consultation with Queensland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ies.						
Capital Development Pool (CDP) - abolish from 1 January 2012	0	55	78	81	84	299
The Capital Development Pool will cease funding of new projects from 1 January 2012, saving \$299 million over the forward estimates. All current projects already funded under the program are unaffected.						
Green Car Innovation Fund - abolition	3	16	6	26	183	234
The Government will wind up the Green Car Innovation Fund from 2011-12, realising savings of \$234 million from uncommitted funds over the forward estimates and \$401 million over the life of the program. The Green Car Innovation Fund was initially established in 2008 as part of the Government's A New Car Plan for a Greener Future to assist projects aimed at producing low-emission, fuel-efficient vehicles and components.						
National Rental Affordability Scheme (NRAS) - limit dwelling target to 35,000	9	22	63	75	96	264
The Government will limit the National Rental Affordability Scheme dwelling target to 35,000 by 2013-14 rather than 50,000, saving \$264 million over the forward estimates. Priority will be given to applications from flood affected areas across Australia in allocating the remaining incentives (around 13,000), in consultation with the relevant State.						
Carbon Capture and Storage Flagships - reduction and deferral of funding	0	110	18	0	122	250
The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Flagships program forms part of the Clean Energy Initiative and provides grants for projects to help accelerate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low emission coal technology by supporting industrial-scale projects in Australia. The Government will reduce its funding for the CCS flagships program by a total of \$250 million across the forward estimates period, with \$160 million of this to be re-phased to beyond the forward estimates.						
Solar Flagships - reduction and deferral of funding	0	75	50	-50	175	250
The Solar Flagships program forms part of the Clean Energy Initiative and provides grants to support the deployment of large scale solar energy generation projects in Australia. The Government will reduce its funding for the Solar Flagships program by a total of \$250 million across the forward estimates period, with \$190 million of this to be re-phased to beyond the forward estimates.						

〈표 2-Ⅷ-3〉 수해지역의 복구를 위한 자원 조달 계획 (계속)

	Impact on underlying cash balance					Total
	2010-11 \$m	2011-12 \$m	2012-13 \$m	2013-14 \$m	2014-15 \$m	
Renewable Energy Bonus Scheme - Solar Hot Water Rebate- capping funding	81	78	0	0	0	160
The Renewable Energy Bonus Scheme – Solar Hot Water Rebate provides a rebate of \$1,000 for a solar hot water system or \$600 for a heat pump hot water system and is available to help eligible home-owners, landlords or tenants to replace their electric storage hot water systems. The Government will cap funding from this program resulting in a saving of \$160 million over two years.						
Green Start Program- not proceeding with Round 2	88	41	1	0	0	129
On 21 December 2010,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closure of the Green Start program. Savings from not proceeding with Green Start Round 2 of \$129 million over three years will be reallocated to provide funding for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floods.						
Building Better Regional Cities- redirection	0	30	35	35	0	100
The Building Better Regional Cities program provides funding to participating councils across Australia to invest in local infrastructure projects that support new housing developments. This measure will redirect \$100 million of funding to re-building infrastructure in flood affected council areas, including those not originally targeted by the initiative.						
Liquefied Petroleum Gas (LPG) Vehicle Scheme - capping annual claims	0	43	26	27	0	96
The Liquefied Petroleum Gas Vehicle (LPG) scheme provides grants for factory conversions and post factory conversions to LPG fuel systems. The Government will cap the Scheme at 25,000 claims per annum for the life of the Scheme from 2011-12. This will provide savings of \$96 million over three years.						
Australian Learning and Teaching Fund - discontinue funding	0	12	24	25	26	88
Funding for the Australian Learning and Teaching Council will be discontinued from 1 January 2012, providing savings of \$88 million over four years. The Government remains committed to continuing to improve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in Australia, and is establishing new quality and regulatory arrangements for higher education through: a new national regulatory and quality agency, the Tertiary Education Quality and Standards Agency; a new National Register of Higher Education Providers; a new Higher Education Standards Framework; and the My University website.						
Solar Homes and Communities Plan	85	0	0	0	0	85
The Solar Homes and Communities Plan (SHCP) provided rebates of up to \$8,000 for the installation of solar photovoltaic systems. The program ended in June 2009 and residual rebates are still being processed. The Government will cap the amount remaining available for outstanding claims, allowing \$85 million to be redirected to the flood recovery effort.						
Global Carbon Capture and Storage Institute- reduction and deferral of funding	0	60	35	-20	-20	55
The Global Carbon Capture and Storage Institute was established to connect parties around the world to address issues and learn from each other to accelerate the deployment of carbon capture and storage projects. The Government will reduce funding for the Institute by a total of \$55 million over the forward estimates with \$5 million of this contribution to the Institute to be rephased to beyond the forward estimates. The Government will continue to contribute \$100 million to the Institute over the forward estimates period.						
O-Bahn City Access	27	29	0	0	0	56
The Australian Government will withdraw its funding to the O-Bahn City Access project in Adelaide. This is the result of a significant scope reduction of the original project, resulting in only limited transport benefits. The project will not proceed at this point in time.						
Rephasing Infrastructure Projects - Queensland	6	71	136	255	-142	325
Rephasing Infrastructure Projects - Other	*	*	*	*	*	675
Total						5,641

Full details will be published in the 2011-12 Budget.

제 3 부 주요국의 재정통계

I. 미 국 (2011년 1월 기준)

II. 일 본 (2010년 12월 기준)

III. 영 국 (2010년 12월 기준)

IV. 프랑스 (2010년 12월 기준)

V. 독 일 (2010년 12월 기준)

VI. 캐나다 (2010년 11월 기준)

VII. 호 주 (2010년 12월 기준)

I

미국 (2011년 1월 기준, FY2011: 2010.10~2011.9)

1. 세입 및 세출 동향

-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의 재정적자는 약 4,18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9억 달러(2.8%) 감소
-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총재정수입은 약 653억달러(9.4%), 총재정지출은 약 534억달러(4.8%) 증가하였는데 재정수입 증가액이 재정지출 증가액을 초과하여 2011년도 재정수지가 작년에 비해 개선

〈표 3-I-1〉 연방정부 재정

(단위: 백만달러, %)

구분	FY2009 ¹⁾		FY2010 ¹⁾		FY2011 ¹⁾		전년대비 증감 (누계기준)		FY2012 (추정) ²⁾
	1월	누계(2008.10 ~2009.1)	1월	누계(2009.10 ~2010.1)	1월	누계(2010.10 ~2011.1)	변동분	%	
총재정수입	226,109	773,549	205,242	693,019	226,553	758,350	65,331	9.4	2,814,008
예산(on-Budget)	161,462	564,876	142,049	487,085	171,451	567,473	80,388	16.5	2,104,845
예산 외(off-Budget) ³⁾	64,647	208,673	63,193	205,933	55,102	190,877	-15,056	-7.3	709,163
총재정지출	309,924	1,342,562	247,876	1,123,712	276,349	1,177,106	53,394	4.8	3,725,401
예산	262,159	1,203,344	227,490	966,789	223,535	1,011,462	44,673	4.6	3,119,870
예산 외	47,765	139,218	20,386	156,924	52,814	165,643	8,719	5.6	605,531
재정수지	-83,815	-569,013	-42,634	-430,693	-49,796	-418,756	11,937	-2.8	-911,393
예산	-100,697	-638,467	-85,441	-479,703	-52,084	-443,989	35,714	-7.4	-1,015,025
예산 외	16,882	69,455	42,807	49,010	2,288	25,233	-23,777	-48.5	103,632
총재원조달 규모	83,815	569,013	42,634	430,693	49,796	418,756	-11,937	-2.8	911,393
채무	-48,813	512,082	-51,924	209,806	93,358	461,243	251,437	119.8	1,052,216
재무부 operating cash 감소, 증가(-)	170,896	175,857	102,085	183,755	-6,412	-39,306	-223,061	-121.4	-
기타	-38,269	-118,925	-7,527	37,133	-37,150	-3,182	-40,315	-108.6	-140,823

주: 1) 확정치가 아니므로 수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2) '10.7월 OMB에서 발표한 FY2011 Mid-Session Review에 근거한 수치

3) 사회보장기금과 우편서비스기금은 법에 의해 연방예산에서 '예산 외(off-budget)'로 구분

자료: Monthly Treasury Statement(Dept. of Treasury), 2009.1월, 2010.1월, 2011.1월

2. 세목별 세입동향

- 2011년 1월(누계) 총 재정수입은 약 7,584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약 653억달러(9.4%) 증가
- 이는 주로 미국 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소득세, 법인세 및 기타 재정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
 - － 개인소득세는 약 737억달러(23.7%), 법인세는 약 24억달러(6.5%), 기타재정수입은 약 42억달러(13.7%)가량 증가
 - 이외에도 실업보험과 관세 관련 수입이 각각 전년동기 대비 약 52억달러(77.7%), 18억달러(22.5%) 증가
 - 반면 유산세 및 증여세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고, 실업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 세입 역시 감소
 - － 유산세 및 증여세는 지난해에 비해 약 55억달러(101.5%) 줄었고,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 수입은 약 113억달러(4.0%) 감소한 2,672억달러 규모

〈표 3-I-2〉 연방정부 재정수입

(단위: 백만달러, %)

구분	FY2009 ¹⁾		FY2010 ¹⁾		FY2011 ¹⁾		전년대비 증감 (누계기준)	
	1월	누계(2008.10 ~2009.1)	1월	누계(2009.10 ~2010.1)	1월	누계(2010.10 ~2011.1)	변동분	%
개인소득세	124,459	379,758	103,523	311,253	128,975	384,997	73,744	23.7
법인세	4,532	54,900	3,232	37,157	3,645	39,577	2,420	6.5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수입:								
고용 및 일반퇴직연금 (Off-budget)	64,647	208,673	63,193	205,933	55,102	190,877	-15,056	-7.3
고용 및 일반퇴직연금 (On-budget)	18,645	68,289	18,087	64,393	18,190	62,960	-1,433	-2.2
실업보험	1,149	6,374	1,279	6,727	2,806	11,955	5,228	77.7
기타퇴직연금	320	1,430	291	1,412	310	1,401	-11	-0.8
소비세	5,042	19,459	5,625	21,945	5,137	21,907	-38	-0.2
유산세 및 증여세	2,387	8,944	1,485	5,451	-804	-81	-5,532	-101.5
관세	2,085	8,981	2,074	7,998	2,421	9,794	1,796	22.5
기타 재정수입	2,844	16,742	6,453	30,749	10,771	34,963	4,214	13.7
총 재정수입	226,109	773,549	205,242	693,019	226,553	758,350	65,331	9.4
예산	161,462	564,876	142,049	487,085	171,451	567,473	80,388	16.5
예산 외	64,647	208,673	63,193	205,933	55,102	190,877	-15,056	-7.3

주: 1) 확정치가 아니므로 수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료: Monthly Treasury Statement(Dept. of Treasury), 2009.1월, 2010.1월, 2011.1월

3. 기능별 세출동향

□ FY2011 1월(누계) 재정지출은 약 1조 1,771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34억달러(4.8%) 증가

- 농업(Agriculture) 부문의 지출에서 124억달러(673.5%)가 증가한 것이 주요인
 - 이외에도 상업 및 주택금융 지출이 180억달러(73.8%), 국방지출이 91억달러(3.9%), 보건 부문에서 지출이 93억달러(7.7%) 증가
- 나머지 분야도 대체로 지출이 증가하였으나 외교(18%), 천연자원 및 환경(40.2%), 교육, 훈련, 고용 및 사회서비스(3.5%), 소득보장(1.5%) 지출 감소
- 에너지 부문은 지난해에 비해 63.5%(16억달러)가량 큰 폭으로 증가

〈표 3-I-3〉 연방정부 기능별 재정지출

(단위: 백만달러, %)

구분	FY2009 ¹⁾		FY2010 ¹⁾		FY2011 ¹⁾		전년대비 증감 (누계기준)	
	1월	누계(2008.1 0~2009.1)	1월	누계(2009.1 0~2010.1)	1월	누계(2010.1 0~2011.1)	변동분	%
국방	49,225	229,313	51,179	234,945	48,550	244,075	9,130	3.9
외교	2,375	12,555	5,739	16,931	2,735	13,879	-3,052	-18.0
과학, 우주, 기술 일반	1,630	7,906	2,059	9,606	2,127	10,006	400	4.2
에너지	-191	309	626	2,553	1,112	4,173	1,620	63.5
천연자원 및 환경	2,778	11,283	4,851	25,996	3,056	15,545	-10,451	-40.2
농업	3,181	16,366	655	1,839	2,144	14,225	12,386	673.5
상업 및 주택금융	48,880	311,461	-2,807	-24,360	5,171	-6,386	17,974	-73.8
교통	5,295	27,348	5,199	30,317	6,313	31,782	1,465	4.8
지역개발	2,080	11,372	1,606	7,023	2,078	8,116	1,093	15.6
교육, 훈련, 고용 및 사회서비스	7,823	30,039	11,789	42,227	9,962	40,743	-1,484	-3.5
보건	24,266	97,850	28,964	120,118	28,806	129,375	9,257	7.7
메디케어	46,351	149,128	36,313	145,030	32,859	146,697	1,667	1.1
소득보장	44,850	147,292	49,121	185,929	47,402	183,127	-2,802	-1.5
사회보장	55,329	212,352	28,379	231,045	59,900	239,360	8,315	3.6
보훈	7,488	34,137	4,825	35,459	5,669	39,487	4,028	11.4
법무행정	3,564	16,223	4,087	18,753	4,299	19,647	894	4.8
일반행정	1,500	7,822	1,735	6,332	1,404	7,048	716	11.3
순이자지급	7,957	62,679	17,996	70,325	18,552	75,332	5,007	7.1
상계계정수입	-4,459	-42,872	-4,439	-36,355	-5,790	-39,125	-2,770	7.6
합계	309,924	1,342,562	247,876	1,123,712	276,349	1,177,106	53,394	4.8

주: 1) 확정치가 아니므로 수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료: Monthly Treasury Statement(Dept. of Treasury), 2009.1월, 2010.1월, 2011.1월

4. 국가채무 동향

- 2011년 1월 31일 기준 공공채무¹⁶⁾는 전년동기 대비 1조 8,524억달러(15.1%)가 증가한 14조 1,310억달러 기록
- 이는 시장성 채권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이 중 중기채가 큰 폭으로 증가
 - 시장성 채권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총 1조 7,396억달러(24.1%)가 증가하였고 이 중 중기채가 1조 4,427억달러(34.1%)가량 증가
 - 비시장성 채권은 '10년 1월에 비해 1,143억달러(2.3%) 증가한 5조 1,663억달러 규모
 - 정부부문 소유 채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65억달러(2.8%) 증가한 4조 6,456억달러 규모를 보였고,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의 경우, 1조 7,259억달러(14.1%) 증가한 9조 4,854억달러를 기록

〈표 3-I-4〉 연방정부 채무

구분	'09.1.31			'10.1.31			'11.1.31			전년 대비 증감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정부부문 소유 채무	합계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정부부문 소유 채무	합계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정부부문 소유 채무	합계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정부부문 소유 채무		합계	
										변동분	%	변동분	%	변동분	%
시장성:	5,726,162	23,754	5,749,916	7,203,299	23,252	7,226,551	8,942,856	21,849	8,964,705	1,739,557	24.1	-1,403	-6.0	1,738,154	24.1
단기채(T-Bills)	1,792,889	5,673	1,798,563	1,683,757	5,695	1,689,453	1,756,620	3,924	1,760,544	72,863	4.3	-1,771	-31.1	71,091	4.2
중기채(T-Notes)	2,825,174	835	2,826,009	4,227,723	1,747	4,229,470	5,668,644	3,540	5,672,184	1,440,921	34.1	1,793	102.6	1,442,714	34.1
장기채(T-Bonds)	591,890	2,751	594,641	727,749	3,687	731,436	901,967	3,958	905,925	174,218	23.8	271	7.4	174,489	23.9
Treasury Inflation-Protected Securities	516,209	494	516,703	564,070	201	564,271	615,625	188	615,814	51,555	9.1	-13	-6.5	51,543	9.1
Federal Financing Bank	0	14,000	14,000	0	11,921	11,921	0	10,239	10,239	0	0.0	-1,682	-14.1	-1,682	-14.1
비시장성:	591,137	4,291,027	4,882,164	556,191	4,495,894	5,052,085	542,561	4,623,785	5,166,346	-13,630	-0.3	127,891	2.8	114,261	2.3
Domestic Series	29,995	0	29,995	29,995	0	29,995	29,995	0	29,995	0	0.0	0	-	0	0.0
Foreign Series	4,986	0	4,986	5,386	0	5,386	3,986	0	3,986	-1,400	-26.0	0	-	-1,400	-26.0
R.E.A. Series	1	0	1	1	0	1	-	-	-	-	-	-	-	-	-
State and Local overment Series	244,800	0	244,800	207,658	0	207,658	187,213	0	187,213	-20,445	-9.8	0	-	-20,445	-9.8
United States Savings Securities	193,810	0	193,810	190,901	0	190,901	187,537	0	187,537	-3,364	-1.8	0	-	-3,364	-1.8
Government Account Series	115,508	4,290,536	4,406,044	120,792	4,495,402	4,616,193	132,537	4,623,292	4,755,829	11,745	0.3	127,890	2.8	139,636	3.0
Hope Bonds	0	492	492	0	492	492	0	493	493	0	0.0	1	0.2	1	0.2
Other	2,037	0	2,037	1,458	0	1,458	1,293	0	1,293	-165	-11.3	0	-	-165	-11.3
합계	6,317,299	4,314,781	10,632,080	7,759,490	4,519,146	12,278,636	9,485,417	4,645,634	14,131,051	1,725,927	14.1	126,488	2.8	1,852,415	15.1

자료: Monthly Statement of the Public Debt of the U.S.(Dept. of Treasury), 2009.1월, 2010.1월, 2011.1월

16) 공공채무는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으로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와 정부부문 소유 채무로 구성

II

일본 (2010년 12월 기준, FY2010-11: 2010.4~2011.3)

1. 세입 및 세출 동향

- (일반회계) 2010년 4월부터 12월까지 일본의 일반회계 재정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조 4,230억엔(21%)가량 개선
 - 재정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약 1조 3,190억엔(2.2%) 감소하였지만 재정지출이 이보다 큰 폭(약 3조 7,430억엔, 5.2%)으로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재정적자 수준이 개선
- (특별회계) 특별회계 부문의 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하였고 그 규모는 약 11조 7,260억 엔 수준
 -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재정수입은 약 5조 160억엔(1.8%) 가량이 증가하였고 재정 지출은 6조 7,090억엔(2.4%)이 감소하면서 흑자를 기록

〈표 3-Ⅱ-1〉 재정수지 현황

(단위: 십억엔)

구분	FY2008-09		FY209-10		FY2010-11		전년대비 증감		FY2010 예산액
	12월	누계 (2008.4~ 2008.12)	12월	누계 (2009.4~ 2009.12)	12월	누계 (2010.4~ 2010.12)	누계 기준	%	
〈일반회계〉									
재정수입	2,903	43,880	8,897	60,052	6,115	58,733	-1,319	-2.2	102,558
재정지출	9,028	59,774	9,054	71,405	9,591	67,663	-3,743	-5.2	107,069
수지	-6,125	-15,894	-157	-11,353	-3,476	-8,930	2,423	-21.3	-4,511
〈특별회계〉									
재정수입	35,408	288,682	33,538	272,896	35,324	277,912	5,016	1.8	381,673
재정지출	36,553	285,017	39,705	280,817	37,665	274,107	-6,709	-2.4	378,566
수지	-1,145	3,665	-6,167	-7,921	-2,341	3,805	11,726	-148.0	3,107

자료: 일본 재무성, 국고세출입상황 - 헤세이 22년, 21년, 20년 각 년도12월 말

2. 세목별 세입동향

- 2010년 12월(누계) 총 재정수입은 58조 7,330억엔으로 전년동기 대비 2.2% 감소한 수준
- 이는 정부채권 발행이 전년 대비 2조 7,810억엔(7.4%) 감소한 것이 주요인
 - 또한, 국유재산이용수입 및 납부금을 포함한 기타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조 2590억엔(24.2%) 감소
 - 반면, 조세 및 인지수입은 지난동기 대비 1조 890억엔(8.5%)가량 증가

〈표 3-Ⅱ-2〉 과목별 세입 현황 (2010년 12월말, 실적 기준)

(단위: 십억엔)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대비 증감		FY2010 예산액
	12월	누계 (2008.4~ 2008.12)	12월	누계 (2009.4~ 2009.12)	12월	누계 (2010.4~ 2010.12)	누계기준	%	
조세 및 인지수입	2,813	16,043	1,466	12,769	1,850	13,858	1,089	8.5	39,643
조세	2,725	15,386	1,390	12,136	1,778	13,249	1,114	9.2	38,619
소득세	852	7,353	748	6,295	752	6,368	72	1.1	12,808
법인세	406	1,292	—	—	184	691	—	—	7,489
상속세	130	609	117	517	125	587	69	13.4	1,271
소비세	837	3,197	377	2,571	421	2,896	324	12.6	10,155
주세	130	656	12	527	11	515	-12	-2.3	1,383
담배세	77	438	29	381	57	404	23	6.1	827
휘발류세	111	694	17	911	128	912	1	0.1	2,576
석유가스세	1	6	1	5	1	5	0	-2.2	12
항공기연료세	7	43	1	35	1	33	-2	-4.7	77
석유석탄세	12	182	—	165	20	153	-12	-7.2	480
전원개발촉진세	30	175	0	134	0	144	10	7.7	330
자동차중량세	46	284	42	251	32	179	-72	-28.6	447
관세	85	452	46	339	45	358	19	5.5	756
토세	1	6	1	5	1	6	1	10.7	8
토지세	0	0	0	0	0	0	0	-69.5	—
구세(旧税)	0	0	0	0	0	0	0	-40.4	—
인지수입	88	657	76	633	73	608	-25	-3.9	1,024
국영기업수입	1	12	1	11	2	11	0	0.3	16
정부자산매각수입	11	198	14	87	5	88	1	1.6	809
국유재산매각	9	88	12	56	4	53	-3	-5.5	129
회수금 등 수입	2	110	2	31	2	36	4	14.3	681
기타수입	78	2,615	76	5,207	173	3,948	-1,259	-24.2	9,757
국유재산이용수입	4	54	3	57	3	58	1	1.9	73
납부금	45	350	40	317	33	337	21	6.5	737
기타	29	2,212	32	4,833	137	3,553	-1,281	-26.5	8,946
정부채권발행(公債金)	—	22,301	7,339	37,468	4,085	34,687	-2,781	-7.4	44,303
전년도 잉여금수입	—	2,711	—	4,511	—	6,141	1,630	36.1	2,200
총계	2,903	43,880	8,897	60,052	6,115	58,733	-1,319	-2.2	96,728

주: —는 데이터 없음, 0은 10억엔 미만

자료: 일본 재무성, 국고세출입상황 - 헤세이 22년, 21년, 20년 각 연도 12월 말

□ 2010년 12월(누계) 특별회계 재정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조 160억엔(1.8%) 증가한 277조 9,120억엔을 기록

○ 이는 국채정리기금과 연금부문에서의 수입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

－ 국채정리기금과 연금은 지난해에 비해 각각 12조 1,610억엔(8.2%), 5조 2,990억엔(9.6%)이 증가하였기 때문

○ 전년동기 대비 재정투융자 수입이 약 11조 4,050억엔(40.9%), 사회자본정비사업 수입이 1조 1,170억엔(24.8%)가량 크게 감소하였지만 수입 증가분을 상쇄하지는 못함

〈표 3-Ⅱ-3〉 특별회계 수입 현황 (2010년 12월말, 실적 기준)

(단위: 십억엔)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대비 증감		FY2010 예산액
	12월	누계 (2008.4~ 2008.12)	12월	누계 (2009.4~ 2009.12)	12월	누계 (2010.4~ 2010.12)	누계 기준	%	
교부세 및 양여세배부금	4,129	27,680	4,146	28,008	4,668	28,571	563	2.0	54,977
등기	8	139	7	129	7	118	-12	-9.0	159
지진재보험	8	45	8	45	9	48	2	4.6	73
국채정리기금	16,742	161,031	14,474	148,758	18,457	160,918	12,161	8.2	196,871
외국환자금	86	660	135	390	35	602	212	54.3	2,696
재정투융자 ¹⁾	4,696	28,878	6,508	27,881	3,954	16,476	-11,405	-40.9	37,229
에너지대책	169	1,070	165	1,030	46	838	-192	-18.7	2,389
국립고도전문의료센터 ²⁾	15	124	17	152	-	-	-	-	-
노동보험	1,452	7,464	105	4,979	92	4,936	-43	-0.9	8,724
선원보험	6	46	13	55	-	-	-55	-100.0	-
연금	7,423	54,730	7,279	55,022	7,801	60,321	5,299	9.6	79,067
식량안정공급	165	1,074	194	998	110	827	-171	-17.2	3,047
농업공제재보험	6	66	7	83	18	87	4	4.6	124
삼림보험	0	10	0	10	0	9	0	-5.1	11
국유임야사업	32	322	30	334	21	316	-18	-5.3	467
어선재보험과 어업공제 보험	1	12	1	11	1	11	0	0.6	24
무역재보험	2	192	5	132	1	76	-56	-42.4	201
특허	11	259	9	262	9	264	2	0.7	302
사회자본정비사업	453	4,751	429	4,501	92	3,384	-1,117	-24.8	3,861
자동차안전	6	128	5	115	4	111	-4	-3.9	123
계	35,408	288,682	33,538	272,896	35,324	277,912	5,016	1.8	390,345

주: 1) 산업투자자 재정융자자금이 2008년 재정투융자로 통합

2) 국립고도전문의료센터 및 선원보험 항목은 2010년부터 특별회계에서 제외

자료: 일본 재무성, 국고세출입상황 - 헤세이 22년, 21년, 20년 각 연도 12월 말

3. 소관별 세출동향

- 일반회계 2010년 12월(누계) 기준 재정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조 7,430억엔 (5.2%)가량 감소한 67조 6,630억엔 수준
- 이는 국토교통성과 경제산업성에서의 지출 감소가 주요인이고 총무성 또한 큰 폭으로 지출이 감소한 데 기인
 - － 전년동기 대비 국토교통성과 경제산업성의 지출은 각각 1조 5,240억엔(37.6%), 6,350억엔(45.5%) 감소하였고, 총무성은 5,740억엔(3.1%)가량 감소
 - 소관의 대부분이 지난해에 비해 지출을 감소하였지만, 국회(130억엔, 15.2%), 내각(130억엔, 37.9%), 법무성(130억엔, 2.8%)의 지출은 소폭 증가

〈표 3-Ⅱ-4〉 일반회계 소관별 세출 현황 (2010년 12월말, 실적 기준)

(단위: 십억 엔)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대비 증감		FY2010 예산액
	12월	누계 (2008.4~ 2008.12)	12월	누계 (2009.4~ 2009.12)	12월	누계 (2010.4~ 2010.12)	누계 기준	%	
황실비	0.4	3	0.4	3	0.3	3	-0.3	-10.0	6
국회	20	90	17	88	17	102	13	15.2	164
재판소	57	233	50	224	46	225	1	0.7	337
회계검사원	2	12	3	12	3	12	0.1	0.8	18
내각	5	31	13	35	12	48	13	37.9	129
내각부	46	312	61	313	38	272	-42	-13.3	954
총무성	515	15,625	512	18,678	813	18,104	-574	-3.1	21,288
법무성	82	454	80	460	79	473	13	2.8	761
외무성	25	451	37	464	24	451	-14	-2.9	914
재무성	4,287	14,744	4,066	15,532	4,044	15,106	-426	-2.7	22,957
문부과학성	526	3,628	536	3,885	459	3,387	-499	-12.8	6,361
후생노동성	2,125	15,716	2,454	21,182	2,659	20,930	-252	-1.2	29,278
농림수산성	356	1,569	86	1,661	330	1,457	-204	-12.3	3,098
경제산업성	41	380	151	1,395	78	761	-635	-45.5	1,675
국토교통성	420	3,229	442	4,052	470	2,528	-1,524	-37.6	7,425
환경성	5	50	33	226	32	206	-20	-9.0	394
방위성	516	3,246	514	3,195	486	3,151	-45	-1.4	4,910
재정지출(합계)	9,028	59,774	9,054	71,405	9,591	67,663	-3,743	-5.2	100,669

자료: 일본 재무성, 국고세출입상황 - 헤세이 22년, 21년, 20년 각 연도 12월 말

- 특별회계 2010년 12월(누계) 기준 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6조 7,090억엔(2.4%) 감소하여 274조 1,070억엔을 기록
- 재정투융자 부문에서 지출이 전년 대비 약 11조 1,780억엔(41.5%)가량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
 - 이외에도 사회자본정비사업, 식량안정공급 부문에서의 지출이 지난해에 비해 각각 17.1%(4,010억엔), 14.2%(1,480억엔) 가량 감소
 - 일본의 고령사회 진전으로 연금지출은 지난해에 비해 2조 4,020억엔(4.0%)이 증가한 61조 9,170억엔의 규모를 보임

〈표 3-Ⅱ-5〉 특별회계 세출 현황 (2010년 12월말, 실적 기준)

(단위: 십억엔)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대비 증감		FY2010 예산액
	12월	누계 (2008.4~ 2008.12)	12월	누계 (2009.4~ 2009.12)	12월	누계 (2010.4~ 2010.12)	누계 기준	%	
교부세 및 양여세배부금	267	49,588	264	49,894	565	51,791	1,896	3.8	54,774
등기	20	97	17	97	19	95	-2	-2.3	163
지진재보험	0	0	0	0	0	0	0	3.8	73
국채정리기금	19,608	138,994	21,272	133,297	21,022	134,087	790	0.6	189,398
외국환자금	52	481	11	151	12	455	304	200.9	2,034
재정투융자 ¹⁾	4,814	27,125	6,693	26,948	4,198	15,770	-11,178	-41.5	36,246
에너지대책	48	1,873	68	1,870	40	1,774	-96	-5.1	2,464
국립고도전문의료센터 ²⁾	14	93	14	97					
노동보험	1,152	5,531	382	4,992	331	4,885	-107	-2.2	8,679
선원보험	6	39	14	48				0.0	
연금	10,002	57,248	10,384	59,516	11,076	61,917	2,402	4.0	78,966
식량안정공급	82	1,320	80	1,044	34	896	-148	-14.2	3,049
농업공제재보험	4	32	23	50	29	58	8	15.0	116
삼림보험	0	2	0	1	0	1	0	-9.7	5
국유임야사업	28	333	30	350	23	327	-23	-6.6	504
어선재보험과 어업공제보험	1	11	1	9	1	10	1	7.4	16
무역재보험	2	13	0	7	1	6	-2	-25.8	201
특허	10	67	10	68	10	67	-1	-1.6	120
사회자본정비사업	438	2,130	437	2,341	300	1,940	-401	-17.1	5,207
자동차안전	6	42	5	37	5	31	-6	-16.4	65
계	36,553	285,017	39,705	280,817	37,665	274,107	-6,709	-2.4	382,079

주: 1) 산업투자와 재정융자금이 2008년 재정투융자로 통합

2) 국립고도전문의료센터 및 선원보험 항목은 2010년부터 특별회계에서 제외

자료: 일본 재무성, 국고세출입상황 - 헤세이 22년, 21년, 20년 각 연도 12월 말

4. 국가채무 동향

- 2010년 12월 31일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약 919조엔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한 수준
- 국채의 경우, 작년에 비해 약 49조엔(6.9%)이 증가한 753조 8,080억엔 규모
 - － 정부채권이 50조 8,780억엔(8.8%)가량 증가하였고 이 중 장기채무 증가액이 약 30조 3,230억엔(8.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 재정투융자특별회계채권의 경우, 작년에 비해 약 2조 3,140억엔(1.9%) 감소
 - 차입금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약 1조 4,180억엔(2.5%) 감소한 약 55조엔 수준
 - 재정어음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5,550억엔(0.5%) 증가한 110조 2,870억엔 규모

〈표 3-Ⅱ-6〉 중앙정부채무 (12월 31일 기준)

(단위: 십억엔)

구분	2008	2009	2010	전년대비 증감	
	12월	12월	12월	증감액	%
국채	681,566	705,304	753,808	48,504	6.9
정부채권	545,454	577,278	628,156	50,878	8.8
장기(10년 이상)	358,772	369,015	399,337	30,323	8.2
중기(2~5년)	159,470	172,199	188,980	16,782	9.7
단기(1년 미만)	27,212	36,064	39,838	3,774	10.5
재정투융자특별회계채권	133,261	123,685	121,371	-2,314	-1.9
장기(10년 이상)	93,826	98,591	102,225	3,634	3.7
중기(2~5년)	39,435	25,094	19,146	-5,948	-23.7
교부채권(Subsidy bond)	525	446	367	-80	-17.8
출자채권 등	2,293	1,820	1,839	20	1.1
기타 채권 ¹⁾	32	2,075	2,075	0	0
차입금	56,247	56,475	55,056	-1,418	-2.5
장기(1년 초과)	21,073	21,411	20,042	-1,369	-6.4
단기(1년 이하)	35,174	35,064	35,014	-50	-0.1
재정어음(Financing Bills)	108,878	109,732	110,287	555	0.5
총계	846,691	871,510	919,151	47,641	5.5
정부보증채무	46,425	46,345	45,187	-1,158	-2.5

주: 1) 기타 채권의 경우 연도별로 상이함. 2008년은 석유채권승계채권, 2009, 2010년은 주식회사 일본정책투자은행 위기대응업무 채권과 일본고속도로 보유·채무상환계획 승계 채권의 합계수치임

1. 단위미만 반올림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상기 채권과 차입금은 국가가 보유한 채권과 국내 차입금을 포함함

자료: 일본 재무성, 국채 및 차입금 및 정부보증채무 현황 - 헤세이 20, 21, 22 각 연도 12.31 기준

Ⅲ

영국 (2010년 12월 기준, FY2010: 2010.4~2011.3)¹⁷⁾

1. 세입 및 세출 동향

- 2010.12.31 기준 공공부문의 순부채규모는 전년 대비 19.6% 증가한 8,891억파운드로, GDP의 59.3%를 기록
 - 금융시장에 대한 한시적 개입효과를 포함한 순부채는 2조 3,227억파운드로 GDP 대비 154.9%에 달함
 - 2009.12.31 기준 한시적 개입효과 포함 순부채는 2조 2,484억파운드(GDP의 157.9%)
- 2010.12월 공공부문 순차입규모는 168억파운드로 전년보다 약 42억파운드 감소
 - 금융시장의 한시적 개입효과를 포함한 순차입은 전년 동월보다 약 10억파운드 증가한 153억파운드 규모
- FY2010-11 4~12월까지 경상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943억파운드 기록
 - 2010.12월 경상재정적자는 135억파운드로 전년 동월에 비해 약 7억파운드 증가

〈표 3-Ⅲ-1〉 공공부문 재정현황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대비 증감	
	12월	4~12월	12월	4~12월	12월	4~12월	4~12월 누계기준	%
경상재정수지	-11.6	-46.4	-12.8	-96.8	-13.5	-94.3	2.5	-2.6
순차입	16.8	70.0	21.0	126.8	16.8	118.4	-8.4	-6.6
순부채	599.9		743.5		889.1		145.6	19.6
GDP 대비 순부채	42.5		52.2		59.3		7.1%p	

자료: 영국 재무부(HM Treasury), 'Public Sector Finances(2010.12)'; 통계청(ONS), Public Sector Finances 시계열 데이터(Last update, 2010.1.24)

17) 영국은 공공부문 재정통계에 스코틀랜드 왕립은행과 로이드 금융그룹을 완전히 포함시켰음. 이는 금융시장의 한시적 개입효과를 포함한 공공부문 순부채(PSND in.) 지표의 상당한 변화를 가져옴. 따라서 재정동향 1~4호에서 사용한 공공부문 순부채 자료와 직접 비교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SECTION 3 >>

□ 중앙정부의 FY2010-11 4~12월까지 경상재정적자는 971억파운드로 전년에 비해 7억파운드(0.7%) 증가

○ 전년 대비 재정수입 7.5%, 재정지출 6.0% 증가

○ 순투자규모는 전년에 비해 112억파운드(31.9%) 감소한 240억파운드를 기록

○ 순차입규모도 1,211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8.0% 감소

〈표 3-Ⅲ-2〉 중앙정부 재정현황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 대비 증감	
	12월	4~12월	12월	4~12월	12월	4~12월	4~12월 누계기준	%
재정수입¹⁾	37.1	361.2	37.8	336.0	39.3	361.2	25.2	7.5
생산물과세(VAT포함)	13.1	130.8	14.3	125.7	15.0	141.5	15.8	12.5
소득세 및 재산세	13.3	136.4	13.2	120.8	13.5	129.2	8.4	7.0
기타과세	0.9	9.6	1.0	9.1	1.0	9.7	0.6	6.3
사회보장기여금	8.3	71.1	8.2	68.9	8.5	70.1	1.2	1.7
이자 및 배당금	0.8	7.3	0.4	5.1	0.5	4.2	-0.9	-18.5
기타 재정수입	0.7	6.0	0.7	6.3	0.7	6.5	0.2	3.9
재정지출	45.5	402.5	49.3	427.3	51.9	452.9	25.6	6.0
이자	2.5	24.8	2.7	21.1	3.0	32.7	11.6	55.1
순사회복지급여	13.0	115.0	14.2	126.7	15.0	131.6	5.0	3.9
기타 재정지출	30.0	262.8	32.4	279.5	33.8	32.7	-246.8	-88.3
감가상각	-0.5	-4.9	-0.5	-5.1	-0.6	-5.4	-0.3	5.8
경상재정수지	-9.0	-46.2	-12.1	-96.4	-13.2	-97.1	-0.7	0.7
투자 ²⁾	6.0	29.6	9.2	40.3	4.7	29.4	-10.9	-27.1
less Depreciation	0.5	4.9	0.5	5.1	0.6	5.4	0.3	5.8
순투자	5.5	24.7	8.6	35.3	4.1	24.0	-11.2	-31.9
순차입	14.5	70.9	20.7	131.7	17.3	121.1	-10.6	-8.0

주: 1) 재정수입에 대한 정의는 영국 재무부에서 공표한 바를 따름(상속세 포함)

2) 투자 = 자본형성 + 토지순취득 + 순투자보조금 - 자본자산매각

투자 FY2007-08은 ONS에 항목 없음. '투자 = 순투자+less Depreciation'으로 산출.

자료: 영국 재무부(HM Treasury), 'Public Sector Finances(2010.12)'; 통계청(ONS), Public Sector Finances 시계열 데이터(Last update, 2010.1.24)

2. 세목별 세입동향

- 2010년 4~12월까지 중앙정부 재정수입은 전년에 비해 252억파운드(7.5%) 증가한 65억 파운드 기록
 - 전년 대비 법인세 증가율은 21.4%(59억파운드)로 가장 크고, 부가가치세 역시 14.7% 증가함
 - 유일하게 이자 및 배당금 수입만 감소 (전년 대비 9억파운드, 18.5%)

〈표 3-Ⅲ-3〉 중앙정부 재정수입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 대비 증감	
	12월	4~12월	12월	4~12월	12월	4~12월	4~12월 누계기준	%
생산물과세	13.1	130.8	14.3	125.7	15.0	141.5	15.8	12.5
부가가치세	6.4	67.8	6.9	60.7	7.5	69.6	8.9	14.7
소득세 및 재산세	13.3	136.4	13.2	120.8	13.5	129.2	8.4	7.0
소득세 ¹⁾	10.9	99.7	10.1	93.3	11.0	95.8	2.5	2.7
법인세 등 ²⁾	2.5	36.7	3.1	27.5	2.5	33.4	5.9	21.4
기타 과세(tax)	0.9	9.6	1.0	9.1	1.0	9.7	0.6	6.3
법정 사회보장기여금	8.3	71.1	8.2	68.9	8.5	70.1	1.2	1.7
이자 및 배당금	0.8	7.3	0.4	5.1	0.5	4.2	-0.9	-18.5
기타 재정수입(receipts)	0.7	6.0	0.7	6.3	0.7	6.5	0.2	3.9
재정수입	37.1	361.2	37.8	336.0	39.3	361.2	25.2	7.5

주: 1) 가구기준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법인의 소득세 및 자본이득세 포함

2) 주로 법인세와 석유세(petroleum revenue tax)임. 기타 소득세 포함

자료: 영국 재무부(HM Treasury), 'Public Sector Finances(2010.12)'; 통계청(ONS), Public Sector Finances 시계열 데이터(Last update, 2010.1.24)

3. 기능별 세출동향

- FY2010-11 4~12월 중앙정부 재정지출은 전년보다 6.0% 증가한 4,529억파운드 규모
- 사회복지급여 지출은 전년 대비 3.9%(50억파운드) 증가한 1,316억파운드
 - 이자지출 규모가 전년에 비해 55.1%(116억파운드) 크게 증가하여 327억파운드 기록

〈표 3-Ⅲ-4〉 중앙정부 재정지출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 대비 증감	
	12월	4~12월	12월	4~12월	12월	4~12월	4~12월 누계기준	%
이자	2.5	24.8	2.7	21.1	3.0	32.7	11.6	55.1
순사회복지급여	13.0	115.0	14.2	126.7	15.0	131.6	5.0	3.9
기타 재정지출	30.0	262.8	32.4	279.5	33.8	32.7	-246.8	-88.3
재정지출	45.5	402.5	49.3	427.3	51.9	452.9	25.6	6.0

자료: 영국 재무부(HM Treasury), 'Public Sector Finances(2010.12)'; 통계청(ONS), Public Sector Finances 시계열 데이터(Last update, 2010.1.24)

4. 국가채무 동향

- FY2010-11 4~12월까지 공공부문 순차입규모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1,054억파운드
 - 전년에 비해 중앙정부의 순차입규모는 106억파운드(8.0%) 감소하였으나, 지방정부의 순융자 규모는 22억파운드(302%) 증가
 - 공기업의 경우 비금융공기업은 3억파운드의 순차입을 기록하였고, 중앙은행과 금융공기업이 각각 1억파운드, 13억파운드의 순융자를 나타냄
- 2010년 12월 말, GDP 대비 공공부문 순부채규모는 전년에 비해 7.1%p 증가하여 59.3%로 상승

〈표 3-Ⅲ-5〉 공공부문 채무 현황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 대비 증감	
			12월	4~12월	12월	4~12월	12월	4~12월	4~12월 누계기준	%
경상재정수지			-11.6	-46.4	-12.8	-96.8	-13.5	-94.3	2.5	-2.6
순투자			5.2	23.6	8.1	30.0	3.2	24.1	-5.9	-19.7
순 차 입	정부 (A)	중앙정부	14.5	70.9	20.7	131.7	17.3	121.1	-10.6	-8.0
		지방정부	1.6	-0.4	0.6	-0.7	-0.7	-2.9	-2.2	301.9
		일반정부	16.0	70.5	21.3	130.9	16.6	118.2	-12.8	-9.7
	공 기 업 (B)	비금융공기업	0.8	-0.2	-0.3	-4.1	0.2	0.3	4.4	-107.2
		중앙은행	0.0	-0.3	0.0	-0.1	0.0	-0.1	0.0	-10.0
	한시적 금융개입효과 제외 공공부문순차입 (A+B)		16.8	70.0	21.0	126.8	16.8	118.4	-8.4	-6.6
	금융공기업(C)		-5.5	-15.6	-6.6	-22.7	-1.5	-13.0	9.6	-42.5
	공공부문순차입(A+B+C)		11.4	54.3	14.3	104.1	15.3	105.4	1.3	1.2
	순국가채무			599.9		743.5		889.1		145.6
GDP 대비 국가채무			42.5		52.2		59.3		7.1%p	

자료: 영국 재무부(HM Treasury), 'Public Sector Finances(2010.12)'; 통계청(ONS), Public Sector Finances 시계열 데이터(Last update, 2010.1.24)

IV

프랑스 (2010년 12월 기준, FY2010: 2010.1~2010.12)

1. 세입 및 세출 동향

-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재정수지는 1490억유로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7.7% 증가
- 일반회계 재정지출(누적)은 전년 대비 585억유로(15.9%)가 증가하였고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377억유로(15.9%) 증가하였으나, 지출증가액이 수입증가액보다 커서 재정수지는 악화
 - 특별회계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101억유로(124.2%) 2008년(누적) 대비 382.2%만큼 크게 개선됨

〈표 3-Ⅳ-1〉 중앙정부 재정수지

(단위: 십억유로(Md€))

구분	2008		2009 ²⁾		2010		전년대비 증감	
	12월 ¹⁾	누계 (1~12월)	12월 ¹⁾	누계 (1~12월)	12월 ¹⁾	누계 (1~12월)	누계 기준	%
일반회계 재정수지	0.0	-57.0	-3.2	-129.9	-9.7	-150.8	-20.9	16.1
재정지출 (대금상환 및 감세 제외)	0.0	348.1	37.4	367.1	43.0	425.7	58.5	15.9
재정수입 (대금상환 및 감세 별도)	0.0	291.1	34.2	237.2	33.3	274.9	37.7	15.9
특별회계 재정수지	0.3	0.7	-22.8	-8.1	1.5	2.0	10.1	-124.2
지방정부에 대한 선불	0.0	-0.458	6.4	-1.5	0.02	10.2	11.7	-802.1
재정수지	0.3	-56.3	3.5	-138.1	-8.1	-148.8	-10.7	7.7

주: 1) 12월 수치는 (12월 누계 - 11월 누계)로 산출. 단위 미만 반올림으로 합계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2009년 통계는 2008년 통계에서 세외수입으로 분류되었던 세입을 재분류하였음

자료: 재정경제부 월간보고서 La situation du budget de l'Etat, 2009~2011 각 연도 11, 12월

2. 세목별 세입동향

- 2010년 1월~12월까지 세수는 전년 대비 393억유로(18.4%) 증가한 2,536억유로를 기록
 -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종료 후 경기가 회복하면서 세입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
 - 2009년 기업지원을 위한 환급확대정책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2008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가 2010년 일정수준 회복
 - － 법인세는 2009년 12월(누적)에 비해 57.2% 크게 증가
 - － 부가가치세는 전년 대비 7.5% 증가
 - 기타 세수가 51억유로로 전년 대비 138.4% 증가하여 총재정수입은 15.9%증가한 2,749억유로를 기록

〈표 3-Ⅳ-2〉 중앙정부 재정수입

(단위: 십억유로(Md€))

구분	2008		2009		2010		전년 대비 증감		2010 전망치
	12월 ²⁾	누계 (1~12월)	12월 ²⁾	누계 (1~12월)	12월 ²⁾	누계 (1~12월)	누계기 준	%	
세수	29.6	265.1	28.2	214.3	30.5	253.6	39.3	18.4	255.0
소득세	2.9	51.7	1.8	46.7	1.9	47.4	0.8	1.7	47.8
법인세	10.1	49.2	10.9	20.9	11.1	32.9	12.0	57.2	34.9
TIPP ¹⁾	1.3	16.1	1.4	14.9	1.1	14.2	-0.7	-4.7	14.1
부가가치세	10.8	129.9	11.0	118.4	11.3	127.3	8.8	7.5	126.8
기타	4.5	18.3	3.0	13.3	5.1	31.8	18.5	138.4	31.3
세외수입	4.5	22.8	4.9	19.5	2.5	18.2	-1.3	-6.7	18.6
소계	34.1	287.9	33.1	233.7	33.0	271.8	38.0	16.3	273.6
기타 수입	0.3	3.2	1.1	3.5	0.3	3.1	-0.4	-10.8	3.1
총재정수입	34.5	291.1	34.2	237.2	33.3	274.9	37.7	15.9	276.7

주: 1)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내국세(Taxe intérieure sur les produits pétroliers; TIPP)

2) 12월 수치는 (12월 누계 - 11월 누계)로 산출. 단위 미만 반올림으로 합계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재정경제부 월간보고서 La situation du budget de l'Etat, 2008~2009 각 연도 11, 12월

3. 기능별 세출동향

- 2010년 1월~12월 세출은 전년 대비 4,180억유로(14.4%) 증가한 3,227억유로 수준
- 투자비가 25억유로(15.25%), 재정운용비용이 2억유로(24.2%)로 감소
 - 운용비와 국채이자 각각 490억유로(1.6%), 6억유로(7.6%)로 증가
- 보조금(Prélèvements sur recettes)에 사업소세 개편 보상금이 추가되면서 2010년 12월 (누적) 보조금은 1,029억유로로 전년 대비 35.1% 증가
- 2010년 1월부터 사업소세 개편에 따른 보상금으로 12월까지 324억유로 지급

〈표 3-Ⅳ-3〉 중앙정부 재정지출

(단위: 십억유로(Md€))

구 분	2008		2009		2010		전년대비 증감	
	12월 ³⁾	누계 (1~12월)	12월 ³⁾	누계 (1~12월)	12월 ³⁾	누계 (1~12월)	누계 기준	%
세출	25.5	278.2	31.2	290.9	44.3	332.7	41.8	14.4
예비비	0.0	1.0	0.0	1.0	0.0	1.0	0.0	0.1
인건비	10.5	119.6	9.6	119.2	9.8	117.8	-1.4	-1.2
운용비	4.7	34.8	5.9	43.1	4.9	43.8	0.7	1.6
국채이자	0.6	44.5	0.4	37.6	0.6	40.5	2.9	7.6
투자비	2.0	13.6	2.4	15.1	2.5	12.8	-2.3	-15.2
이전비 ¹⁾	7.7	64.4	12.8	74.3	10.5	73.9	-0.4	-0.5
재정운용비용	0.1	0.4	0.1	0.6	-0.2	0.4	-0.1	-24.2
미래투자프로그램 지출	- ²⁾	-	-	-	-	32.4	-	-
보조금(PSR)	6.8	69.9	6.3	76.2	8.7	102.9	26.7	35.1
지방정부보조금	4.2	51.2	4.5	56.2	4.1	52.9	-3.3	-5.9
사업소세 개편(폐지)에 따른 보상금	-	-	-	-	3.3	32.4	-	-
EU보조금	2.5	18.7	1.8	20.0	1.3	17.6	-2.4	-12.0
총재정지출	32.3	348.1	37.4	367.1	43.0	425.7	58.5	15.9

주: 1) 이전비(Dépenses d'intervention)에는 가계이전비, 기업이전비, 지방자치단체 이전비, 소송비용이 포함됨

2) -는 데이터 없음

3) 12월 수치는 (12월 누계 - 11월 누계)로 산출. 단위 미만 반올림으로 합계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재정경제부 월간보고서 La situation du budget de l'Etat 2008~2010 각 연도 11, 12월

4. 국가채무 동향

- 2010년 12월 말 기준 중앙정부 국채는 1조 2,290억유로로 전년 대비 7.1% 증가
 - 1년 미만 단기채권이 전년대비 270억유로(12.6%) 감소한 반면, OAT/Bons 등 장기채권은 970억유로(13.5%) 증가

〈표 3-Ⅳ-4〉 중앙정부 국채현황

(단위: 십억유로(Md€))

구분	2008	2009	2010	전년 대비 증감	
	2008.12.31.	2009.12.31.	2010.12.31.	증감액	%
중앙정부국채	1017	1,148	1,229	81	7.1
OAT/Bons : 장기채권(10-50년)	681	719	816	97	13.5
BTAN/Treasury Notes : 중기채권(2-5년)	198	215	226	11	5.1
BTF/Treasury Bills : 단기채권(1년 미만)	138	214	187	-27	-12.6
평균만기기간	6년292일	6년246일	7년68일		

자료: Agence France Trésor(채무담당기관)의 월간보고서(Monthly Bulletin) 2009~2011 각 연도 1월호

V

독일 (2010년 12월 기준, FY2010: 2010.1.1~2010.12.31)¹⁸⁾

1. 세입 및 세출 동향

- 연방예산의 2010년 잠정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28.4% 증가한 약 443억유로로 집계
- 2010년 예측치인 약 806억유로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적자규모를 기록하고 있음
 - － 휴대전화 라이선스 판매 수익을 비롯한 세입 증가와 노동시장정책 지출 및 이자 지출, 민간기업 보증 완화로 적자규모가 예측보다 감소
 -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0.6% 증가,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3.9% 증가

〈표 3-V-1〉 연방정부 재정

(단위: 십억유로, %)

구분	FY2008		FY2009		FY2010		전년 대비 증감 (누계기준)		FY2010 (추정)
	12월	누계 ¹⁾ (1~12월)	12월	누계 ¹⁾ (1~12월)	12월	누계 ¹⁾ (1~12월)	변동분	%	
재정지출	—	282.3	22.1	292.3	25.7	303.7	11.4	3.9	319.5
재정수입	—	270.5	34.6	257.7	41.8	259.3	1.6	0.6	238.9
세수	—	239.2	32.6	227.8	34.6	226.2	-1.6	-0.7	211.9
재정수지	—	-11.8	12.5	-34.5	16.2	-44.3	-9.8	28.4	-80.6

주: 1) 잠정치

자료: Abstract of the Federal Ministry of Finance's Monthly Report, 2008.12월, 2009.11~12월, 2010.11~12월

18) 2008년 11월 기준 월간통계 누락으로 2008년의 경우 누계치만 제시

2. 세목별 세입동향

- FY2010 12월까지 연방정부 총재정수입은 약 2,593억유로로 전년보다 약 16억유로 (0.6%) 증가, 예산 계획보다 약 204억유로 증가함
 - 12월(누계) 연방정부 조세수입은 약 2,262억유로로 전년 대비 0.7%(16억유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 예산보다 약 143억유로 증가된 것으로 집계
 - 12월(누계) 기타수입은 약 331억유로로 전년 대비 10.7%(32억유로) 증가

〈표 3-V-2〉 연방정부 재정수입

(단위: 백만유로, %)

구분	FY2008		FY2009		FY2010		전년 대비 증감 (누계기준)		FY2010 (예산)
	12월	누계 (1-12월)	12월	누계 (1-12월)	12월	누계 (1-12월)	변동분	%	
I. 조세수입	-	239,231	32,632	227,835	34,628	226,189	-1,646	-0.7	211,887
공동세:	-	193,532	24,359	180,223	25,806	181,502	1,279	0.7	171,884
소득세 및 법인세	-	96,379	15,637	83,779	16,945	84,355	576	0.7	73,391
소득세(근로소득원천징수분)	-	60,310	8,970	57,248	9,057	54,759	-2,489	-4.3	53,083
소득세(연말정산분)	-	13,899	3,761	11,233	3,942	13,252	2,019	18.0	10,179
소득세(분리과세분)	-	8,305	501	6,237	622	6,491	254	4.1	5,343
소득세(이자원천징수분)	-	5,922	343	5,475	311	3,832	-1,643	-30.0	5,060
법인세	-	7,943	2,063	3,587	3,013	6,021	2,434	67.9	3,595
부가가치세	-	95,806	8,513	95,400	8,568	95,860	460	0.5	97,274
수입부가가치세	-	1,348	209	1,044	294	1,287	243	23.3	1,219
에너지세	-	39,248	8,242	39,822	8,602	39,838	16	0.0	39,400
담배세	-	13,574	1,641	13,366	1,807	13,492	126	0.9	13,590
통일세(Solidarity surcharge)	-	13,146	1,824	11,927	1,953	11,713	-214	-1.8	10,950
보험세	-	10,478	783	10,548	457	10,284	-264	-2.5	10,450
전기세	-	6,261	520	6,278	540	6,171	-107	-1.7	6,350
자동차세	-	-	670	3,803	657	8,488	4,685	123.2	8,240
주세	-	2,129	209	2,103	199	1,993	-110	-5.2	2,082
커피세	-	1,008	99	997	94	1,002	5	0.5	1,010
추가 주정부 교부금	-	-14,850	-3,217	-13,462	-3,170	-12,880	582	-4.3	-12,694
GNP 연계 EU예산 출자금	-	-15,340	-1,709	-14,880	-1,635	-18,153	-3,273	22.0	-22,030
부가가치세 연계 EU예산 출자금	-	-3,738	-282	-2,017	-144	-1,836	181	-9.0	-1,930
단거리 대중교통을 위한 주정부 지원	-	-6,675	-564	-6,775	-573	-6,877	-102	1.5	-6,877
자동차세 및 HGV 통행료에 대한 주정부 보조금	-	-	0	-4,571	0	-8,992	-4,421	96.7	-8,992
II. 기타 수입	-	31,246	2,001	29,907	7,211	33,105	3,198	10.7	27,037
경제활동 수입	-	4,568	215	4,457	11	4,359	-98	-2.2	4,279
이자수입	-	737	36	574	68	385	-189	-32.9	395
차관수익 및 민영화 수입	-	8,630	144	3,836	246	4,403	567	14.8	4,147
총 재정수입	-	270,476	34,633	257,742	41,838	259,293	1,551	0.6	238,924

자료: Abstract of the Federal Ministry of Finance's Monthly Report, 2008.12월, 2009.11~12월, 2010.11~12월

3. 기능별 세출동향

- 2010.12월까지 연방정부 재정지출은 전년에 비해 114억유로(3.9%) 증가한 약 3,037억유로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 예산보다는 약 158억유로 감소
- 주거보조, 육아양육비 등 사회보장 및 전쟁관련 배상금 지출이 전년보다 약 157억유로(10.6%) 증가
- 이자지출을 포함한 금융지출이 전년보다 약 52억유로(13.1%) 감소

〈표 3-V-3〉 연방정부 기능별 재정지출

(단위: 백만유로, %)

구분	FY2008		FY2009		FY2010		전년 대비 증감 (누계기준)		FY2010 (추정)
	12월	누계 (1-12월)	12월	누계 (1-12월)	12월	누계 (1-12월)	변동분	%	
일반공공서비스	-	50,394	5,358	53,357	5,870	54,227	870	1.6	54,219
경제협력 및 개발	-	4,993	475	5,646	811	5,887	241	4.3	6,000
국방	-	29,999	3,114	31,320	3,059	31,707	387	1.2	31,188
연방행정	-	6,103	538	6,356	651	6,240	-116	-1.8	6,258
세무행정	-	3,307	353	3,662	359	3,727	65	1.8	3,944
교육, 과학, 연구 및 문화	-	13,437	2,180	14,960	2,265	14,896	-64	-0.4	15,402
연방 교육 및 훈련 보조	-	1,193	79	1,324	103	1,382	58	4.4	1,382
R&D	-	7,709	1,646	8,701	1,767	8,940	239	2.7	9,124
사회보장, 전쟁관련 배상금	-	140,439	7,748	147,716	11,254	163,431	15,715	10.6	173,074
사회보장	-	75,539	992	76,305	971	78,046	1,741	2.3	78,088
실업보험	-	7,583	3,142	7,777	-414	7,927	150	1.9	7,927
기초실업급여	-	34,776	3,168	36,011	2,974	35,920	-91	-0.3	38,311
·실업급여 II	-	21,624	1,740	22,374	1,625	22,246	-128	-0.6	23,900
실업급여 II, 주택 및 난방보조	-	3,889	288	3,515	268	3,235	-280	-8.0	3,400
주거보조	-	772	62	784	63	881	97	12.4	791
육아양육비	-	4,769	319	4,455	337	4,586	131	2.9	4,485
전쟁연금 및 대상자 복지	-	2,269	75	2,071	75	1,900	-171	-8.3	1,908
보건, 환경, 체육	-	1,058	313	1,251	248	1,255	4	0.3	1,414
주택, 지역개발 및 지역사회 서비스	-	1,607	373	1,808	501	2,114	306	16.9	2,034
주택	-	1,062	88	1,142	135	1,356	214	18.7	1,286
식품, 농업, 임업 및 에너지, 수자원 공급, 무역, 서비스	-	5,778	1,003	5,584	1,138	5,678	94	1.7	7,100
지역발전	-	945	340	966	210	811	-155	-16.0	684
석탄채굴	-	1,816	0	1,375	0	1,319	-56	-4.1	1,351
보존	-	698	150	601	214	805	204	33.9	2,050
교통, 통신	-	11,231	2,013	12,426	1,963	11,735	-691	-5.6	12,351
도로(지방운송재정법 제외)	-	6,045	1,420	6,925	1,323	6,341	-584	-8.4	6,335
영리기업, 부동산 일반 및 자본자산	-	16,991	1,676	15,740	1,688	16,073	333	2.1	16,374
연방 철도기금	-	4,326	589	5,333	596	5,223	-110	-2.1	5,330
구 독일연방철도/독일국영철도회사 (Deutsche Bahn AG)	-	3,864	647	4,154	724	4,304	150	3.6	4,328
금융 일반	-	41,374	1,425	39,412	727	34,249	-5,163	-13.1	37,532
이자지출	-	40,171	1,331	38,099	631	33,108	-4,991	-13.1	36,751
총 재정지출	-	282,308	22,067	292,253	25,653	303,658	11,405	3.9	319,500

자료: Abstract of the Federal Ministry of Finance's Monthly Report, 2008.12월, 2009.11~12월, 2010.11~12월

4. 국가채무 동향 (11월 말 기준)

- 2010.11.30 기준 연방정부 채무는 전년 대비 3.5%(378억유로) 증가한 약 1조 1,066억유로 기록
 - 전년에 비해 물가연동국채 110억유로(40.7%), 연방재무부중기채권 150억유로(12.0%), 특별연방채권 130억유로(7.6%) 증가
 - 연방채권 발행규모는 약 6,360억유로로 전년에 비해 약 255억유로(4.2%) 증가

〈표 3-V-4〉 연방정부 채무

(단위: 백만유로, %)

구분	'08.11.30	'09.11.30	'10.11.30	전년 대비 증감	
				변동분	%
물가연동국채(Index Linked Bonds)	22,000	27,000	38,000	11,000	40.7
연방채권(Federal bonds) ¹⁾	600,468	610,454	635,986	25,532	4.2
특별연방채권(Special federal bonds)	171,000	171,000	184,000	13,000	7.6
연방저축채권(Federal savings bonds)	9,568	9,424	8,768	-656	-7.0
연방재무부중기채권(Federal treasury notes)	115,000	125,000	140,000	15,000	12.0
재무부할인채권(Treasury discount paper)	38,502	109,504	83,835	-25,669	-23.4
연방재무부단기채권(Treasury financing paper) ²⁾	2,369	895	613	-282	-31.5
독일정부일일채권(German government day-bond)	3,034	2,577	2,025	-552	-21.4
Loans against borrowers' notes	13,315	12,825	12,391	-434	-3.4
Treuhand medium-term notes	153	51	51	0	0.0
Other intra-annual credit-market funds	-	-	898	-	-
합계	975,409	1,068,730	1,106,568	37,838	3.5

주: 1) 재정적자 보전용 장기국채, 10년 및 30년 만기

2) 1년 및 2년 만기 연방재무부중기채권

자료: Abstract of the Federal Ministry of Finance's Monthly Report, 2008.12월, 2009.12월, 2010.12월

VI

캐나다 (2010년 11월 기준, FY2010-11: 2010.4~2011.3)

1. 세입 및 세출 동향

- 2010년 4월부터 11월까지 재정적자는 약 260억캐나다달러(CAD)로, 전년동기 대비 약 103억달러(28.3%) 감소
- 경기부양책(Canada's Economic Action Plan)에 따른 적자는 70억CAD 이상으로, 총 재정적자액의 약 26.9%를 차지
 - 재정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7.7%(105억CAD) 증가한 1471억CAD으로, 이는 비거주자 소득세를 제외한 모든 수입이 증가한 데에 따른 결과
 - 프로그램지출은 이전지출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보다 0.31%(468백만CAD) 감소한 1526억CAD이며, 이자지출은 전년 대비 3.26%(647백만CAD) 증가한 205억CAD

〈표 3-VI-1〉 연방정부 재정

(단위: 백만CAD, %)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 대비 증감 (누계기준)	
	11월	누계 (4-11월)	11월	누계 (4-11월)	11월	누계 (4월-11월)	변동분	%
예산(발생주의)								
재정수입	18,873	153,897	16,802	136,633	19,395	147,100	10,467	7.66
재정지출								
프로그램 지출	-16,211	-132,253	-18,794	-153,073	-21,221	-152,605	468	-0.31
이자지출	-2,566	-21,605	-2,365	-19,863	-2,645	-20,510	-647	3.26
재정수지(a)	96	39	-4,357	-36,303	-4,471	-26,015	10,288	-28.34
예산외(b)	-12689	-46,468	62	-22,186	4,274	-15,030	7,156	-32.25
필요/잉여 재원규모(a+b=c)	-12,593	-42,429	4,143	-58,489	-197	-41,045	17,444	-29.82
순 재원조달 규모(d)	25,795	69,427	-214	38,510	9,783	30,811	-7,699	-19.99
순 현금수지 변화분(c+d)	13,202	22,998	3868	-19,979	9,586	-10,234	9,745	-48.78
기말 현금수지		34,244		25,053		15,391	-9,662	-38.57

자료: The Fiscal Monitor(Dept. of Finance), 2009.11월, 2010.11월

2. 세목별 세입동향

- 2010년 11월(누계) 재정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7.7%(105억CAD) 증가한 1471억CAD
- (소득세) 개인소득세(5.4%, 37억CAD) 및 법인세(12.9%, 16억CAD)의 증가분이 비거주자 소득세(1억CAD) 감소분보다 크게 나타나, 전체 소득세는 전년동기 대비 6.2%(53억CAD) 증가한 906억CAD 규모
 - 수입 관세는 미미하게 감소하였으나, 소비세(GST수입)이 큰폭으로 증가(231억 CAD, 14.1%)하여 총소비세는 전년동기 대비 14.8%(38억CAD) 증가한 294억CAD 규모
 - (고용보험료 및 기타) 고용보험료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5.1%(5억CAD) 증가하였고, 기타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2.2%(19억CAD) 증가

〈표 3-VI-2〉 연방정부 재정수입

(단위: 백만CAD, %)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대비 증감 11월	
	11월	누계 (4~11월)	11월	누계 (4~11월)	11월	누계 (4~11월)	변동분	%
조세수입								
소득세	12,421	99,522	10,226	85,349	11,720	90,602	5,253	6.2
개인소득세	9,388	75,503	8,368	69,588	9,585	73,318	3,730	5.4
법인세	2,311	20,133	1,476	12,722	1,747	14,363	1,641	12.9
비거주자	722	3,886	382	3,039	388	2,921	-118	0
소비세	3,730	28,199	4,068	25,580	3,901	29,378	3,798	14.8
GST (Goods and services tax)	2,536	18,637	2,957	16,399	2,691	18,711	2,312	14.1
에너지세	437	3,425	453	3,474	460	3,544	70	2.0
수입관세	292	2,732	230	2,350	309	2,335	-15	-0.6
기타소비세	465	3,405	428	3,357	441	3,788	431	12.8
조세수입 소계	16,151	127,721	14,294	110,929	15,621	118,980	8,051	7.3
고용보험료	769	10,036	787	10,086	802	10,597	511	5.1
기타 수입	1,953	16,140	1,721	15,618	2,972	17,523	1,905	12.2
총재정수입	18,873	153,897	16,802	136,633	19,395	147,100	10,467	7.7

자료: The Fiscal Monitor(Dept. of Finance), 2009.11월, 2010.11월

3. 기능별 세출동향

- 2010년 11월(누계기준)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0.1%(약1억 8천만CAD) 증가한 1,731억 CAD를 기록
 - (프로그램지출) 이전지출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0.3%(4억 7천만CAD) 감소한 1,526억CAD를 기록
 - －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은 노인급여 및 자녀수당의 증가분을 초과하는 고용보험급여의 감소분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0.2%(6,800만CAD) 감소
 - － 주요 정부간 이전지출은 보건 및 사회이전지출(CHT 및 CST) 등의 증가로 4.8%(16억CAD) 증가
 - － 지난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일회성 지원이 있었던 기타 이전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9.7%(24억CAD) 감소
 - － 기타 프로그램 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0.8%(4억CAD) 증가
 - (이자지출) 이자지출은 3.3%(65억CAD) 증가한 205억CAD를 기록

〈표 3-VI-3〉 연방정부 재정지출

(단위: 백만CAD, %)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대비 증감 (누계기준)	
	11월	누계 (4~11월)	11월	누계 (4~11월)	11월	누계 (4~11월)	변동분	%
이전지출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								
노인급여	2,839	21,942	2,902	22,977	3,007	23,603	626	2.7
고용보험급여	1,110	9,210	1,745	13,787	1,460	12,836	-951	-6.9
자녀수당	1,001	8,012	1,043	8,241	1,054	8,498	257	3.1
소계	4,950	39,164	5,690	45,005	5,521	44,937	-68	-0.2
주요 정부간 이전지출								
보건 및 기타 사회보장 지원								
CHT(Canada Health Transfer) 보건이전지출	1,887	15,087	2,064	16,508	2,182	17,341	833	5.0
CST(Canada Social Transfer) 사회이전지출	881	7,039	887	7,222	932	7,453	231	3.2
소계	2,768	22,126	2,951	23,730	3,114	24,974	1,244	5.2
재정이전	1,292	10,445	1,321	10,952	1,328	11,614	662	6.0
지역사회	116	830	705	1,662	744	1,602	-60	-3.6
Quebec주CHT,CST운영비 용대체지급 ¹⁾	-277	-1,952	-263	-1,877	-199	-1,905	-28	1.5
소계	3,899	31,449	4,714	34,467	4,987	36,105	1,638	4.8
기타 이전지출								
농업 및 농식품	240	1,073	265	1,124	170	1,168	44	3.9
외교·통상	246	1,833	146	1,712	135	1,923	211	12.3
보건	247	1,523	247	1,708	258	1,725	17	1.0
인적자원 및 사회개발	231	1,455	216	1,932	213	2,252	320	16.6
인디언 및 북부지역 개발	310	3,248	406	3,453	556	3,888	435	12.6
산업	140	1,345	132	1,502	377	1,915	413	27.5
기타	713	6,193	715	13,795	2,521	9,916	-3,879	-28.1
소계	2,127	16,670	2,127	25,226	4,230	22,787	-2,439	-9.7
이전지출 소계	10,976	87,283	12,531	104,698	14,738	103,829	-869	-0.8
기타 프로그램 지출								
국영기업	592	5,118	761	6,545	746	6,851	306	4.7
국방	1,510	12,069	1,683	12,742	1,858	12,440	-302	-2.4
부처별 사업비	3,133	27,783	3,819	29,088	3,879	29,485	397	1.4
기타 프로그램 지출 소계	5,235	44,970	6,263	48,375	6,483	48,776	401	0.8
총 프로그램 지출	16,211	132,253	18,794	153,073	21,221	152,605	-468	-0.3
이자지출	2,566	21,605	2,365	19,863	2,645	20,510	647	3.3
총 재정지출	18,777	153,858	21,159	172,936	23,866	173,115	179	0.1

주: 1) 다른 주정부와 다르게 Quebec주에서는 CHT와 CST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연방정부에서는 현금 대신 연방 개인소득세율을 경감시켜 주고 있으므로 마이너스 지출로 표기. 원명칭은 Alternative Payments for Standing Programs.

자료: The Fiscal Monitor(Dept. of Finance), 2009.11월, 2010.11월

4. 국가채무 동향¹⁹⁾

□ 2010.12.31 기준 연방정부의 비금융자산을 차감한 누적채무는 5,417억CAD로 전년 대비 8.3% 증가

○ 총부채는 9,027억CAD 작년 대비 5.9% 증가

– 시장성채권 및 이자부 부채가 각각 563억AD, 439억CAD 증가

○ 자산과 부채를 합한 순채무규모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6,047억CAD

〈표 3-VI-4〉 연방정부 채무

(단위: 백만CAD, %)

구분	08.11.30 (누계)	09.11.30 (누계)	10.11.30 (누계)	전년 대비 증감	
				변동분	%
부채					
미지급 부채 계정	105,169	98,865	105,317	6,452	6.5
이자부 부채					
만기 전 채무					
자국통화표시 채권					
시장성 채권	267,340	345,496	401,834	56,338	16.3
Treasury bills	170,636	189,675	174,749	-14,926	-7.9
Retail debt	12,104	12,120	10,291	-1,829	-15.1
기타	524	454	40	-414	-91.2
소계	450,604	547,745	586,914	39,169	7.2
외국통화표시 채권	9,139	6,641	7,754	1,113	16.8
이종통화 스왑 재평가 계정	1,979	-827	-4,332	-3,505	423.8
미상각 채권 할인액/할증액	-5,728	-5,132	-4,400	732	-14.3
자본리스와 관련한 채무	4,130	4,103	4,001	-102	-2.5
만기 전 채무 소계	460,124	552,530	589,937	37,407	6.8
연금 및 기타 채무					
공공부문 연금	139,042	142,267	145,000	2,733	1.9
기타 근로자 및 보훈급여	49,584	52,643	56,068	3,425	6.5
기타 채무	5,946	6,038	6,368	330	5.5
연금 및 기타 채무 소계	194,572	200,948	207,436	6,488	3.2
이자부 부채 소계	654,696	753,478	797,373	43,895	5.8
총부채	759,865	852,343	902,690	50,347	5.9
금융자산					
현금 및 미수금 계정	103,741	99,045	93,587	-5,458	-5.5
외국환 계정	48,567	47,221	46,354	-867	-1.8
차관, 투자 및 선금금(순 급여)	91,524	144,617	158,029	13,412	9.3
총금융자산	243,832	290,883	297,970	7,087	2.4
순채무	516,033	561,460	604,720	43,260	7.7
비재정자산	58,614	61,447	63,015	1,568	2.6
연방정부 채무(누적 적자)	457,419	500,013	541,705	41,692	8.3

자료: The Fiscal Monitor(Dept. of Finance), 2009.11월, 2010.11월

19) 캐나다 채무통계는 2010년 3월 이후 업데이트 되지 않았음

VII

호주 (2010년 12월 기준, FY2010-11: 2010.7~2011.6)

1. 세입 및 세출 동향

- 2010.7~2010.12월 예산적자는 약 367억호주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11.6%(38억호주달러) 증가
 - 재정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8%(25억호주달러) 증가하고, 재정지출은 8.7%(141억호주달러) 증가하여 재정지출 증가분이 수입 증가분보다 큼
 - － FY2010-11 연간 재정수입은 약 3,197억호주달러, 지출은 약 3,543억호주달러로 전망
- 미래기금(Future Fund) 수익금을 포함한 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45.2%(106억호주달러) 증가한 341억호주달러
- 2010년 12월(누계기준) 순채무는 766억호주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250.1% 증가

SECTION 3 >>

〈표 3-Ⅶ-1〉 일반정부 주요 재정현황

(단위: 백만호주달러, %)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 대비 증감		연간 전망치
	12월	누계 (7~12월)	12월	누계 (7~12월)	12월	누계 (7~12월)	누계 기준	%	FY2010-11
수입	22,077	146,321	21,043	141,874	22,931	144,414	2,540	1.8	319,682
지출	30,410	150,862	27,422	163,287	32,101	177,418	14,131	8.7	354,348
순운영수지	-8,333	-4,541	-6,380	-21,413	-9,171	-33,004	-11,591	54.1	-34,666
순자본투자	-26	953	265	2,109	240	1,141	-968	-45.9	7,254
재정수지 ¹⁾	-8,307	-5,494	-6,645	-23,522	-9,411	-34,145	-10,623	45.2	-41,920
예산수지²⁾	-10,186	-13,963	-8,761	-32,883	-8,045	-36,681	-3,798	11.6	-41,468
총자산	-9,084	266,785	-	308,445	-	315,156	6,711	2.2	316,787
총부채	631	211,575	-	306,517	-	388,841	82,324	26.9	380,148
순채무	10,878	-22,126	-	21,880	-	76,612	54,732	250.1	79,581

주: 1) 재정수지(fiscal balance) = 순운영수지(= 수입 - 지출) - 순자본투자 (발생주의 기준)

2)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 = 재정수지(순운영수지 - 순자본투자) - Future Fund 수익금

자료: 호주 재무부(Minister for Finance and Administration), 'Australian Government Monthly Financial Statement'
2008~2010년 각 연도 12월 보고서

2. 세목별 세입동향

- 2010.7~2010.12월까지 총재정수입은 조세수입의 증가로 전년 대비 1.8%(25억호주달러) 증가한 1,444억호주달러
- 소득세는 원천징수세 증가 및 환급금 감소 등 개인소득세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6%(66억호주달러) 증가한 926억호주달러를 기록
 - 간접세는 재화 및 서비스세(GST), 소비세 증가의 영향으로 5.0%(20억호주달러) 증가
 - 배당소득이 87%(58억호주달러) 크게 감소하여,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9.6%(60억호주달러) 감소

〈표 3-Ⅶ-2〉 일반정부 재정수입

(단위: 백만호주달러, %)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 대비 증감		연간 전망치
	12월	누계 (7~12월)	12월	누계 (7~12월)	12월	누계 (7~12월)	누계 기준	%	FY 2010-11
총재정수입	22,077	146,321	21,043	141,874	22,931	144,414	2,540	1.8	319,682
조세수입	20,156	134,882	19,709	126,607	21,900	135,193	8,586	6.8	299,419
소득세	14,007	95,889	13,565	86,002	15,344	92,574	6,572	7.6	214,500
개인소득세	9,605	55,437	10,267	53,985	11,467	60,099	6,114	11.3	138,360
원천징수	9,872	60,557	10,730	59,756	11,584	64,964	5,208	8.7	132,270
기타 개인소득세	872	11,431	870	13,148	1,031	13,386	238	1.8	30,440
환급	1,138	16,552	1,333	18,919	1,147	18,251	-668	-3.5	24,350
기타소득세	4,402	40,452	3,298	32,017	3,876	32,475	458	1.4	76,140
법인세	3,002	30,946	2,918	25,667	2,921	26,356	689	2.7	63,680
국민연금기금	1,392	6,602	330	3,919	883	4,094	175	4.5	7,330
석유세	-1	1,423	1	739	8	472	-267	-36.1	1,470
간접급여세	9	1,481	49	1,692	64	1,553	-139	-8.2	3,660
간접세	6,148	38,993	6,144	40,605	6,556	42,619	2,014	5.0	84,919
재화·서비스세(GST)¹⁾	2,261	21,882	2,859	22,722	2,859	23,793	1,071	4.7	49,130
소비세	2,447	11,976	2,379	12,663	2,491	13,063	400	3.2	25,300
관세	693	3,354	564	3,204	536	3,010	-194	-6.1	6,430
기타 간접세	747	1,781	233	1,429	551	2,152	723	50.6	2,749
세외수입²⁾	1,921	11,438	1,334	15,268	1,030	9,222	-6,046	-39.6	20,263
재화 및 서비스매출	471	2,784	588	3,726	629	3,862	136	3.7	7,987
이자	368	3,038	375	2,164	-164	1,745	-419	-19.4	5,074
배당소득	52	2,361	93	6,695	146	873	-5,822	-87.0	1,764
기타	1,030	3,255	278	2,683	419	2,742	59	2.2	5,438

주: 1) 재화·서비스세(Goods and Service Tax; GST) 항목은 FY2009년도에 신설되었으며, 이전에는 기타간접세(Other indirect tax)에 포함되어 있음

2) 세외수입 소계는 하위분류 값을 합산한. 단위 미만 반올림으로 합계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호주 재무부(Minister for Finance and Administration), 'Australian Government Monthly Financial Statement' 2008~2010년 각 연도 12월 보고서

3. 기능별 세출동향

□ 2010년 12월(누계) 총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8.7%(141억호주달러) 증가한 1,774억호주달러

○ 공공서비스, 교육, 사회보장 및 복지가 재정지출의 주된 요인임

－ 공공서비스(전년 대비 16억호주달러, 18.6%), 교육(전년 대비 26억호주달러, 15.3%), 사회보장 및 복지(전년 대비 46억호주달러, 8.2%) 증가

－ 이외에도 기타목적(전년 대비 47억호주달러, 16.7%)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정부간 이전은 전년 대비 31억호주달러(14.1%) 증가

○ 연료 및 에너지(14억호주달러, 32.7%), 주거 및 지역사회 개선(7억호주달러, 20.2%) 부문 등은 감소

〈표 3-Ⅶ-3〉 일반정부 기능별 지출²⁾

(단위: 백만호주달러, %)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 대비 증감		연간 전망치
	12월	누계 (7~12월)	12월	누계 (7~12월)	12월	누계 (7~12월)	누계 기준	%	FY2010-11
공공서비스	1,496	8,832	1,168	8,483	1,825	10,065	1,582	18.6	21,193
국방	1,344	9,015	1,588	9,583	1,513	9,642	59	0.6	21,086
공공질서 및 안전	161	1,107	413	1,787	308	1,811	24	1.3	3,924
교육	114	9,157	3,047	17,202	4,873	19,828	2,626	15.3	32,977
의료	4,001	23,554	4,343	25,617	4,490	27,142	1,525	6.0	57,435
사회보장 및 복지	17,960	58,713	9,479	56,282	10,545	60,899	4,617	8.2	115,699
주거 및 지역사회개선	298	1,677	627	3,376	625	2,694	-682	-20.2	5,830
여가 및 문화	175	1,028	260	1,392	310	1,445	53	3.8	3,312
연료 및 에너지	481	2,612	542	4,305	490	2,897	-1,408	-32.7	7,214
농업, 산림, 어업	123	904	209	1,287	186	1,160	-127	-9.9	3,685
광업	77	803	128	959	141	965	6	0.6	2,041
교통 및 통신	311	2,167	317	2,226	661	1,903	-323	-14.5	5,080
기타 경상비	480	2,815	360	2,683	703	4,159	1,476	55.0	8,927
기타 목적	3,389	28,478	4,942	28,106	5,432	32,807	4,701	16.7	65,946
공공채무 지급이자	197	1,741	523	2,815	796	4,359	1,544	54.8	9,132
연금 지급이자	525	3,148	554	3,326	584	3,505	179	5.4	6,989
정부간 이전	2,662	23,564	3,859	21,868	4,052	24,943	3,075	14.1	50,000
자연재해 구조비용	3	13	6	97	0	0	-97	-100.0	577
긴급예비비 ¹⁾	2	12	0	0	0	0	0	-	-752
총지출	30,410	150,862	27,422	163,287	32,101	177,418	14,131	8.7	354,348

주: 1) 긴급예비비(contingency reserve)에 자산매각 관련지출 포함

2) 단위미만 반올림으로 표의 수치합계와 총지출 값이 다를 수 있음

자료: 호주 재무부(Minister for Finance and Administration), 'Australian Government Monthly Financial Statement' 2008~2010년 각 연도 12월 보고서

4. 국가채무 동향

- 2010년 12월말 일반정부 순자산은 전년동기 대비 3920%(756억호주달러) 감소한 737억 호주달러 적자 기록
 - 자산은 67억호주달러(2.2%) 증가하였으나, 부채가 823억호주달러(26.9%) 증가하여 순자산 감소
 - － 부채 중 연금 등 의무지급금을 제외한 이자발생 부채규모는 1,931억호주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1.7%(568억호주달러) 증가
- 2010년 12월말 순채무 규모는 766억호주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50.1%(547억호주달러) 증가 (채무구조 악화)

〈표 3-Ⅶ-4〉 일반정부 채무 현황

(단위: 백만호주달러, %)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대비 증감		연간 전망치
	2008.12.31	2009.12.31	2010.12.31	증감액	%	2011.6.30
자산	266,785	308,445	315,156	6,711	2.2	316,787
금융자산	176,686	212,674	212,486	-188	-0.1	209,611
비금융자산	90,100	95,771	102,670	6,899	7.2	107,177
부채	211,575	306,517	388,841	82,324	26.9	380,148
이자발생부채	75,487	136,303	193,138	56,835	41.7	201,896
예치금	287	238	204	-34	-14.3	232
정부채권	67,394	123,420	181,711	58,291	47.2	191,137
차입	6,959	11,781	10,429	-1,352	-11.5	9,642
기타	848	865	795	-70	-8.1	885
의무지급금	136,087	170,214	195,702	25,488	15.0	178,252
순자산¹⁾	55,211	1,929	-73,685	-75,614	-3,919.9	-63,361
순금융자산 ²⁾	-34,889	-93,843	-176,355	-82,512	87.9	-170,538
순금융부채 ³⁾	55,797	120,491	202,162	81,671	67.8	195,306
순채무⁴⁾	-22,126	21,880	76,612	54,732	250.1	79,581

주: 1) 순자산(net worth) = 자산 - 부채

2) 순금융자산(net financial worth) = 금융자산 - 부채 (비금융자산 제외)

3) 순금융부채 = 부채 - 금융자산 + 금융자산 중 기타공공부문투자

4) 순채무 = (예치금 + 선수금 + 정부채권 차입 및 기타 차입) - (현금 및 예금 + 선지급 + 투자, 차입 등)

자료: 호주 재무부(Minister for Finance and Administration), 'Australian Government Monthly Financial Statement' 2008~2010년 각년도 12월 보고서